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67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연구기관명: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연구책임자:	김	광	선	연	구	위	원		
공동연구원:	채	종	현	전	문	연	구	원	
	윤	병	석	연	구	원			

요 약

1. 연구의 목적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부는 2011년 1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8개 부문의 31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공표되었는데, 각 기준 항목은 ‘삶의 질 향상계획’의 계획주기와 맞물려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업무위탁을 통해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각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기준 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매년 공통으로 추진하는 연차별 공통 추진 업무와 현안과 관련된 주제 또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차별 특별 추진 업무로 구분된다. 먼저, 2012년에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검통계를 통해 각 항목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또 이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로 전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또 부문별·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해

서는 공표통계와 관계부처 내부자료, 행정조사를 통한 자료 구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1.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비교

업무 구분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③ 클러스터 분석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 군·장흥군) 심층 분석 (4)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 계 조사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 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 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 별도의 자료집 발간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화연구의 하나로 농어촌 도로·교통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였다. 또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바로 수정·시행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 연차별 특별 추

진업무 중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전문가 원고 위탁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검토 등을 통해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2012년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로 국내외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별로 1가지 이상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총 2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 모범사례는 본 보고서에 담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자료집의 형태로 별도 발간할 예정이다.

3. 주요 연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2011년에 비해 이행 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행실태가 향상된 세부기준 수가 29개, 정체인 세부기준 수가 3개, 그리고 하락한 세부기준은 4개로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주거 부문의 세부기준 이행실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교육, 복지, 응급, 문화 부문에서 각각 1개의 세부기준 이행 정도가 하락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폐교 항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독서 항목,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 항목, 소방방재청 소관의 응급서비스 항목의 이행실태가 2011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들 일부 기준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별로 대부분의 소관 기준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다.

표 2.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비교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90%)	-	9/139	73.7	-	38/139	84.8
	난방	읍 도시가스보급률(50%)	36.2	27/137	16.8	44.7	33/136	22.3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여부)	1.1	140/140	1.2	1.5	139/139	1.5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82.7	89.2	51/138	89.3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28.7	28.4	20/138	33.2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49.2	56.1	28/139	53.6
	하수도	하수도보급률(71%)	73.2	46/140	59.2	74.1	51/139	62.0
2. 교통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82.4	3/140	80.9	90.4	1/139	90.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여부)	25.9	36/139	-	35.5	49/138	-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4	10/11	-	97.4	10/11	-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9.0	9/135	31.6	14.0	8/138	26.7
3.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100%)	6.7	0/136	5.8	8.9	0/136	8.1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100%)	-	-	-	97.8	75/79	95.8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유무)	85.7	120/140	1.1 (개소)	86.3	120/139	1.1 (개소)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7.8	70/71	98.9	95.7	74/79	98.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70%)	72.4	118/140	81.1	82.8	132/139	87.3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여부)	60.7	85/140	-	66.7	92/138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100%)	18.9	1/140	20.8	19.8	1/139	21.7
4.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여부)	79.4	108/136	-	78.3	108/138	-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0.2	0/140	0.2	6.7	8/138	9.4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99.6	99.6	133/139	99.4
5.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100%)	27.3	0/137	32.2	27.1	0/138	32.2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유무)	89.3	125/140	2.7 (개소)	91.4	127/139	2.8 (개소)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7.9	121/140	98.0	98.0	119/139	98.1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72.2	67.9	21/138	69.4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무)	78.6	110/140	-	94.2	131/139	-
		방문서비스 제공(여부)	90.9	100/110	-	99.3	138/139	-
6.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8	125/140	99.6	99.5	95/139	99.3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51.4	59/138	52.4	52.3	59/139	53.9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11.5	20.2	0/138	21.8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5.0	0/48	11.2	7.2	0/48	16.2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139/139	-	100.0	139/139	-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7.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52.2	16/140	54.2	43.2	4/139	45.2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유무)	42.1	59/140	-	47.1	65/138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유무)	98.6	138/140	1.8 (개소)	98.6	137/139	1.9 (개소)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가능(여부)	46.1	53/115	3.7(회)	55.4	77/139	3.2(회)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 가능(여부)	70.0	98/140	13.5(회)	75.5	105/139	15.9(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100%)	14.0	2/137	16.4	30.2	18/138	33.5
8. 정보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99.7 (67.9)	-	58.7	99.7 (67.5)	-	57.2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87.0 (61.5)	7/140	50.3	87.0 (61.2)	3/139	48.9

주: 다음과 같은 5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비교에서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계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한편, 본 연구는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역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19)에 시행을 고려할 중·장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동 중·장기 개정안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검토와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2013년에 시행할 농어촌서비스기준 최종 수정안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은 현행 8개 부문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현행 기준 항목의 일부를 부문 간 조정하여 '안전' 부문을 신설하고 이에 '경찰순찰', '방범설비'(현행 CCTV), '경찰출동'(현행 경찰서비스) 항목을 포함시켰다. 동 수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3.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부문	항목	세부내용
주거 (5)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3)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보행안전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에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보도(歩道)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확보한다.
교육 (6)	가.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3)	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 가능하다.
	나.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복지 (5)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3)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안전 (3)	가.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나. 방범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다. 경찰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3)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 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ABSTRACT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The Rural Services Standard is a set of national servic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o set the types of public services and their quality levels required for rural residents to lead daily lives. Every year since 2011 when the standard was enforced in earnes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has been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a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Under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services standard.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how the rural services standard was implemented in 2012 consists mostly of two parts. The first part covers the implementation of common rural services that are implemented annuall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is examined and evaluated using the examined statistics and the implementation index used for 2011. The second part, on the other hand, covers the implementation of annual special services, and it consists of an extensive research into rural roads and transportation and a plan to improve the rural services standard.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results of how well the rural services standard were implemented in 2012 show an overall improvement compared to 2011. Specifically, the number of rural services standard that were better implemented stands at 29, whereas three remained stagnant and four deteriorated. The housing standards showed an overall improvement, whereas one case of worse standard implementation could be seen in each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education, welfare, emergency, and culture.

The current state of implementing rural services standard was examined for each government ministry, and the results showed that it deteriorated in the following fields: closing down of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ading promo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fant c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emergency servic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But, with the exception of the above service standards, most service standards were implemented better than the ones in the previous year.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suitability and achievability of the current services standard,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satisfaction level of rural residents and

policy dem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Committee and the Rural Services Standard Council, a final revision plan is set up for the services standard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2013. In the revised plan, the current service standard are reconstructed to consist of 32 service types in 9 categories from the current 31 service types in 8 categories. A new category of 'safety' is added to the standard along with the three service types of 'police patrol', 'crime prevention equipment (currently 'theft prevention'), and 'police dispatch (currently police service)'.

Researchers: Kwang-Sun Kim, Jong-Hyun Chae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2.5 ~ 2012.12

E-mail Address: yesks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1
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주요 결과 8
3.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향 18

제2장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의 개요 21
2.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25
3. 이행실태 경과: 2011~2012년 84
4. 소결: 시사점 및 개선 방향 96

제3장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1. 이행실태 평가 개요 99
2. 2012년 이행실태 평가 결과 111
3. 핵심 기준의 이행실태 평가 130
4. 소결: 정책적 시사점 137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향

1.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141
2.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151
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176

제5장 농어촌 공공서비스 부문별 집중 분석: 도로·교통 부문

1. 농어촌 도로·교통 운영 실태 분석의 개요 183
2. 농어촌 도로·교통 이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184
3. 농어촌 대중교통 공급·이용 실태: 충청남도 사례 194
4. 선진국의 대중교통 정책 동향과 준공공 교통 서비스 사례 201

제6장 이행실태 종합평가와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종합평가 221
2.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주요 정책 개선 방향 227
3.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231

- 부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별 통계 기반 구축 현황 239
2. 최저주거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안 244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247
 4.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260
 5.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 269
 6.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등에 대한 조사 273
 7.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조사 283
 8. 농어촌 주민의 도로 및 대중교통 이용실태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 289

- 참고 문헌 297

표 차 례

제1장

표 1-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	4
표 1- 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0
표 1- 3.	부문별 정책 제안	14
표 1- 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독려 방안	15
표 1- 5.	향후 제도 운영 방안	16
표 1- 6.	농어촌서비스기준 보완 사항	17
표 1- 7.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비교 ...	19

제2장

표 2-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24
표 2- 2.	주거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27
표 2- 3.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10년 기준)	29
표 2- 4.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05년 기준)	29
표 2- 5.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31
표 2- 6.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태	32
표 2- 7.	마을공동시설 유지비 지원 이행실태	33
표 2- 8.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이행실태	34
표 2- 9.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35
표 2-10.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36
표 2-11.	교통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37
표 2-12.	대중교통 이행실태	39
표 2-13.	준공공교통 이행실태	40

표 2-14.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인도 구분 이행실태	42
표 2-15.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43
표 2-16.	적정규모학교 육성 이행실태	44
표 2-17.	폐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45
표 2-18.	시·군별 우수고등학교 이행실태	46
표 2-19.	폐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행실태	48
표 2-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이행실태	49
표 2-21.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실태	50
표 2-22.	평생교육 시설 이행실태	51
표 2-23.	보건의료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52
표 2-24.	주요 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53
표 2-25.	주요 과목별 이행실태	53
표 2-26.	순회방문진료 이행실태	54
표 2-27.	오지마을 순회방문진료 이행실태	55
표 2-28.	의약품 구입 가능 이행실태	56
표 2-29.	복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57
표 2-30.	취약계층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행실태	59
표 2-3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이행실태	60
표 2-32.	읍·면별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이행실태	61
표 2-33.	읍·면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63
표 2-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행실태	64
표 2-3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이행실태	65
표 2-36.	응급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66
표 2-37.	구급차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67
표 2-38.	해양경찰서 환자 이송체계 이행실태	68
표 2-39.	119 EMS구급헬기 운영 이행실태	69
표 2-40.	소방차 소방서비스 이행실태	70
표 2-41.	주요 간선도로 및 진입로 CCTV 설치 이행실태	71

표 2-42.	항포구 CCTV 설치 이행실태	72
표 2-43.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74
표 2-44.	읍·면별 도서관 이행실태	75
표 2-45.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운영 이행실태	77
표 2-46.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이행실태	78
표 2-47.	분기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이행실태	79
표 2-48.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행실태	80
표 2-49.	정보통신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81
표 2-50.	인터넷 가입률 이행실태	82
표 2-51.	광대역통합망 가입률 이행실태	84
표 2-52.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비교	88
표 2-53.	달성률 향상/하락 여부	91
표 2-5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시·도별 달성률 비교	93

제3장

표 3- 1.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	102
표 3- 2.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가중치	105
표 3- 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가중치	107
표 3- 4.	2011년과 2012년의 부문별 이행지수	112
표 3- 5.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이행지수	115
표 3- 6.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 비교	128
표 3- 7.	농어촌서비스기준 10개 핵심기준	132
표 3- 8.	농어촌서비스기준별 중요성에 대한 정책담당자 조사 결과 ...	133
표 3- 9.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	135

제4장

표 4-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적합성 검토 등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2
표 4- 2.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평가 결과	144

표 4- 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평가 결과	146
표 4-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	148
표 4- 5.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	150
표 4- 6.	공공서비스 만족도 설문 응답 현황	152
표 4- 7.	주택에 대한 불만족 사항	153
표 4- 8.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사용 난방시설	154
표 4- 9.	농어촌 주민의 희망 난방시설	155
표 4-10.	겨울철 집중 난방기간	156
표 4-11.	겨울철 집중 난방기간 소요 난방비	156
표 4-12.	농어촌 주민의 상수도 이용 실태	157
표 4-13.	교통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159
표 4-14.	교육서비스 관련 불만족 사항	161
표 4-15.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 위치	162
표 4-16.	병원 이용 시 불만족 사항	163
표 4-17.	복지서비스 집중 대상	164
표 4-18.	응급환자 응급조치에 대한 불만족 사항	165
표 4-19.	화재 발생 시 소방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	166
표 4-20.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	167
표 4-21.	문화여가 활동 시 애로사항	169
표 4-22.	초고속인터넷 사용 실태	170
표 4-23.	지역별 가장 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71
표 4-24.	지역 유형별 가장 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72
표 4-25.	지역별 가장 불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73
표 4-26.	지역 유형별 가장 불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74
표 4-27.	지역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75
표 4-28.	지역 유형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76
표 4-29.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방안 ...	178

제5장

표 5- 1.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농어촌 도로	185
표 5- 2.	마을 내 도로 이용 여건	187
표 5- 3.	농도·리도·면도의 이용 여건	188
표 5- 4.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의 이용 여건	189
표 5- 5.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주요 목적	190
표 5- 6.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191
표 5- 7.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애로점	192
표 5- 8.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관련 정책 수요	193
표 5- 9.	농어촌 대중교통 규모에 대한 수요	194
표 5-10.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버스노선 현황	195
표 5-11.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버스 수송인원 추이	196
표 5-12.	농어촌지역 버스 운수업체 운송수지 현황	197
표 5-13.	농어촌 주민의 연간 버스 이용 일수	198
표 5-14.	농어촌 주민의 버스 이용 목적	198
표 5-15.	버스 정류장까지의 보행 시간	199
표 5-16.	버스 이용 시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불만	199
표 5-17.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	200
표 5-18.	선진국의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및 준공공 교통 서비스 ...	203

제6장

표 6- 1.	달성률 향상/하락 여부	222
표 6- 2.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기준 이행실태 ..	225
표 6- 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관련 사업 예산 투입 현황	226
표 6- 4.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234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 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수 분포 .. 12

제3장

- 그림 3-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위한 지수 구성 100
 그림 3- 2. 2011년과 2012년의 부문별 이행지수 비교 113
 그림 3- 3. 군과 도농복합시의 부문별 이행지수 비교 115
 그림 3- 4. 주거 부문 이행지수 분포 117
 그림 3- 5. 교통 부문 이행지수 분포 119
 그림 3- 6. 교육 부문 이행지수 분포 120
 그림 3- 7.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 분포 122
 그림 3- 8. 복지 부문 이행지수 분포 123
 그림 3- 9. 응급 부문 이행지수 분포 125
 그림 3-10. 문화 부문 이행지수 분포 126
 그림 3-11.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분포 127
 그림 3-12. 종합 이행지수 분포 130
 그림 3-13. 핵심 이행지수와 종합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 비교 136

제5장

- 그림 5- 1. 현실에서의 농어촌 도로 186
 그림 5- 2.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의 유형 204
 그림 5- 3. 아산시 한정면허 마중버스의 등교버스 운행 노선 210
 그림 5- 4. 아산시 농촌형 순환버스의 외관(좌)과 내부 211

그림 5- 5. 아산시 선장면의 기존 버스노선(좌)과 농촌형 순환버스의 노선 ..	212
그림 5- 6. 아일랜드의 지역별 RTP그룹과 KCT 지역	216
그림 5- 7. RTP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	218
그림 5- 8. KCT 커뮤니티버스 이용자 증가 현황	219

제 1 장

서 론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제도화 현황

- 농어촌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농어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분산 분포로 인해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공공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서 모두 상당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공급에 있어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존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이 무시되거나 수요자 관점 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 이로 인해 범부처적인 막대한 정책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여전히 공공서비스 공급의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 역시 정부의 투자로 인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도시에 살든 농어촌에 살든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학술적 개념).
 - 모듬살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결합한 ① 주거 부문; 사회적 소통과 물자의 이동을 통해 삶을 지원하는 ② 교통 부문; 삶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③ 보건의료 부문, ④ 복지 부문, ⑤ 응급 부문;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⑥ 교육 부문과 ⑦ 문화 부문; 그리고 이들 서비스 전달의 대안적 수단을 제공하는 ⑧ 정보통신 부문의 8대 부문이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서비스 분야로 인식되었다.
-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 명의로 고시하였다.
 - 2009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지역별 공청회, 국회 토론회, 영국 및 독일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8대 부문 31개 기준 항목을 도출하였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있다(법적 개념).
 -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동 법을 시행하면서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세부 내용’을 농

림수산물식품부 고시로 발표하였다(표 1-1 참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목적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있다.
 - 이를 위해 동 법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시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근거로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달성해야 할 계획 목표로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와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자문기구이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달성 정도의 평가 등에 대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자문에 응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제5항과 제46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근거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12년 4월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및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부문	항목	세부 내용
1. 주거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2. 교통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4. 보건 의료	가.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나.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5. 복지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부문	항목	세부 내용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응급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라.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마.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7. 문화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8. 정보 통신	가.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5호.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계획 체계 내에서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 목표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라 할 수 있다.

-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목표 달성 연도 등을 포함한) 운용 주기 역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그 법적 근거의 마련과 운용을 위한 삶의 질 향상 계획 체계 내 수용에도 불구하고 그 달성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노력·권고 사항이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나 지자체계획의 경우는 해당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제시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또는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정부 및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 둘째, 달성해야 할 객관적 목표와 현 실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셋째,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각 농어촌 지자체가 해

당 지역의 실태를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비교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그 수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함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다섯째, (삶의 질 향상계획과 관련해 한정하면) 삶의 질 향상의 평가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신규 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2011년의 경우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제5항에 의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동 법 제46조 등에 의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주요 결과

2.1. 2011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요 내용과 방법

- 2011년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째, 이행실태 점검통계를 구축하여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다시 43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50개의 통계를 구축하여 각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 점검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표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통계가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내부 자료를 구득하거나 농어촌 시·군 지자체 대상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통계를 구축하였다.

- 공표통계는 원칙적으로 2010년 기준 통계를 활용하되 2010년 기준 통계가 미 공표된 경우 2009년 기준 통계를 활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 협조 자료는 2011년 9월 시점에서 구득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구득하였으며, 지자체 행정조사는 2011년 9월에 실시하였다.
-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를 개발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였다.
 - 이행지수는 종합 이행지수와 부문별 이행지수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와 부문별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문 간, 지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31개 기준 항목 중 농어촌에 보다 중요한 10개의 핵심기준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행실태를 별도의 핵심 이행지수로 평가하였다.
-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여 농어촌지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을 제시하였다.
 - 농어촌을 공공 서비스형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지역, 민간 서비스형 지역, 하드웨어 서비스형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서비스 공급 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제시하였다.
- 넷째, 삶의 질 향상계획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14)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2011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시·도계획에 대한 내용 분석은 충청남도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시·군계획에 대한 분석은 사례지역(화천군·장흥군)에 대한 조사·분석 시 함께 수행하였다.
- 다섯째, 강원도 화천군, 전라남도 장흥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 삶의 질 향상계획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별 관련 사업의 예산 투입 현황을 검토하여 각 지자체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나 정책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화천군의 화천읍과 간동면, 장흥군의 대덕읍과 장평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 터전인 읍·면 단위에서의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2.2. 2011 이행실태 점검·평가 주요 결과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로 달성률을 보면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 70% 이상’, ‘112 신고 시 10분 이내 출동’ 목표치는 이미 달성되었다.
 -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 방과후 돌봄교실 도달’, ‘구급차 30분 내 도착’,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 도달’ 역시 달성률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 그러나 전체 시·군 수 대비 기준 달성 시·군 수로 나타낸 ‘달성 시·군 비율’은 이들 기준 대부분이 여전히 많은 시·군에서 달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달성률이 특히 낮은 기준 항목(세부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을별 월1회 전문의료인력 순회방문’ 등으로 나타났다.
 - ‘마을별 월1회 전문의료인력 순회방문’ 기준은 현재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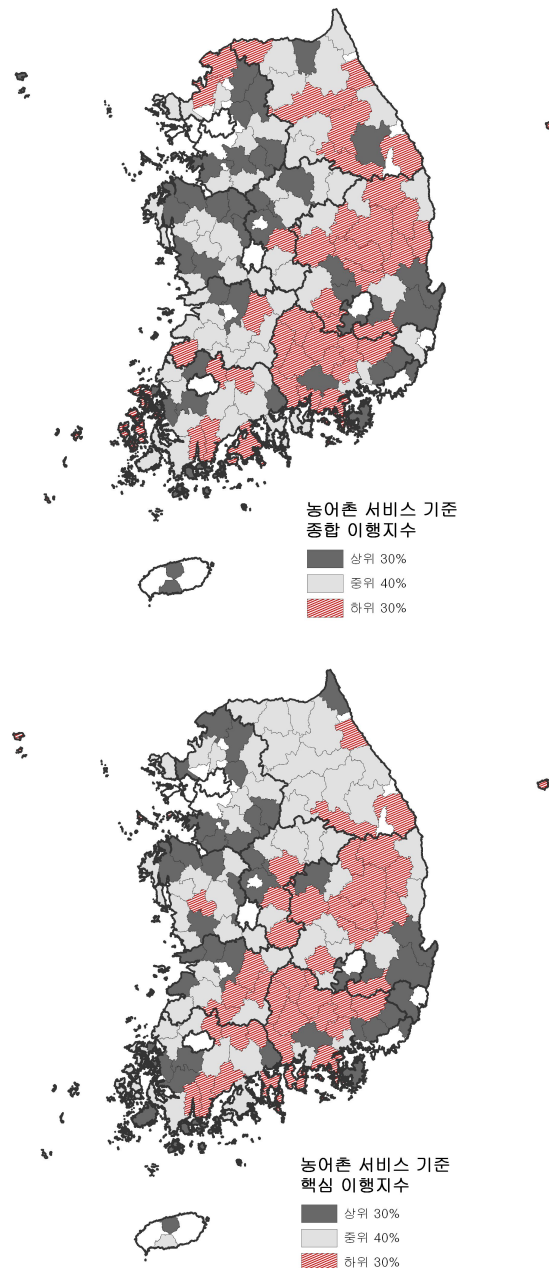
표 1-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달성률	기준 달성 시·군 수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90%)	76.0%	16/140
	난방	읍 도시가스보급률(50%)	36.2%	27/137
		신재생에너지 보급(100%)	0.6%	140/140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2. 교통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82.4%	3/140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100%)	25.9%	36/139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4%	10/11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9.0%	9/135
3.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100%)	6.7%	0/136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100%)	85.7%	120/140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7.8%	70/7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70%)	72.4%	118/140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100%)	60.7%	85/140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100%)	18.9%	1/140
4.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중요과목 의사 진료(100%)	79.4%	108/136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0.2%	0/140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5.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100%)	27.3%	0/137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100%)	89.3%	125/140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7.9%	121/140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100%)	78.6%	110/140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100%)	90.9%	100/110
6.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8%	125/140
	도서·벽지에 대한	낙도·벽지 헬기·선박 이용 환자 이송체계(100%)	-	-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달성률	기준 달성 시·군 수
	응급서비스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비율 55%(100%)	51.4%	59/138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100%)	100.0%	139/139
7.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52.2%	16/140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100%)	42.1%	59/14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100%)	98.6%	138/140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100%)	46.1%	53/115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100%)	70.0%	98/140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100%)	14.0%	2/137
8. 정보 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99.7% (67.9%)	-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61.5%	7/140

- 종합 이행지수 값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다. 종합 이행지수 상위 30% 지역(42곳)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과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정도를 종합한 종합 이행지수의 값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정선군, 계룡시, 아산시, 연기군, 이천시, 달성군, 보령시, 남양주시, 경산시, 진천군 등이다. 10개 시·군 중 6개 지역이 도농복합시이고 4개 지역은 군 지역이다.
- 종합 이행지수 값이 낮은 하위 30% 지역(42곳)은 대부분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도 등 수도권 인근에는 하위 30%에 속하는 지역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전라도 지역도 경상도와 강원도에 비해 하위 30%지역의 수가 적다.
 - 종합 이행지수 하위 10개 농어촌 지역은 하동군, 의령군, 철원군, 성주군, 의성군, 함천군, 함안군, 산청군, 울릉군, 거창군 등이다. 대부분 군 지역이며, 전형적인 농어촌 오지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들이다.

그림 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수 분포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개의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기준)을 선정하였다.
 - 주거 부문 3개 항목(주택, 난방, 상수도), 교통 부문 1개 항목(대중교통), 교육 부문 2개 항목(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보건의료 부문 1개 항목(진료서비스), 복지 부문 2개 항목(아동, 영유아), 응급 부문 1개 항목(응급 서비스)이 선정되었다.
 - 문화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의 항목들은 핵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 핵심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핵심 이행지수 상위 30% 시·군들은 주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 이행지수의 분포와 비교할 때 수도권에의 상위권 지역 집중이 다소 완화되었다. 대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로의 집중이 보다 강화되었다.
 - 핵심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시·군은 연기군, 이천시, 진주시, 김해시, 기장군, 서산시, 아산시, 청원군, 경주시, 달성군 등이다.

2.3. 2011 주요 정책 제안

-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표 1-3>과 같이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부문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주거 부문과 관련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 정책과 빈집 개량 정책을 혼합하는 전략을,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난방비 절감 방안 마련을 보다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교통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체계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농어촌 도로 위험구간 및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인도 우선 설치를 제안

하였다.

-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만이 능사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소규모학교 역시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유희시설을 활용한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거점 마련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1차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농어촌 의료생협을 육성하고, 오지마을 중심의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순회방문을 집중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복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에 방문간호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3. 부문별 정책 제안

부문	주요 정책 제안
주거	- 공동주택의 신규 건설과 농어촌 빈집 개량 전략의 혼합 추진 - 도시가스 공급계획 미수립 농어촌 시·군에 난방비 절감 방안 마련
교통	- 다양한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및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의 개발과 보급 - 농어촌 도로 위험구간(사고다발구간)에 대한 인도 우선 설치 지원
교육	- 지역화·다양화·특성화에 의한 농어촌학교 육성과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복수학교 공동 운영, 학교클러스터 구축 등) - 기존의 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한 주민 평생교육 거점 마련과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주부, 또는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보건의료	- 1차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의료생협 육성 - 오지마을 중심의 의료 취약지역 선정과 순회방문 집중 지원
복지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준 이행 촉진 위해 취약지역에 방문간호기관 및 요양보호사 육성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표 1-4).

- 첫째, 영국의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과 같이 중앙-지방 간 협약제도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둘째, 삶의 질 향상계획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계획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행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의 노력인 만큼,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타 지역에서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고무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항목별 이행실태가 특히 저조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수가 모두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독려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 영국의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과 같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약제도를 체결하고 그 이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삶의 질 향상계획 보완	- 특히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 지자체 역시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보완을 통해 자체의 서비스기준 추진 및 달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발굴·확산	-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항목별 이행지수가 특히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관련 정책 우선 추진 -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항목별로 관련된 모범사례 지속적 발굴, 제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저위(低位) 지역 지원 강화	-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수가 모두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 도입 - 대상 지역에 영국의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과 같은 제도 추진

-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 조직적 대응을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 심층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또는 항목별로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표 1-5. 향후 제도 운영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실 국무차장이나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삶의 질 향상 기획단’ 설치·운영 -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획단의 설치·조직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
삶의 질 향상 정책 연구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삶의 질 향상 정책 연구지원센터’를 전문연구기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
분야별 심층 조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분야별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

- 2011년도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한 첫 해이므로 기준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역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자체의 개선은 <표 1-6>과 같이 기준의 조정, 점검 주기의 조정, 지자체의 자율적인 기준 설정 유도, 불명확한 기준의 명료화, 이행실태 점검 내용에 대한 보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6. 농어촌서비스기준 보완 사항

구 분	기준 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개선 방향
기준 조정	순회방문	서비스 공급 대상을 전체 마을에서 오지마을로 조정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응급서비스 기준 항목의 세부기준으로 편입
	유치원/초·중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역화·다양화·특성화에 의한 농어촌 학교육성’이라는 기준으로 전환
점검 주기 조정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관련 통계의 조사 공표 주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이행실태 점검
	대중교통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통해 5년 주기로 조사되거나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년마다 행정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실태 점검
자율 설정 유도	인도설치	지자체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구간(사고 다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기준의 자율 설정 유도
	난방	도시가스 보급계획 미수립 지자체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준으로 자율적 대체 가능토록 조치
기준 명료화	방과후학교	교과부에서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산정기준 제공 필요 * 현재는 참여 프로그램의 수나 참여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실태 점검
	유치원/초·중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는 기준내용을 ‘학생들의 이동시간 상한도’ 함께 고려하도록 구체화
이행 실태 점검 보완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점검 필요(2012년 이행실태 점검 시 시행)
	경찰서비스	행정리별 112 신고 후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 통계 구축 필요(현재는 시·군 단위 통계 구축)
	초고속망	행정리별 인터넷 초고속망 및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통계 필요(현재는 가입자 수 통계 활용)

3.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향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거법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체계 내에서 시행하도록 제도화되었지만 그 이행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이행실태 점검·평가 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는데, ①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종합·부문별 이행지수, 핵심 이행지수)를 활용한 이행실태 평가, ③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④ 사례지역 심층조사 등을 관련 위탁 업무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 2011년 한 해 동안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운용하면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2012년에는 다소 개편된 방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였다(표 1-7).
 - 점검통계를 활용한 이행실태 점검과 이행지수를 활용한 이행실태 평가는 연차별 공통 업무로 2011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일부 합리화를 시도하였다.
 - 소수의 특정 시·군 전체를 심층사례로 조사하는 것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또는 항목별로 관련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분야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과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체계 구축의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¹⁾
 - 연차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특정 부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실태 분석과 정책 방안 제시를 추가하였다.

1) 모범사례 발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임.

-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이유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조정을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목표 달성 가능성,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농어촌 주민 만족도와 정책 수요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1-7.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비교

업무 구분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③ 클러스터 분석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 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 군·장흥군) 심층 분석 (4)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 계 조사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 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 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 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 별도의 자료집 발간

제 2 장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의 개요

1.1. 이행실태 점검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4년까지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각 항목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치를 개별 농어촌 시·군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통계(점검통계)를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점검통계의 기준연도를 직전 연도로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2011년 기준의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2010년도 통계를 활용한다.
 - 예를 들어 도시가스 보급률, 방과후학교 참여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계는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

며, 상하수도통계, 전국사업체조사 등 아직 2011년 기준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 2010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 지자체 행정조사의 경우 2012년 8월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결과는 2012년 7월 기준의 실태라 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각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성되어야 하는 지역단위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통계가 필요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마다 달성되어야 하는 지역단위가 시·군, 읍·면, 행정리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총 인구 및 가구, 읍 또는 면 지역 가구, 읍·면 수, 행정리 수 등을 기준으로 각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계산한다.
 - 예를 들어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파악하면 되지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면부 가구와 면부 상수도 보급 가구를 알아야 한다. 또한 ‘공동시설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경우 각 행정리의 공동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의 대상은 전국 139개의 도농복합시 및 군으로 하며, 필요 시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하였다.
 - 현재 농어촌 시·군은 기존의 마산시가 2010년 7월부로 창원시와 통합됨에 따라 총 139개 시·군이다.
 - 또한 충남 연기군이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138개 시·군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기군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 충남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점검통계의 기준 시점이 대부분 그 이전으로 지역별 이행실태 점검·평가 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지역으로 간주하였다.

1.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필요 통계 현황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부문, 31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기준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 개 이상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8개 부문, 31개 기준, 44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를 들어 복지 부문 다문화가족 항목의 서비스기준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 경우, ① ‘자동차로 30분 내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 접근’과 ② ‘교통 불편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 44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총 51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식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협조와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표 2-1).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에 있어 공식통계로 구축이 가능한 것은 12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협조(각각 23개, 14개)가 필요하다.
 - 주거 및 교통 부문의 2개 세부기준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주거 부문: 기초지자체의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관리(「수도법」)
 - 교통 부문: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해운법」)
- 2011년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8개 부문, 31개 기준, 43개 세부기준이었으며, 50개의 통계가 필요했다. 2012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세부기준을 44개로, 필요 통계를 51개로 조정하여 점검하였다.
 - 교육 부문의 유치원/초·중학교 항목의 서비스기준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를 ① 적정규모학

교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로 통폐합, ②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등 2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8개 부문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통계 보완			비고
					중앙행정기관 협조		지자체 협조	
					공간단위 수정	내부자료/ 신규조사	행정 조사	
주거	5	8	9	3	1	2	2	1*
교통	3	5	5	1	0	1	2	1*
교육	6	7 ²⁾	7	0	1	5	1	-
보건의료	3	3	4	2	0	0	2	-
복지	5	6	10	4	1	1	4	-
응급	5	7	8	0	0	7	1	-
문화	3	6	6	2	1	1	2	-
정보통신	1	2	2	0	0	2	0	
계	31	44	51	12	4	19	14	2

주 1) *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 항목을 의미함.

2) 초고속망 구축률은 실제로는 원한다면 전국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나, 통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임.

2) 교육 부문 서비스기준은 2011년까지 6개 항목, 6개 기준, 6개 세부기준(6개 통계)였음. 그러나 2012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해야함’을 세부기준으로 분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6개 항목, 6개 기준, 7개 세부기준(7개 통계)으로 변경되었음.

2.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기본적으로 농어촌 시·군 전체의 ‘달성률’로 제시하였다. 달성률이란 어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현재 이행 정도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달성률은 ‘읍부 총 가구 수(A) 대비 읍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B)의 비중’, 즉 ‘ $B/A \times 100$ ’으로 나타낸다.
 - 단, 일부 항목(예: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은 통계 구득의 한계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단순 평균 달성률’로 제시한다.
- 각 기준 항목별 이행실태 점검 결과표에 각주로 제시하는 ‘단순 평균 달성률’은 각 시·군의 달성률을 더하여 시·군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의 ‘단순 평균 달성률’은 ‘(시·군1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 시·군2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 ... + 시·군139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을 시·군 수(139)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행정리는 2010년 기준 36,498개를, 그리고 읍·면은 2011년 기준 1,408개를 전체 지역 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 단, 통계의 출처와 기준연도에 따라 2010년 기준의 읍·면 수와 지자체 조사 시 구득한 2012년 기준 행정리 수를 활용한다.

2.1. 주거 부문 이행실태

- 주거 부문 서비스기준은 5개이며, 이는 다시 8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9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중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3개이며, 부처협조를 통하여 3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2개를 구축하였다.

- 최저주거기준 비율과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은 공식통계 활용이 가능하다.
- 도시가스 보급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식경제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산림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공동시설 관련 통계는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필요로 한다.
- 상수도 관련 서비스기준 중 기초지자체의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2-2. 주거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시·군·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010	○ (공식통계)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11	○ (지정부협조)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시·군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	2011*	○ (산림청협조)
			시·군별 그린홈100만호사업태양광·태양열·지열·바이오·풍력 등		○ (지정부협조)
마을 공동 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	2012.7	○ (지자체조사)
		마을회관/경로당 상설 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현황		○ (지자체조사)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2010	○ (공식통계)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	달성간주	-	-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환경부 하수도통계: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2010	○ (공식통계)

주: *는 2004~2010 결과에 2011년 결과를 누적한 결과 자료를 활용함.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분석하였다.³⁾
 - 최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최저주거기준 관련 연구⁴⁾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단순 평균 달성률)은 84.8%이다.
 - 도농복합시는 88.5%, 군은 82.6%로 지역 간 달성률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 특히 최소값의 경우 도농복합시가 75.3%인데 반해, 군은 60.6%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 동 기준(9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모두 38개 시·군으로 달성 시·군 비율이 27.3%에 그치고 있다.
 - 달성 시·군 비율은 도농복합시가 49.1%(26곳)이며, 군지역은 14.0%(12곳)이다.

3)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건교부 고시(2004-173)로 제정하면서 도입됨. 이는 시설기준, 면적기준, 침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의 4개 부문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주택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은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조사된 내용이 없어 제외되었음. 실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부문으로 평가함. 자세한 사항은 <부록 2>를 참조함.

4) 최은영·권순필. 2011.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 통계개발원.

표 2-3.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10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단순평균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2.1	60.6	82.6	12 / 86	14.0	-
도농복합시	96.5	75.3	88.5	26 / 53	49.1	-
전체 시·군	96.5	60.6	84.8	38 / 139	27.3	

- 2011년에는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상향한 최저주거기준이 개정·공고되었다(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0호)).⁵⁾ 2011년에 이루어진 본 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의 경우 개정 전 기준으로 본 2005년 이행실태로서 2012년 이행실태(2010년 기준)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 이에 2011년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계산하고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의 비율이 73.7%로, 2010년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해당 기준을 달성한 지역도 9개 도농복합시뿐이었다.

표 2-4.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05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단순평균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5.4	33.1	69.1	0 / 86	0.0	-
도농복합시	94.0	60.0	81.2	9 / 53	17.0	-
전체 시·군	94.0	33.1	73.7	9 / 139	6.5	

주: 2011년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함.

5) 최저주거기준 관련 공고 제2011-490호의 개정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함.

나. 난방

①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본 세부기준 이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군 읍부의 가구 대비 도시가스 보급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 (읍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부 총 가구 수) × 100
- 읍부가 없는 3곳을 제외한 136개 농어촌 시·군의 읍부 총 가구 수는 약 178.3만 가구이며, 이 중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는 약 79.7만 가구로 나타나 도시가스 보급률(달성률)은 44.7%이다.
 - 도농복합시에서는 달성률이 56.4%, 군 지역에서는 33.2%로 나타났다.
- 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33개 시·군(24.3%)이다. 이 중 도농복합시가 21곳(41.2%), 군 지역이 12곳(14.1%)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큰 편이다.
 - 이는 도시가스가 일부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으며, 계획은 있지만 아직 보급되지 않았거나, 2014년까지 공급 계획조차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 2011년 기준 읍부에 도시가스가 전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경기도 1개 군, 강원도 12개 시·군, 충북 5개 시·군, 충남 6개 시·군, 전북 10개 시·군, 전남 16개 시·군, 경북 17개 시·군, 경남 12개 시·군, 제주도 2개 시·군으로, 총 81개 시·군⁶⁾에 달한다.

6) 경기도 1/15(15개 시·군 중 1개 시·군), 강원 12/15, 충북 5/11, 충남 6/16, 전북 10/13, 전남 16/21, 경북 17/23, 경남 12/19, 제주 2/2

표 2-5.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8.6	0.0	33.2	12 / 85	14.1	1
도농복합시	91.3	0.0	56.4	21 / 51	41.2	2
전체 시·군	91.3	0.0	44.7	33 / 136	24.3	3

주 1)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15.7%, 도농복합시 33.3%, 전체 22.3%임.

2) 비고란의 값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수'로, 읍지역이 없는 계룡시, 거제시, 웅진군을 의미함.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②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군의 총 가구 대비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가구 수 / (읍·면부 총 가구 -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보급은 지식경제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산림청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본 서비스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여부에 따라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39개 모든 시·군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어 동 기준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진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5%(44,516호)로 매우 미미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군 지역이 1.4%(24,220호), 도농복합시가 1.6%(20,296호)에 그치고 있다.

- 그린홈100만호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보급은 200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 크지 않다. 그러나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516가구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보급되었으며, 이 중 산림청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10,570가구, 지식경제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으로 33,946가구에 보급되었다.

표 2-6.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4.5	0.3	1.4	86 / 86	100.0	-
도농복합시	9.7	0.2	1.6	53 / 53	100.0	-
전체 시·군	9.7	0.2	1.5	139 / 139	100.0	-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1.4%, 도농복합시 1.8%, 전체 1.5%임.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①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운영비 등 행정리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여부를 파악하였다.
 -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138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공동시설 유지비를 지원받고 있는 행정리의 비중(달성률)은 89.2%(34,118개 행정리)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85.8%(14,289개 행정리), 군 지역은 91.7%(19,829개 행정리)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더 높은 달성률을 보인다.
- 모든 행정리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비를 지원하는 시·군의 비율(달성 시·군 비율)은 37.0%(51개 시·군)이며, 이 중 도농복합시는 34.0%(18곳), 군 지역은 38.8%(33개 지역)로 나타난다.

표 2-7. 마을공동시설 유지비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91.7	33 / 85	38.8	
도농복합시	100.0	0.0	85.8	18 / 53	34.0	
전체 시·군	100.0	0.0	89.2	51 / 138	37.0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1.2%, 도농복합시 86.3%, 전체 89.3%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행정리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 (마을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행정리별 공동시설에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시·군은 20곳(14.5%)으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은 15곳(17.6%)에서, 도농복합시는 5곳(9.4%)에서 지원 중이다.

표 2-8.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35.4	15 / 85	17.6	
도농복합시	100.0	0.0	19.4	5 / 53	9.4	
전체 시·군	100.0	0.0	28.4	20 / 138	14.5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39.4%, 도농복합시 23.4%, 전체 33.2%임.

라. 상수도

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 검사와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 본 세부기준 이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수도통계연보에서 각 시·군 면부의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인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 (면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인구 수 / 면부 총 인구 수) × 100
- 전체 농어촌 시·군의 달성률은 56.1%로, 해당 서비스기준 충족값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 군은 48.6%, 도농복합시는 63.6%로, 군에 비해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면부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의 기준을 달성한 곳은 28개 시·군(20.1%)에 그치고 있다.
 - 이 지역들 중 도농복합시는 15곳(28.3%), 군은 13곳(15.1%)이었다.

표 2-9.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7.0	8.0	48.6	13 / 86	15.1	-
도농복합시	100.0	10.8	63.6	15 / 53	28.3	-
전체 시·군	100.0	8.0	56.1	28 / 139	20.1	-

주 1) 환경부 상수도통계자료 활용으로 인하여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통합된 수치를 활용함.

2) 단순평균은 군 49.4%, 도농복합시 60.3, 전체 53.6%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② 지자체는 원수 수질 검사와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한 보급 외에 지자체에서는 상당 부분 마을상수도 등을 통한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상수도 원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 「수도법」 제29조 제1항,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하 내용 생략).
- 이에 따라 본 세부기준은 해당하는 모든 시·군에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 동 기준 이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통계연보에서 각 시·군의 공공 하수처리 인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 $(\text{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text{총 인구 수}) \times 100$
- 139개 농어촌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74.1%로 동 기준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81.2%인 반면, 군 지역은 53.8%로 해당 서비스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체 농어촌 시·군 중 동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51개 시·군(36.7%)으로 동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시·군이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다.
 - 군 지역 중 달성한 곳은 14곳(16.3%)이며, 도농복합시는 37곳(69.8%)이다.

표 2-10.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 군 수	달성 시 군 비율	
군	88.2	1.4	53.8	14 / 86	16.3	-
도농복합시	95.3	48.8	81.2	37 / 53	69.8	-
전체 시·군	95.3	1.4	74.1	51 / 139	36.7	

주: 단순평균은 군 52.1%, 도농복합시 78.1%, 전체 62.0%임.

2.2. 교통 부문 이행실태

○ 교통 부문 서비스기준은 3개이며, 이는 다시 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4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중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1개이며, 부처 협조를 통하여 1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2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수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통하여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하다.

표 2-11. 교통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수	2010	○ (공식통계)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경우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택시 비용 지원, 탄력적 버스 운영 등)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행 마을	2012.7	○ (지자체 조사)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도서지역(시 군 별 본도(읍·면) 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2011	○ (국토부 협조)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 일부 지원	달성간주	-	-
인도 (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인도 구분 노력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구분 계획 여부 및 결과 구축	2012.7	○ (지자체 조사)

- 도서지역별 본도 현황 및 여객선 운행 현황은 공식통계가 없으며, 이에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통하여 자료를 구축했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현황과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의 인도 설치 현황은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필요로 한다.
-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 세부기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대중교통

①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별로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3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행정리 비율을 파악하였다.
 - $(\text{도보 15분 내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행정리 수} / \text{총 행정리 수}) \times 100$
-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기준으로 36,498개 행정리 중 33,000개 행정리(90.4%)에서 동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 시·군마다 교통 취약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리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하루 3회 이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군 지역의 달성률은 88.8%이며 도농복합시는 92.7%이다.
- 그러나 모든 행정리에서 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은 충남 계룡시가 유일하다.

표 2-12. 대중교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8.7	69.1	88.8	0 / 86	0.0	-
도농복합시	100.0	73.7	92.7	1 / 53	1.9	-
전체 시·군	100.0	69.1	90.4	1 / 139	0.7	-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88.7%, 도농복합시 92.3%, 전체 90.1%임.

①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시·군별로 대중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49개 시·군(35.5%)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 중 도농복합시는 23곳(43.4%)이었으며, 군은 26곳(30.6%)이었다.
-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은 공영버스 및 순환버스이다.
 - 공영버스 및 순환버스 운영은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자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국의 46개 지자체(도농복합시 22, 군 24)에서 운영하고 있다.
 - 콜택시 운임비 지원은 8개 지자체(도농복합시 3, 군 5)에서 실시하고 있다.
 - 강원도 강릉시, 충남 보령군, 당진군, 부여군, 경북 사천시의 경우 공영버스 및 순환버스 운영과 콜택시 운임비 지원 두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표 2-13. 준공공교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프로그램수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2	0	0.3	26 / 85	30.6	-
도농복합시	2	0	0.5	23 / 53	43.4	-
전체 시·군	2	0	0.4	49 / 138	35.5	-

나. 여객선

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본 세부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도가 있는 도서지역을 파악하였으며, 국토해양부 협조를 통하여 각 도서지역과 해당 본도와의 1일 1회 왕복이 가능한지를 파악하였다.
 - 2011년 각 본도별 총 왕복 운항 수 / 365일
- 해당 도서지역은 군 8곳, 도농복합시 3곳 등 총 11개 시·군이며, 이들의 본도는 전체 38개 섬이다. 이들 본도마다 적게는 1일 0.9회에서 27.1회까지 왕복운행을 하고 있다.
 -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경우 1일 0.9회(연간 319회) 왕복을 하여 본 서비스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으며, 그 외 37개 본도는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②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도서지역 거주민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여객선 운임비 중 일부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세부기준은 해당하는 모든 시·군에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 35조 2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내항 여객운송사업이란, 국내항 간에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또는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한다.

다.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각 시·군마다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중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인도가 구분 된 농어촌 생활도로 수 /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농어촌 생활도로 총 수) × 100
- 해당 도로의 연장부분 중 일부(위험 구간, 사고 다발 구간 등)라도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었다면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읍·면 소재지 내에 있는 도로 연장부분은 제외한다.
-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모든 도로에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138개 시·군 중 8곳(5.8%)뿐이었다.
 - 이 중 도농복합시는 5곳(9.4%)이었고, 군은 3곳(3.5%)이었음.

표 2-14.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인도 구분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13.2	3 / 85	3.5	
도농복합시	100.0	0.0	15.2	5 / 53	9.4	
전체 시·군	100.0	0.0	14.0	8 / 138	5.8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23.5%, 도농복합시 31.8%, 전체 26.7%

2.3. 교육 부문 이행실태

○ 교육 부문 서비스기준은 6개 항목이며,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6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다. 이 중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없으며, 지자체 행정조사를 해야 하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부처 협조를 통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하였다.

- 특히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현황과 폐교 시 실시해야 하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현황, 시·군별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선정 현황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얻어 통계를 구축하였다.
-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평생교육시설 현황은 공식통계로 알 수 있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 공표단위에 대한 협조를 얻어 시·군별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구축하였다.
-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관련 통계는 지자체 행정조사로 구축하였다.

표 2-15.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군별 소규모학교 현황 및 통폐합 현황/계획	2011.4	○ (교과부 협조)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폐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2011.4	○ (교과부 협조)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시·군 당 1개교 이상	시·군별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현황	2009 (이후 동일)	○ (교과부 협조)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시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시·군별 초·중·고 중 '09~'10에 폐교된 학교별 주민 의견 수렴 현황	2011.4	○ (교과부 협조)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70% 이상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시·군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2012.4	○ (교과부 협조)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지자체, 교육청, 주민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2012.7	○ (지자체 협조)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운영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2011.4	○ (교과부 협조)

주: 폐교된 학교 수는 2009~2010년 폐교 현황에 2011년 기준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함.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①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의 소규모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폐교된 학교 비율을 계산하였다.
 -
$$[09\sim 11\text{년 폐교된 학교 수} / (09\sim 11\text{년 폐교된 학교 수} + 2011\text{년 소규모학교 수})] \times 100$$
- 136개 시·군에 소규모학교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폐교된 학교의 수는 많지 않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39개의 소규모학교 중 181개 학교(8.9%)만이 다른 학교로 통합되고, 2011년 4월 현재 1,855개의 학교가 남아 있다.
 - 경기도 광주, 충북 증평, 충남 계룡 등 3개 시·군에는 2009년 이후 소규모학교가 없다.
-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군의 경우 전체 1,237개의 소규모학교 중 106개(8.6%), 도농복합시의 경우 802개 중 75개(9.4%)가 통합되어 지역별 격차는 크지 않았다.

표 2-16. 적정규모학교 육성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군	66.7	0.0	8.6
도농복합시	28.0	0.0	9.4
전체 시·군	66.7	0.0	8.9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7.7%, 도농복합시 9.0%, 전체 8.2%임.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②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폐교된 학교에 대하여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였는지,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 (통학수단 제공 학교 수 / 09~11년 폐교된 학교 수) × 100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폐교된 학교 수는 181개교로, 이는 79개 시·군에 분포해 있다. 이중 177개 폐교된 학교(97.8%)에서 학생에게 등·하교시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모든 폐교 학생에 대하여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총 75개 시·군(94.9%)였다.
 - 이 중 도농복합시는 34곳 중 32곳(94.1%), 군 지역은 45곳 중 43곳(95.6%)에서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 폐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제공되는 통학수단에는 통학버스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 차량 임차, 택시비 지원, 하숙비 지원 등이 있다.

표 2-17. 폐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기준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98.1	43 / 45	95.6	40
도농복합시	100.0	0.0	97.3	32 / 34	94.1	20
전체 시·군	100.0	0.0	97.8	75 / 79	94.9	60

주 1) 비고란의 값은 폐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의미함.

2)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5.7%, 도농복합시 96.0%, 전체 95.8%임.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총 150개의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는 120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어, 86.3%의 시·군이 본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은 83개 지역(96.5%)이 동 기준을 달성한 데 비해 도농복합시는 37개 지역(69.8%)만이 달성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농어촌 우수고등학교가 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2-18. 시·군별 우수고등학교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우수 고교 평균 수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 군 수	달성 시 군 비율 (달성률)	
군	3	0	1.2	83 / 86	96.5	-
도농복합시	2	0	0.9	37 / 53	69.8	-
전체 시·군	3	0	1.1	120 / 139	86.3	-

[참고 1 :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의미하는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선정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150개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2009년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아직까지 다른 추가적인 계획이 없다.
-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150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모든 시·군에 수범사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지자체를 찾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통해 도농복합시 및 군의 138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81개 시·군(58.7%)에서 일부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우수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 81곳 중 34개는 도농복합시이고, 47개는 군으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 가장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지원이다. 농산어촌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명문고 또는 특성화 지원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육성 지원금과 운영비 지원, 학생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밖에 자율형 공립고 육성, 우수인재양성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폐교 요건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각 시·군의 소규모학교 중 폐교된 학교를 파악하였으며, 이 중 시설 재활용 방안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학교를 확인하였다.
 -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실시 학교 수 / 폐교된 학교 수) × 100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폐교된 소규모학교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한 결과 전체 79개 시·군에서 폐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74개 시·군(93.7%)에서 모든 폐교에 대하여 공청회 등이 이루어졌다.
 - 일부 학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곳은 전남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신안군이다.
 - 앞의 5개 시·군을 제외하면 모든 시·군에서 폐교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다.

표 2-19. 폐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50.0	96.2	42 / 46	91.3	39
도농복합시	100.0	80.0	94.9	32 / 33	97.0	21
전체 시·군	100.0	50.0	95.7	74 / 79	93.7	60

주 1) 비고란의 값은 '해당없음'으로, 폐교된 학교가 없는 지역을 의미함.

2)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7.6%, 도농복합시 99.4%, 전체 98.4%임.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통해 각 시·군별 초·중·고교 총 학생 수 대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을 계산하였다.
 - $(\text{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text{총 학생 수}) \times 100$
- 139개 농어촌 시·군 전체로 살펴보면 약 1,044천 명의 학생 중 약 865천 명 (82.8%)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동 서비스기준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78.7%이며, 군 지역은 87.0%이었다.
- 그러나 시·군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70% 미만인 시·군이 여전히 존재한다.
 - 139개 시·군 중 동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132개 시·군(95.0%)으로, 군지역이 85개(98.8%), 도농복합시가 47개(88.7%)이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학원 등 사교육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9.7	65.1	87.0	85 / 86	98.8	-
도농복합시	100.0	56.4	78.7	47 / 53	88.7	-
전체 시·군	100.0	56.4	82.8	132 / 139	95.0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88.8%, 도농복합시 84.7%, 전체 87.3%임.

마.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여부를 파악하였다.
- 전국 138개 도농복합시 및 군을 대상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92개 시·군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동 기준의 달성률은 66.7%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은 56개(65.9%), 도농복합시는 36개(67.9%)가 달성하고 있다.

표 2-21.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56 / 85	65.9	-
도농복합시	36 / 53	67.9	-
전체 시·군	92 / 138	66.7	-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개발원으로 부터 읍·면별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구득하였다.
 - 평생교육시설은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되는데, 농어촌 주민이 참여한다는 특성상 학교 및 대학교 시설 등의 준형식보다 학교 부설, 평생학습관 등의 비형식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⁷⁾
 - (비형식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전국 1,408개 읍·면 중 279개 읍·면에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어 동 기준의 달성률은 19.8%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는 129개 읍·면(23.8%)에서, 군지역은 150개 읍·면(17.3%)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 전국 139개 시·군 중 모든 읍·면에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용인시가 유일하다.

7) 비형식시설에는 그 밖에도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지만, 현재 구득 가능한 주소 자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제외되었음. 향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현황 또는 주소가 구축된다면 보다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기준 달성률의 향상이 예상됨.

표 2-22. 평생교육 시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66.7	0.0	17.3	0 / 86	0.0	-
도농복합시	100.0	0.0	23.8	1 / 53	1.9	-
전체 시·군	100.0	0.0	19.8	1 / 139	0.7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18.9%, 도농복합시 26.3%, 전체 21.7%임.

2.4. 보건의료 부문 이행실태

-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기준은 3개 항목이며,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4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중 2개는 공식통계로 구축이 가능하며, 2개는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구축했다.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1차 진료시설로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실을 선정하였다.
 -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통하여 시·군 내 1차 진료 가능한 병원시설에 대한 현황과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였다.
 - 1차 진료시설 중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파악이 불가능한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등에 대한 현황은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행정리별 순회방문진료 현황 역시 지자체 행정조사를 활용하였다.

표 2-23. 보건의료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시·군 내에서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	전국사업체조사: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방사선병리검사와 현황	2010	○ (공식통계)
			시·군별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	2012.7	○ (지자체 조사)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 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방문 실시	행정리별 보건직원 순회방문 진료 현황	2012.7	○ (지자체 조사)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읍·면 내에 의약품 구입 가능	전국사업체조사: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점, 공공의료 기관 현황	2010	○ (공식통계)

가.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활용하여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물리치료실, 산부인과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5개 과목에 대한 1차 진료가 모두 가능해야 해당 기준 항목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전국의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주요 과목의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108개 시·군으로 달성률은 78.3%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중에는 53곳(100.0%), 군 중에는 55곳(64.7%)에서 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표 2-24. 주요 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55 / 85	64.7	
도농복합시	53 / 53	100.0	
전체 시·군	108 / 138	78.3	

- 동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곳만을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한다면 점검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만이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할 때, 총 138개 시군 중 74개 시·군(53.6%)만이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 도농복합시는 48곳(90.6%)에서 분만을 포함한 모든 1차 진료가 가능하며, 군 지역은 26곳(30.6%)에서 가능하다.

표 2-25. 주요 과목별 이행실태

단위: 개, %

구분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물리치료실	산부인과	분만 가능 여부
진료 가능 시·군 수	138/139	138/139	138/139	138/138	110/138	74/138
달성률	99.3	99.3	99.3	100.0	79.7	53.6

나.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순회방문진료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진료 실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분석 결과, 전국 행정리 중 2,561개 행정리(6.7%)에서만 월 1회 이상 순회진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도농복합시 중에는 782개 행정리(4.7%)에서 이루어졌으며, 군 중에는 1,779개 행정리(8.2%)에서 이루어졌다.
- 모든 행정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회진료가 이루어진 지자체는 단 8곳(5.8%)에 해당한다.
 - 이 중 도농복합시에 4곳(7.5%)이 있으며, 군에 4곳(4.7%)이 있다.

표 2-26. 순회방문진료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사군 비율	
군	100.0	0.0	8.2	4 / 85	4.7	
도농복합시	100.0	0.0	4.7	4 / 53	7.5	
전체 시·군	100.0	0.0	6.7	8 / 138	5.8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4%, 도농복합시 9.4%, 전체 9.4%임.

- 이러한 순회방문 관련 서비스기준의 경우 지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농어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지마을 등 의료취약지역을 지자체별로 선정하여, 이들 마을에 한정하여 동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기준에 의해 순회방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비스기준 달성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행정리 중 지자체에서 오지마을로 선정한 행정리는 총 1,684개였으며, 이 중 월 1회 이상 순회진료가 있었던 곳은 655개 행정리였다.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148개 행정리(21.6%), 군 지역이 507개 행정리(50.8%)에서 이루어졌다.
 - 오지마을이 선정된 지자체는 총 76개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모든 오지마을에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하는 곳은 21개 시·군(27.6%)으로 나타났다.
 - 군의 경우 13곳(26.5%), 도농복합시는 8곳(29.6%)으로 나타났다.

표 2-27. 오지마을 순회방문진료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사군 비율	
군	100.0	0.0	50.8	13 / 49	26.5	36
도농복합시	100.0	0.0	21.6	8 / 27	29.6	26
전체 시·군	100.0	0.0	38.9	21 / 76	27.6	62

주 1) 비고란의 값은 의료 오지로 선정된 마을이 없는 시·군 수입.

2)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29.9%, 도농복합시 31.9%, 전체 30.6%임.

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활용해 의약품 관련 소매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 (의약품 소매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동 기준의 ‘자동차로 20분 내에’란 ‘해당 읍·면 내에서’를 의미한다.

- 전체 1,409개⁸⁾ 읍·면 중 1,403개 읍·면(99.6%)이 동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 군 지역의 읍·면은 99.9%,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99.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원주시와 철원군, 충북 단양군, 전남 남원시 등 총 5개 시·군의 일부 읍·면에서는 의약품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2-28. 의약품 구입 가능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85.7	99.9	85 / 86	98.8	-
도농복합시	100.0	66.7	99.1	48 / 53	90.6	-
전체 시·군	100.0	66.7	99.6	133 / 139	95.7	-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9.8%, 도농복합시 98.7%, 전체 99.4%임.

2.5. 복지 부문 이행실태

- 복지 부문 서비스기준은 5개이며, 이는 다시 6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10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중 공식통계로 구축이 가능한 것은 4개로 비교적 공식통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처 협조를 통하여 2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4개의 통계를 구축하였다.
 - 공식통계를 통하여 구축이 가능한 통계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등이다.

8) 2011년 기준 총 읍·면은 1,408개이나, 2010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므로 2010년 기준 전국 총 읍·면 현황(1,409개)을 활용함.

- 읍·면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과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현황과 이들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자료는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하여 구득하였다.

표 2-29. 복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연도	구축 여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협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주 1회 이상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현황 1. 독거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등급외 3.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 각 사항 중복 불가	2012.7	○ (지자체조사)
			노인돌봄기본(독거노인 서비스 수혜자 현황	2012.7	○ (지자체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서비스 수혜자 현황	2012.7	○ (지자체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중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 등 현재 수혜자	2012.7	○ (지자체조사)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시·군 내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시설 현황	보건복지부:청소년 수련시설현황	2011	○ (공식통계)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중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또는 방과후 학교사업시설(초등돌봄교실) 운영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전국지역 아동센터 현황	2011	○ (공식통계)
			각 시·군 읍·면동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2.4	○ (교과부협조)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 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최소 2명 이상일 때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2011	○ (공식통계)
			읍·면·동별 보육시설현황	2012.7	○ (여가부협조)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접근 가능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전국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	2011	○ (공식통계)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 현황과 노인돌봄서비스(기본 및 종합) 수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수 / 취약계층 노인 수) × 100
- 동 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행정조사 결과, 138개 농어촌 시·군에 있는 약 82.7만 명의 취약계층 노인 중 약 22.3만 명(26.9%)이 노인돌봄서비스 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주 1회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은 취약계층 노인 38.5만 명 중 10.5만 명이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어, 달성률은 27.4%이다.
 - 도농복합시는 취약계층 노인 44.2만 명 중 11.7만 명이 주 1회 이상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어, 달성률은 26.5%로 나타났다.
- 모든 취약계층 노인들이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은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취약계층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6.1	8.2	27.4	0 / 85	0.0	
도농복합시	92.6	12.3	26.5	0 / 53	0.0	
전체 시·군	96.1	8.2	26.9	0 / 138	0.0	

주 1) 경기도 포천시, 전남 여수시, 광양시 등 3개 지역의 경우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의 파악이 되지 않아, 2011년 조사된 현황을 활용하였음.

2)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33.1%, 도농복합시 30.3%, 전체 32.0%임.

[참고 2 : 노인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

- 노인 항목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 독거노인: 보살펴 줄 가족이 없어 관심과 보호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등급외: 중증질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증세를 보이는 노인으로서 정기적인 전문가의 진료 또는 도움 필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서비스에 취약
- 이러한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대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 제도 1~3등급 판정자 대상
-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통하여 각 제도 대상인원과 실제 수혜 인원에 대한 행정조사가 필요하며, 각 대상자 및 실제 수혜자 간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대상자 중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공공보건체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고 심각한 대상군에 대하여 월 1회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주 1회 이상이라는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 지자체별로 전문인력의 방문 외에도 공무원 및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노노케어 등의 관련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진흥시설 중 청소년 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 동 기준은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 즉 시·군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 139개 농어촌 시·군 중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지역은 127개 지역으로 나타나, 달성률은 91.4%이다.
 - 시·군별로 평균 2.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 도농복합시에서는 52개 지역에 동 시설이 분포해 98.1%의 달성률을, 군 지역에서는 75개 지역에 동 시설이 분포해 87.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곳은 도농복합시인 충남 계룡시를 비롯하여 인천 옹진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예산군, 전남 화순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경남 남해군 등의 군 지역이다.

표 2-3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 센터 수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10	0	2.2	75 / 86	87.2	-
도농복합시	15	0	3.8	52 / 53	98.1	-
전체 시·군	15	0	2.8	127 / 139	91.4	-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읍·면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을 구득하였고, 여기에 읍·면지역에서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정보센터 현황을 보완함으로써 방과후 돌봄시설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 (초등돌봄교실 또는 지역아동정보센터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동 기준은 ‘읍·면 내의 방과후 돌봄시설에 자동차로 20분 내에 도달’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 1,408개 읍·면 중 동 기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읍·면은 1,380개 (98.0%)로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읍·면에서 방과후 돌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군 지역은 847개 읍·면(97.7%),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533개 읍·면(98.5%)에서 운영되고 있다.
- 방과후 돌봄시설이 모든 읍·면에 1개소 이상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농어촌시·군은 119개 지역으로 동 기준의 달성 시·군 비율은 85.6%이다.
 - 군 지역의 달성 시·군 비율은 84.9%(73개 지역)이며, 도농복합시의 달성 시·군 비율은 86.8%(46개 지역)이다.

표 2-32. 읍·면별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70.0	97.7	73 / 86	84.9	-
도농복합시	100.0	81.8	98.5	46 / 53	86.8	-
전체 시·군	100.0	70.0	98.0	119 / 139	85.6	-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7.7%, 도농복합시 98.6%, 전체 98.1%임.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보육시설 주소자료(보건복지부)를 구득하여 읍·면별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 영유아는 만 5세 이하를 의미하며, 영유아가 3명 이상이 있을 시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 (보육시설 운영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인 읍·면 수) × 100
 - 동 기준은 ‘읍·면 내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자동차로 20분 내에 도달’을 요구하고 있다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는 138개 농어촌 시·군 내 모든 읍·면에 3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400개 전체 읍·면에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어야 한다.⁹⁾
- 전국 1,400개 읍·면 중 950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달성률은 67.9%로 나타난다.
 -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78.0%(422개 읍·면), 군 지역은 61.5%(528개 읍·면)로 군 지역의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 모든 읍·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21개 시·군으로 동 기준의 달성 지역 비중은 15.2%로 나타난다.
 - 이 중 도농복합시는 11곳(20.8%)이며, 군 지역은 10개 지역(11.8%)이다.

9)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자료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된 이후의 것임. 따라서 영유아 관련 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은 138개 시·군, 1,40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함.

표 2-33. 읍·면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15.4	61.5	10 / 85	11.8	-
도농복합시	100.0	42.9	78.0	11 / 53	20.8	-
전체 시·군	100.0	15.4	67.9	21 / 138	15.2	-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63.3%, 도농복합시 79.2%, 전체 69.4%임.

마. 다문화가족

①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에서 구축한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을 활용하였다.
 - 동 기준은 ‘시·군 내의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자동차로 30분 내에 도달’을 요구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39개 농어촌 시·군 중 8개 시·군을 제외한 131개 시·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달성률이 94.2%로 나타난다.
 -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96.2%(51개 지역)이며, 군 지역의 달성률은 93.0%(80개 지역)¹⁰⁾이다.

10) 2011년 기준 공식통계에 의하면 85개 군 지역 중 74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2012년에 새로 신설된 5곳을 반영하였음. 5곳에는 경북 군위군, 고령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이 해당함.

표 2-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80 / 86	93.0	-
도농복합시	51 / 53	96.2	-
전체 시·군	131 / 139	94.2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②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본 세부기준 역시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에서 구축한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실시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9개 시·군 중 131개 시·군에서 각 1개 이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27개 시·군에서는 센터에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의 센터는 2012년 설립된 곳으로서 아직까지는 인근 지자체의 센터에 방문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
- 또한 센터가 없는 8개 군 지역 중 7곳 역시 인근 지역의 센터에 방문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천 옹진군의 경우 여건 상 개별 가정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읍·면사무소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85 / 86	98.8	-
도농복합시	53 / 53	100.0	-
전체 시·군	138 / 139	99.3	-

2.6. 응급 부문 이행실태

- 응급 부문 서비스기준은 5개이며, 이는 다시 7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8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중 공식통계로 구축이 가능한 것은 없으며, 8개 통계 모두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하여 구축이 가능하다.
 - 응급현장 도착소요시간과 EMS 헬기 현황, 소방현장 도착소요시간 등 4개의 통계는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지역별 CCTV 설치 현황은 지자체, 경찰출동소요시간 현황은 경찰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또한 선박 및 헬기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은 해경청과 산림청의 협조가 필요하며, 항포구 CCTV 설치 현황 역시 해경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표 2-36. 응급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30분 내 응급현장 도착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또는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1	○ (소방청협조)
도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 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및 산림청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선박 및 헬기 현황	2012.7	○ (해경청협조)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EMS 전용헬기 운영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헬기 현황	2012.7	○ (산림청협조)
			시·도별 EMS전용헬기 운영 현황	2012.7	○ (소방청협조)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신고 접수 후 화재 현장에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함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또는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1	○ (소방청협조)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간선도로 길목 및 마을 진입 주요 도로에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2012.7	○ (지자체협조)
		양식장 등의 어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시·군별 포구/항만, 어장/양식장 현황 및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2011	○ (해경청협조)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현장 도착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또는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1	○ (경찰청협조)

가.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 처치를 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협조로 행정리별 응급현장 평균 도착소요시간 자료를 구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착시간 30분 이내인 행정리 수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 $(30\text{분 이내로 소요된 행정리 수} / \text{응급 신고가 이루어진 총 행정리 수}) \times 100$
- 2011년에 응급 신고가 있었던 15,091개 행정리 중 15,016개 행정리에서 구급차가 평균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달성률이 99.5%에 이르고 있다.
 -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 간 달성률의 차이는 거의 없다.
- 동 기준을 시·군 단위로 보면, 모든 행정리에서 신고 후 30분 내 구급차가 도착한 시·군은 95개 시·군(68.3%)으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의 경우 61곳(70.9%)이었으며, 도농복합시는 34곳(64.2%)이었다.

표 2-37. 구급차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기준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70.0	99.5	61 / 86	70.9	-
도농복합시	100.0	95.0	99.4	34 / 53	64.2	-
전체 시·군	100.0	70.0	99.5	95 / 139	68.3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99.2%, 도농복합시 99.4%, 전체 99.3%임.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① 해경 및 산림청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장비를 설치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의 협조를 통하여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한 선박 및 헬기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장비들이 모든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 해양경찰서마다 함정을 다수 구비하고 있으며, 이 함정들에는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또한 주요 해양경찰서에 총 23대의 헬기가 배치되어 낙도 및 벽지에 대한 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표 2-38. 해양경찰서 환자 이송체계 이행실태

단위: 개

구 분	총계	인천	동해지방청			서해지방청				남해지방청				제주청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제주
합 정	294	28	14	14	20	17	28	20	19	15	23	29	24	18	15
항공기	23	5	0	3	1	0	3	2	0	0	2	0	4	0	3

- 산림청 헬기는 시·도별 산림청에서 1대 이상씩 운용되어 총 10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벽지에 대한 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경기도 김포시 1대, 강원 원주시 1대, 강원 강릉시 2대, 충북 진천군 1대, 전북 익산시 1대, 전남 영암군 1대, 경북 안동시 1대, 경남 양산시 1대, 경남 함양군 2대
- 또한 산림청은 2012년 말까지 각 시·도 산림청별 응급장비 구비 헬기를 각각 2대씩으로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벽지 환자 이송체계가 더욱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②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전용헬기 운용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통하여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전용헬기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지역에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소방방재청에서는 2대 이상 헬기를 보유한 항공대는 구급헬기를 지정, EMS 장비가 상시 탑재되어 있으며, 1대를 보유한 항공대는 이동식 EMS장비를 이용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전국 15개 소방항공대에서 총 26대(임차 1대 포함)의 EMS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헬기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에 응급출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제주도와 대전광역시에는 배정된 EMS 헬기가 없다.

표 2-39. 119 EMS구급헬기 운영 이행실태

단위: 대

총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5 (1)	3	3	2	2	1	1	1	3	2	1	임차 (1)	1	2	2	1

다. 소방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협조로 읍·면에서 이루어진 화재 신고별 현장 도착소요시간 자료를 구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착시간 5분 이내 건 수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 (5분 이내 소요된 신고 건 수 / 화재 신고 건 수) × 100

○ 2011년 읍·면 지역에서 신고된 화재는 총 17,108건¹¹⁾이었으며, 이 중 5분 이내로 도착한 경우는 8,945건으로, 달성률은 52.3%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의 달성률은 55.2%이며 도농복합시는 49.3%이다.

○ 화재 신고 시 소방차 5분 내 도착 비율이 55% 이상인 지역은 59개 시·군 (42.4%)이었다.

- 이 중 도농복합시는 19곳(35.8%)이었으며, 군지역은 40곳(46.5%)이었다.

표 2-40. 소방차 소방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 군 수	달성 시 군 비율	
군	91.2	21.5	55.2	40 / 86	46.5	
도농복합시	89.2	22.9	49.3	19 / 53	35.8	
전체 시·군	91.2	21.5	52.3	59 / 139	42.4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55.0%, 도농복합시 51.9%, 전체 53.9%임.

라. 도난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① 주요 간선도로 길목 및 마을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 설치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행정리별 CCTV 설치 현황을 구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CTV가 설치된 행정리 비율을 계산하였다.

11) 읍·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신고 건 수만 해당함. 일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신고 건 수는 제외하였음.

-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전국 138개 시·군의 모든 행정리 중 방법용 CCTV가 설치된 곳은 7,716개 행정리(20.2%)였다.
 - 도농복합시는 3,392개 행정리(20.4%), 군은 4,324개 행정리(20.0%)에 설치되어 있음.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행정리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전혀 없다. 따라서 동 기준의 달성 시·군 비율은 0%이다.

표 2-41. 주요 간선도로 및 진입로 CCTV 설치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 군 수	달성 시 군 비율	
군	94.4	0.9	20.0	0 / 85	0.0	
도농복합시	81.9	0.0	20.4	0 / 53	0.0	
전체 시·군	94.4	0.0	20.2	0 / 138	0.0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23.0%, 도농복합시 19.8%, 전체 21.8%임.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② 어산물 도난 방지를 위한 항포구 CCTV 설치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항포구별 CCTV 설치 현황을 구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CTV가 설치된 항포구 비율을 계산하였다.
 -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항포구 수 / 총 항포구 수) × 100
- 항포구가 분포하는 전국 48개 농어촌 시·군의 2,172개 항포구 중 157개의 항포구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은 7.2%에 그치고 있다.

표 2-42. 항포구 CCTV 설치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50.0	0.0	6.7	0 / 29	0.0	57
도농복합시	66.7	0.0	8.1	0 / 19	0.0	35
전체 시·군	66.7	0.0	7.2	0 / 48	0.0	

주 1) 비고란의 값은 ‘해당 없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2)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14.2%, 도농복합시 19.4%, 전체 16.2%임.

마. 경찰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협조를 통하여 행정리별 경찰 출동소요시간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자료 여건 상 코드 1 상황¹²⁾ 시 시·군별 평균 도착소요시간만을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이행실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그 결과 전체 139개 농어촌 시·군의 평균 출동시간 중 10분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모든 지역이 해당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112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치의 긴급성에 따라 현장 출동 여부가 결정됨. 그 분류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신고 등에는 긴급출동(코드 1), 경찰의 현장조치는 필요하나 단순 폭행사건 및 교통 사고 등의 신고는 일반출동(코드 2), 생활소음과 불법 주·정차, 노점 단속 등 단순불편 신고 등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는 비출동(코드 3) 등이 해당함.

- 그러나 향후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행정리별 평균 도착 소요시간 자료가 필요하다.

2.7. 문화 부문 이행실태

-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은 3개이며, 이는 다시 6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6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중 공식통계로 구축이 가능한 것은 2개이며, 부처 협조가 필요한 것이 2개, 나머지 2개는 지자체 행정조사를 필요로 한다.
 - 공식통계로 구축이 가능한 통계는 공공 및 작은 도서관 현황과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이다.
 - 부처 협조가 필요한 통계는 문화공연과 관련한 자료로서, 지방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현황과 문화예술회관의 전문공연프로그램 현황이 이에 해당한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 대출 및 반납 대안서비스 현황과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현황은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구축한다.

표 2-43.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통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 현황	2012.7	○ (공식통계)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이동도서관 등 대안적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 운영	대안 방안 운영 여부	2012.7	○ (지자체조사)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자동차 30분 내에 문화시설 운영	문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10	○ (공식통계)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시·군(지방문화원) 별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수	2011	○ (문광부협조)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수	2011	○ (문광부협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2회 이상의 문화 프로그램 향유	2012.7	○ (지자체조사)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① 읍·면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통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읍·면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도서관이 위치한 읍·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전국 1,408개 읍·면 중 608개 읍·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이 43.2%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의 달성률은 41.2%이며 도농복합시는 46.4%이다.

○ 관내 모든 읍·면에 도서관 시설이 있는 시·군은 4곳(2.9%)이었으며, 이 중 군 지역은 1곳(1.2%), 도농복합시는 3곳(5.7%)이다.

- 4개 시·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시, 충북 증평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이다.

표 2-44. 읍·면별 도서관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 군 수	달성 시 군 비율	
군	100.0	9.1	41.2	1 / 86	1.2	-
도농복합시	100.0	5.6	46.4	3 / 53	5.7	-
전체 시·군	100.0	5.6	43.2	4 / 139	2.9	-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42.5%, 도농복합시 49.6%, 전체 45.2%임.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이동도서관 등 대안적인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운영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시·군별로 도서관이 없는 지역 주민에게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기 위한 대안적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65개 지자체(47.1%)에서 대안적인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 34곳, 군 31곳이 이에 해당한다.

- 6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적인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 중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은 이동도서관이며, 그 외에 우편 택배 서비스나 도서 전달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¹³⁾
 - 이동도서관 시스템은 52개 시·군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택배를 이용하여 대출과 반납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13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다.
 - 이 밖에 읍·면사무소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한 대출 및 반납 시스템이 10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①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 동 기준은 ‘시·군 내에서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시설에 도달’을 요구한다.
 - 농어촌지역의 공연 및 관람을 위한 문화시설이라 하면 대부분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을 들 수 있다.
-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중 137개 시·군에 한 개소 이상의 문화시설이 분포하여 달성률이 98.6%로 나타났다.
 - 지역 내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이 모두 없는 곳은 인천 옹진군과 충남 계룡시 뿐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과 도농복합시가 각각 85곳(98.8%), 52곳(98.1%) 이 문화기반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13) 각 시스템별 도입 지자체 수는 중복된 경우가 있음.

표 2-45.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 문화기반 시설 수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3	0	1.7	85 / 86	98.8	-
도농복합시	6	0	2.2	52 / 53	98.1	-
전체 시·군	6	0	1.9	137 / 139	98.6	-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②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문화원 연합회의 협조를 통하여 지방문화원별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였다.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있어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문화원을 통한 공연과 전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문화원에서 개최되는 공연 횟수와 전시 일수를 합하여 월 평균을 계산하였다.
 - (공연 횟수 + 전시 일수) / 12
- 전체 139개 시·군 중 인천 옹진군, 충남 계룡시 등 2개 시·군을 제외한 137개 시·군에 지방문화원이 있다.¹⁴⁾
- 지방문화원 문화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77개 시·군(55.4%)으로 평균 월 3.2회의 공연 및 전시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과 도농복합시가 각각 47곳(54.7%), 30곳(56.6%)

14) 인천 옹진군, 충남 계룡시 등 2개 시·군에는 지방문화원이 없으나, 상기 서비스기준은 자료 구득 여부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조사할 뿐,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기준이기 때문에 모집단을 139개 시·군으로 함.

에서 동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군이 월 2.7회, 도농복합시가 월 4.1회로 도농복합시에서의 지방문화원 활동이 약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6.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이행실태

단위: 회, 개,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월평균 문화프로그램 수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 군 수	달성 시 군 비율 (달성률)	
군	30.6	0	2.7	47 / 86	54.7	
도농복합시	25.2	0	4.1	30 / 53	56.6	
전체 시·군	30.6	0	3.2	77 / 139	55.4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③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 분야 공연 횟수를 파악하였다. 이는 농어촌지역에서 관람이 가능한 전문공연은 거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공연예술에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장르 등이 있다.
 - 2011년 점검 시 기타 행사 중 대중음악 및 연예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2012년부터 해당 자료의 여건상¹⁵⁾ 제외하고 분석한다.
 - 공연예술 횟수 / 4

15)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당 자료 조사에 있어서 2011년 조사부터 기타 행사를 세분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음. 기타 행사에는 대중음악 및 연예 프로그램 외에 학생 및 아마추어 발표회, 영화, 일반행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전문공연프로그램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 139개 시·군¹⁶⁾의 전문공연 횟수를 조사한 결과, 108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중 분기 당 1회 이상 전문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은 105개 시·군으로 75.5%의 달성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기 당 공연 횟수는 15.9회로, 문예회관에서 전문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과 도농복합시가 각각 59곳(68.6%), 46곳(86.8%)에서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군에 비해 도농복합시에서 전문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도농복합시의 전문공연 회수가 분기 당 30.5회로 군(6.8회)보다 많았다.

표 2-47. 분기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이행실태

단위: 회,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분기별 평균 전문공연 횟수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100.0	0.0	6.8	59 / 86	68.6	
도농복합시	165.5	0.0	30.5	46 / 53	86.8	
전체 시·군	165.5	0.0	15.9	105 / 139	75.5	

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각 읍·면별

16) 각주 14)와 마찬가지로, 상기 서비스기준은 자료 구득 여부에 따라 문예회관을 조사할 뿐,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기준이기 때문에 모집단을 139개 시·군으로 함.

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체 읍·면 대비 연 2회 이상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읍·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138개 시·군에 대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한 결과, 총 425개 읍·면(30.2%)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었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156개 읍·면(28.8%)이 기준을 달성하였고, 군은 269개 읍·면(31.0%)이 달성하였다.

- 138개 시·군 중 모든 읍·면에서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지역은 18곳(13.0%)로 나타났으며, 이 중 도농복합시는 7곳(13.2%), 군은 11곳(12.9%)으로 나타났다.

표 2-48.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31.0	11 / 85	12.9	
도농복합시	100.0	0.0	28.8	7 / 53	13.2	
전체 시·군	100.0	0.0	30.2	18 / 138	13.0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33.7%, 도농복합시 33.2%, 전체 33.5%임.

2.8. 정보통신 부문 이행실태

- 정보통신 부문 서비스기준은 1개이며, 이는 다시 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2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통하여 구축된다.

표 2-49. 정보통신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연도	구축 여부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	(시·군별 초고속망 가입자 수)	2012.6	○ (방통위협조)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가입자수)	2012.6	○ (방통위협조)

가. 초고속망

①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 본 세부기준은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다’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인터넷 가입을 원한다면 전국 어디에 있든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본 서비스기준은 모든 지역에서 달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농어촌 지역 387만 가구 중 50가구 이상 마을에 거주하는 371만 가구에 대하여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완료하였다.
 -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가구 미만(30가구 미만의 오지마을 포함)의 15만 1,505개 소규모 마을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386만 1,505개 가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됨으로써 2008년 말 기준으로 농어촌의 초고속망 구축률은 99.7%에 이르고 있다.
- 다만 위와 같은 농어촌의 초고속망 구축 현황을 시·군별로 파악하기 힘들어 본 보고서에서는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비율, 즉 가입률을 시·군별 이행실태 점검의 대안으로 조사하였다.

- 인터넷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취지하에 시·군별 인터넷 가입가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현 데이터 구축 여건 상 가입자 현황만 파악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실제로 한 가구에 2회선 이상 가입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므로, 본 연구는 가입자를 가입가구로 간주하여 가입률을 파악하였다.
 - (초고속 인터넷 가입가구 수¹⁷⁾ / 총 가구 수) × 100
- 139개 시·군의 실제 인터넷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510.4만 여 가구(67.5%)가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398.6만 명이 가입되어 있어 73.2%가 달성되었으며, 군 지역은 111.8만 명이 가입되어 52.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인터넷 가입률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군	87.2	29.3	52.9
도농복합시	88.7	43.7	73.2
전체 시·군	88.7	29.3	67.5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50.4%, 도농복합시 68.1%, 전체 57.2%임.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②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기준 농어촌지역 5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중 약 87%에 광대역통합망¹⁸⁾이 구축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17) 실제 협조 받은 자료(2011.6월 기준)는 ‘가입자 수’ 자료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가입자 수’를 ‘가입가구 수’로 간주하였음. 따라서 실제 가입 가구 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 광대역통합망(BcN)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로서 유선인터넷 속도가 50Mbps~100Mbps이며 IPTV, 인터넷전화 등의 다양

낮아 통신사업자가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기피하는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도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어 구축률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가입률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시·군별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가입률을 조사하였다.
 - 통상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었더라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광대역통합망의 가입률은 구축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통하여 50M 이상의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 광대역통합망 가입률은 총 가구 대비 광대역통합망 가입 가구의 비율로 산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통계자료의 한계 상 가입가구 수를 가입자 수로 대체하였다.
 - $(\text{광대역통합망 가입가구 수}^{19}) / \text{총 가구 수} \times 100$
- 139개 시·군의 총 가구 중 광대역통합망에 가입한 가구는 약 462.9만 호(61.2%)로, 해당 서비스기준을 만족하진 못했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 특히 도농복합시의 경우 68.0%(370.2만 호)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었다(군은 43.8%(92.6만 호)).
- 139개 시·군 중 광대역통합망 가입률이 80% 이상인 곳은 3개 시·군으로 2.2%의 달성률을 보인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은 한 곳도 없었으며, 도농복합시는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계룡시 등 3곳(5.7%)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19) <각주 17>과 동일.

표 2-51. 광대역통합망 가입률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72.1	1.7	43.8	0 / 86	0.0	-
도농복합시	84.8	34.0	68.0	3 / 53	5.7	-
전체 시·군	84.8	1.7	61.2	3 / 139	2.2	-

주: 단순 평균 달성률은 군 40.6%, 도농복합시 62.3%, 전체 48.9%임.

3. 이행실태 경과: 2011~2012년

- 2011년의 경우 성과에 대한 비교 준거(기준자료, Baseline Data)가 없었던 이유로 2010년과의 이행실태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모든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통계 구축이 완료되었기에 그간의 이행실태 개선 여부 파악이 가능하다.
- 각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달성률과 달성 시·군 비율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의 특성상 달성률 계산이 부적합할 경우 단순 평균 달성률로 이를 대신하였다.
- 주거 부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2011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의 경우 2005년 73.7%에서 2010년에 84.8%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준을 달성한 시·군의 수는 9개에서 3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또한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2011년 36.2%에서 44.7%로 향상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보급은 2011년 1.1%에서 2012년 1.5%로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은 향후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질 것인 만큼 해당 기준의 향상 역시 기대된다.

- 이 밖에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원과 상하수도의 보급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상설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항목은 향상되었으나, 여객선 항목은 2011년과 동일하였다.
- 15분 거리의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은 2011년에 비해 향상되었고,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공영버스 및 순환버스 운영, 콜택시 운임비 지원 등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인도 구분과 관련된 서비스기준의 경우 2011년 19.0%에서 2012년 14.0%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향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 교육 부문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의견수렴(교육 발전위원회), 평생교육시설 등의 세부기준은 개선된 반면, 폐교 요건(폐교 시 주민 의견 수렴) 세부기준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질의 교육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소규모학교를 얼마나 통폐합하였는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
 - 한편, 폐교 예정인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유희시설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기준이 2011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고등학교 육성의 경우 2011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된 것을 반영하여 139개 시·군에 대한 달성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2009년 선정된 150개 학교가 동일하고,

이로 인해 120개 시·군이 기준을 달성한 것 역시 동일하다.²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2011년 72.4%에서 2012년 82.8%로 향상되었으며, 해당 서비스기준인 참여율 70%를 넘는 지자체도 132곳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는 2011년에 비해 7개 지자체에서 더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평생교육시설 관련 기준은 2011년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수준 자체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순회방문 관련 세부기준이 향상된 것이 특징적이다. 모든 행정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실시하는 비율이 소폭 향상되었다. 그러나 진료서비스와 의약품 구입 기준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순회방문이 이루어진 행정리의 경우 2011년 0.2%에서 2012년 6.7%로 개선되었다.
 - 모든 주요 과목 진료가 가능한 시·군과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읍·면은 2011년과 2012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 다만 1차 진료가 필요한 주요 과목 중 물리치료실과 산부인과는 향상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 부문에서는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세부기준은 2011년에 비해 달성률이 향상되었으나, 영유아 항목은 소폭 감소하였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2011년에 비해 2개 시·군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개 시·군²¹⁾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유아 보육

20) 그러나 지자체마다 해당지역 고교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으로 보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우수고교 중 어떤 학교를 농어촌서비스기준상의 우수고교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임.

시설이 있는 읍·면의 비율은 2011년 69.9%에서 2012년 67.9%로 소폭 감소하였다.

- 노인, 아동 관련 세부기준은 두 시점 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해당 센터가 없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 용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타 지역 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시·군청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응급 부문은 소방서비스와 도난방지 항목은 향상되었으나, 응급서비스는 소폭 하락하였다.

- 소방서비스의 경우 2011년 51.4%에서 2012년 52.4%로 약간 개선되었으며, 마을별 CCTV는 11.0%에서 11.5%로, 항포구 CCTV는 5.0%에서 7.2%로 각각 향상되었다.
- 응급서비스는 달성률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달성 시·군에 있어서 125곳에서 95곳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 경찰서비스의 경우 정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 역시 이미 모든 시군에서 만족하였기 때문에 정채된 것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 문화 부문은 도서관 대안서비스와 문예회관 전문공연, 지방문화원 공연,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에 있어서는 향상되었으나, 도서관 시설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에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 여건은 다소 하락하였다.

21) 2011년과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기준 이행실태는 각각 2010년, 2011년 기준 현황을 활용하였음. 해당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16개 시·군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조사 시 2012년 5개 시·군에서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결과임.

도서관 시설이 있는 읍·면 비율은 52.2%에서 43.2%로 하락하였으며, 모든 읍·면에 도서관 시설이 있는 지자체 수도 1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도서관 여건이 미흡한 곳에서 주민들의 도서 대출 및 반납을 위한 대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59곳에서 65곳으로 증가하였다.

- 지자체별 문화시설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두 시점 간에 변화가 없었으나, 이러한 시설에서 문화공연을 하는 지자체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는 53곳에서 77곳으로, 분기별로 전문공연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는 98곳에서 105곳으로 증가하였다.

- 초고속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모든 곳에서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한 시·군별 구축 현황 자료가 없으며, 대안적으로 조사한 가입률 역시 가입 가구 대신 가입자 수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초고속망과 광대역통합망 가입률이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고속망은 67.9%에서 67.5%로, 광대역통합망은 61.5%에서 61.2%로 약간 하락하였다.
 - 그러나 이를 통해 구축률 개선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2-52.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비교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기준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기준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90%)	-	9/139	73.7	-	38/139	84.8
	난방	읍 도시가스보급률 (50%)	36.2	27/137	16.8	44.7	33/136	22.3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여부)	1.1	140/140	1.2	1.5	139/139	1.5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82.7	89.2	51/138	89.3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28.7	28.4	20/138	33.2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49.2	56.1	28/139	53.6
	하수도	하수도보급률(71%)	73.2	46/140	59.2	74.1	51/139	62.0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기준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기준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2. 교통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82.4	3/140	80.9	90.4	1/139	90.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여부)	25.9	36/139	-	35.5	49/138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4	10/11	-	97.4	10/11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9.0	9/135	31.6	14.0	8/138	26.7
3.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100%)	6.7	0/136	5.8	8.9	0/136	8.1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100%)	-	-	-	97.8	75/79	95.8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유무)	85.7	120/140	1.1 (개소)	86.3	120/139	1.1 (개소)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7.8	70/71	98.9	95.7	74/79	98.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70%)	72.4	118/140	81.1	82.8	132/139	87.3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여부)	60.7	85/140	-	66.7	92/138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100%)	18.9	1/140	20.8	19.8	1/139	21.7
4.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여부)	79.4	108/136	-	78.3	108/138	-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 (100%)	0.2	0/140	0.2	6.7	8/138	9.4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99.6	99.6	133/139	99.4
5.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00%)	27.3	0/137	32.2	27.1	0/138	32.2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유무)	89.3	125/140	2.7 (개소)	91.4	127/139	2.8 (개소)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중·고·대 방과후돌봄시설 (100%)	97.9	121/140	98.0	98.0	119/139	98.1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72.2	67.9	21/138	69.4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기준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기준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무)	78.6	110/140	-	94.2	131/139	-
		방문서비스 제공(여부)	90.9	100/110	-	99.3	138/139	-
6.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8	125/140	99.6	99.5	95/139	99.3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51.4	59/138	52.4	52.3	59/139	53.9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11.5	20.2	0/138	21.8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5.0	0/48	11.2	7.2	0/48	16.2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139/139	-	100.0	139/139	-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52.2	16/140	54.2	43.2	4/139	45.2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유무)		42.1	59/140	-	47.1	65/138	-	
7. 문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유무)	98.6	138/140	1.8 (개소)	98.6	137/139	1.9 (개소)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가능(여부)	46.1	53/115	3.7(회)	55.4	77/139	3.2(회)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 가능(여부)	70.0	98/140	13.5(회)	75.5	105/139	15.9(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100%)	14.0	2/137	16.4	30.2	18/138	33.5
8. 정보 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99.7 (67.9)	-	58.7	99.7 (67.5)	-	57.2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87.0 (61.5)	7/140	50.3	87.0 (61.2)	3/139	48.9

주: 다음과 같은 5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비교에서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계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 이를 종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향상된 세부기준 수는 29개, 정체인 것은 3개, 하락한 것은 4개로 나타났다(표 2-53).²²⁾

표 2-53. 달성률 향상/하락 여부

구분	서비스기준		
달성률 증가 (29)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난방	읍 도시가스 보급률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하수도	하수도보급률	
	교통	대중교통	1일 3회 대중교통 운행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교육	유/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고등학교	우수고교 육성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참여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보건의료	진료서비스	중요과목 의사 진료2)
		순회방문	마을별 월1회 순회방문
	복지	청소년	시군 내 청소년센터
		아동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응급	소방서비스	5분 내 소방차 도착률 55% 이상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
		경찰	112 신고 시 출동소요시간3)

22) 이행실태의 향상 여부는 숫자로 파악이 가능한 것을 위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표 2-53>의 항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모든 항목과 동일하지는 않음. 실제로 <표 2-53>에서는 44개 세부기준 중 36개 세부기준만을 다루고 있음. 제외된 기준은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 2개,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세부)기준 2개, 2012년 처음 실태를 조사하는 폐교 시 통학수단 제공 기준 1개, 이행실태 향상 여부 판단이 모호한 3개 등 총 8개 기준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2-53>의 설명을 참조함.

구분	서비스기준		
	문화	독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시설4)
			월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분기별 1회 전문공연 관람
달성률 변화없음 (3)	교통	여객선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보건의료	의약품 구입	본도 1일 1회 이상 왕복선
	복지	노인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교육	폐교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달성률 하락 (4)	복지	영유아	폐교시 의견 수렴
	응급	응급서비스	읍면 내 보육시설
	문화	독서	구급차 30분 내 도착
			읍면 내 공공/작은도서관

- 주 1) 교과부가 선정한 우수고등학교는 150개교로 120개 시·군에 분포하여 2011년과 동일함. 그러나 자체적으로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2011년 46개 시·군에서 2012년 8개 시·군으로 증가하였음.
- 2) 보건의료 항목의 진료서비스에서 주요 과목 진료가 가능한 시·군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108개 시·군으로 동일함(다만 2011년에는 무응답 시·군이 있어 달성률에 차이가 있음). 그러나 주요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는 동일하였으나, 물리치료실과 산부인과 기반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3) 응급 항목의 경찰서비스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비스기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4) 문화 항목의 문화시설 기반은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변화가 없었음. 그러나 시·군별 평균 문화시설 수가 증가하여, 시·군 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5) 다음의 3개 (세부)기준은 달성률 상승 및 하락 여부 판단에서는 제외되었음.
- 교통 항목의 인도 구분의 경우,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도로가 범적,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기준이 지자체 권고 사항임에 따라 정확한 이행실태 파악이 불가능함.
 - 정보통신 항목의 2개 (세부)기준의 경우 인터넷망의 행정리별 구축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참고적으로 조사한 가입률 역시 가입자 수 현황으로 대체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따라 정확한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 끝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시·군별 이행실태를 종합하여 도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2-54>와 같았다. 대체적으로 경기도와 제주도의 이행실태가 양호하였으며, 반면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기준 이행실태는 상대적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시·도별 달성률 비교

단위: %

분야	항목	세부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90% 이상	92.4	85.2	86.5	89.1	85.1	86.3	76.0	81.4	86.7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69.1	13.8	31.5	45.8	14.4	20.7	42.2	33.5	0.0
		신재생에너지 보급	1.2	1.2	2.2	1.5	1.7	1.5	1.2	1.9	0.5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82.9	92.2	96.3	95.4	90.6	92.7	91.2	73.4	100.0
		프로그램 지원	19.1	48.0	21.9	34.1	19.0	28.7	15.6	49.7	0.0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66.8	49.5	51.1	43.2	68.1	46.0	51.7	62.4	100.0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79.3	79.2	61.1	64.6	72.1	66.4	66.1	83.6	87.1
2.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일 3회 이용 가능	95.8	88.7	89.7	92.5	93.2	89.6	85.2	88.0	93.0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66.7 (0.7개)	73.3 (0.5개)	45.5 (0.5개)	31.3 (0.5개)	15.4 (0.2개)	33.3 (0.3개)	0.0 (0.0개)	72.2 (0.8개)	0.0 (1.0개)
	여객선	도서지역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 운행	-	-	-	-	100.0	100.0	-	100.0	100.0
	인도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 설치	25.3	23.7	14.6	25.8	7.8	10.8	6.7	21.2	18.6
3. 교육	유치원/초·중교	적정규모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로 통폐합	5.2	7.3	6.6	6.6	3.2	16.9	11.0	5.9	7.1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100.0	100.0	100.0	91.7	100.0	100.0	100.0	78.6	100.0
	고등학교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1개교 이상 육성	93.3 (0.9개교)	73.3 (1.2개교)	100.0 (1.2개교)	81.3 (1.1개교)	84.6 (1.0개교)	95.2 (1.1개교)	78.3 (1.1개교)	100.0 (1.1개교)	0.0 (0.0개교)
	폐교	폐교 시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한 공청회 등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100.0	100.0	100.0	100.0	100.0	92.4	100.0	100.0	100.0

분야	항목	세부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생의 70% 이상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69.4	78.4	93.3	85.6	90.6	85.4	92.8	90.1	87.6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	73.3	66.7	54.5	68.8	38.5	71.4	87.0	55.6	100.0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운영	43.2	24.6	19.4	21.6	11.9	14.8	15.1	14.7	41.7
4.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가능	100.0	66.7	81.8	93.8	76.9	66.7	65.2	77.8	100.0
	순회방문	보건소 등 공공보건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방문	8.2	6.7	2.1	7.1	11.3	7.0	3.6	3.7	100.0
	의약품 구입	읍·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98.6	98.2	100.0	99.4	99.4	100.0	100.0	100.0	100.0
5.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4.4	28.3	38.6	24.5	26.3	25.6	29.6	24.9	39.3
	청소년	시·군 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100.0 (4.9개소)	93.3 (3.0개소)	100.0 (2.6개소)	87.5 (1.9개소)	100.0 (3.0개소)	81.0 (1.5개소)	87.0 (1.9개소)	94.4 (3.0개소)	100.0 (13.5개소)
	아동	읍·면 내 지역아동정보센터 또는 초등돌봄시설 운영	97.1	97.4	100.0	100.0	99.4	98.3	94.1	100.0	100.0
	영유아	읍·면 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최소 3명 이상일 때 (소규모)보육시설 운영	89.9	72.8	68.9	74.8	59.7	64.6	62.2	57.9	100.0
	다문화 가족	시·군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0 (1.0개소)	73.3 (0.7개소)	100.0 (1.0개소)	93.8 (0.9개소)	100.0 (1.0개소)	90.5 (0.9개소)	100.0 (1.0개소)	100.0 (1.1개소)	100.0 (1.0개소)
		해당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분야	항목	세부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응급현장 도착	99.5	99.0	99.8	99.9	99.7	99.3	99.1	99.7	100.0
	소방 서비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 도착 비율 55% 이상	40.6	46.9	78.1	67.6	68.7	60.2	47.6	37.4	72.0
	도난방지	주요 간선도로 길목 및 마을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 설치	31.2	24.4	34.8	23.9	19.3	11.0	18.0	20.8	19.8
		양식장 등 어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57.1	45.3	-	20.2	21.4	3.6	15.2	3.8	9.1
	경찰 서비스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현장 도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문화	독서	읍·면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열람/대출 가능	61.2	40.4	43.7	42.7	36.5	41.5	35.3	45.7	83.3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안서비스 현황	86.7 (1.1개)	53.3 (0.7개)	54.5 (0.5개)	62.5 (0.6개)	53.8 (0.6개)	42.9 (0.6개)	8.7 (0.1개)	50.0 (0.5개)	100.0 (1.0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도달	100.0 (1.8개소)	100.0 (1.7개소)	100.0 (2.0개소)	93.8 (2.0개소)	100.0 (1.9개소)	100.0 (1.6개소)	100.0 (1.9개소)	100.0 (1.8개소)	100.0 (2.0개소)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53.3 (2.1회)	46.7 (2.2회)	63.6 (5.2회)	62.5 (3.8회)	61.5 (6.2회)	61.9 (3.8회)	52.2 (2.6회)	44.4 (1.7회)	100.0 (2.0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16.8 (10.7회)	14.5 (13.0회)	8.4 (10.8회)	14.0 (12.5회)	15.7 (13.3회)	8.8 (8.8회)	19.5 (14.3회)	24.1 (20.8회)	60.3 (51.4회)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2회 이상의 문화프로그램 향유	47.5	36.0	43.7	18.1	30.2	38.9	16.4	19.8	100.0
	8. 정보통신	초고속망 구축률 100%	73.7	24.2	16.4	47.8	26.3	35.9	64.5	87.5	17.7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68.1	22.0	15.1	43.1	23.3	30.8	56.7	81.3	16.2

4. 소결: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 그리고 2011년 점검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제도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주거 부문은 주거 가능 주택,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 주거 가능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은 단기적인 주택 구조 개선이나 환경 정비 등이 어려운 대상인 만큼 1년 동안 해당 수준의 변화 폭은 미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검에 있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는 5년에 한번 조사·공표되므로 5년 동안 해당 점검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주거가능주택 항목의 경우 매년마다 이행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또한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식통계가 없어 지자체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화된 조사 체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기준의 경우, 지자체에 조금의 실적이라도 있다면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가율이나 보급률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 목표치가 필요하다.
-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항목 조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 항목의 경우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즉각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통을 통한 이장 설문조사의 주기를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교육 부문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세부기준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내용은 소규모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협의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순회방문진료 항목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 해당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 수준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공공보건 의료 체계에서 모든 행정리에 월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부 마을을 의료 취약마을로 선정하고, 그 마을들에 대해서만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하고 있다.
 - 그러므로 향후 본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오지마을 등 의료 취약지역을 지자체별로 선정하여 이들 마을에 한정하여 동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는 전국적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및 해경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서비스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군별 평균 소요시간을 협조받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는 건별 소요시간 또는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이 협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처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문화여가와 관련해서는 독서(공공 및 작은 도서관 시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 2012년 읍·면별 도서관 이행실태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오히려 열악해졌다고 보다 이는 통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에서의 도서관 현황은 각 도서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향후 각 도서관 담당자의 정확한 통계 입력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방문화원의 공연 및 전시 현황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도서관 현황과 동일하게 각 지방문화원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정확한 조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문화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나 파악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지자체를 통하여 읍·면 사무소 조사 또는 이장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현재 초고속인터넷 구축은 모든 지역에서 농어촌 주민이 가입을 원한다면 해당 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가입률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입자 현황이 아닌, 가입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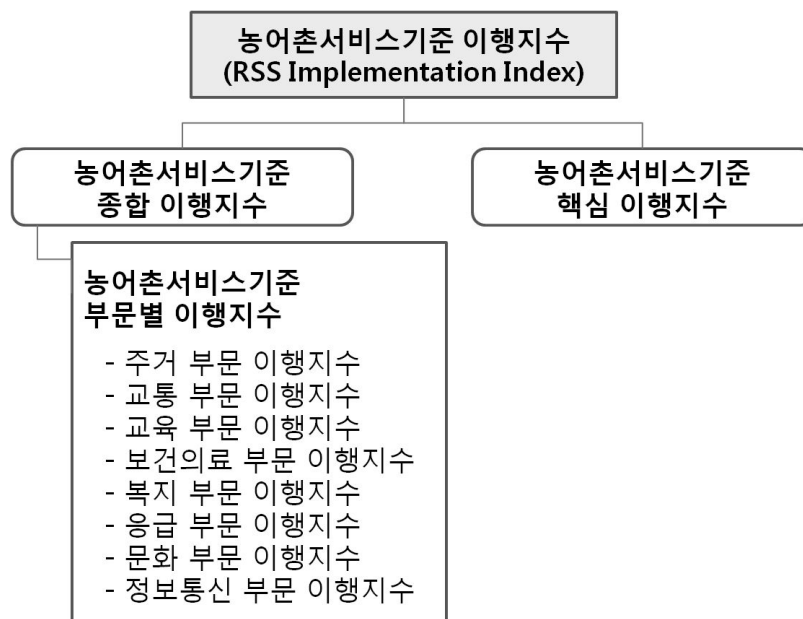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1. 이행실태 평가 개요

- 2011년 연구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를 산출하여 전국 농어촌 시·군들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였다. 2012년 평가에서도 이행지수를 활용한 평가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와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는 시·군의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단계적 추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할 10개의 핵심기준만으로 산출한 이행지수이다.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에서는 지수 구성의 큰 틀은 201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변수 구성, 가중치, 지수 산정 방식 등의 측면에서 지수 체계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 다만 2011년과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큰 폭의 변화는 가급적 피하였다. 장기간의 농어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측정 수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2011년 평가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10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이행지수를 산정하였다. 이와 달리 2012년에는 농어촌 정책 담당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이행지수를 새롭게 산정하였다.
- 2011년의 핵심기준은 주택, 난방, 상수도, 대중교통,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진료서비스, 아동, 영유아, 응급서비스 등이었다. 이 중 지수 산정에 적합하지 않은 고등학교와 진료서비스 항목을 제외하고 8개 변수를 이용하여 핵심지수를 산정한 바 있다.

그림 3-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위한 지수 구성



1.1. 변수 구성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은 <표 3-1>과 같다. 총 22개 항목 24개 평가 변수를 이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산정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정이 없는 한 변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일부 시·군에만 해당하거나 통계자료가 지수를 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 구성에서 제외했던 서비스기준 항목은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에서도 제외하였다. 제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총 9개이다.
 - 여객선, 폐교,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항목은 일부 시·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행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3개 항목).
 - 고등학교, 의견수렴, 진료서비스,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항목은 통계자료가 충족 혹은 미충족의 이분 형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을 가져야 하는 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5개 항목).
 - 경찰서비스(응급) 항목은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집계 방법 등 자료의 문제로 지수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시·군에서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경찰서비스(응급) 항목을 제외하여도 지수값에는 영향이 없다(1개 항목).

표 3-1.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부문	항목	평가 변수	기준 충족값
주거	주택	최소 주거 기준 이상 주택 비율	90%
	난방	읍 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행정리 비율	100%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100%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71%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100%
	인도(人道)	인도 설치 도로 비율	100%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규모학교 중 적정규모학교 육성 비율 ※소규모학교가 없을 경우 100%로 간주	100%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100%
보건 의료	순회방문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 비율	100%
	의약품 구입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100%
복지	노인	취약계층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100%
	아동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영유아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소방 서비스	5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도난 방지	CCTV설치 행정리 비율	100%
문화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월 공연 횟수	1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100%
정보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가입자수/총 가구수	100%
		광대역통합망 가입자수/총 가구수	80%

주: 지수 구성에서 제외한 서비스기준 항목

- 일부 시·군에만 해당하는 서비스기준: 여객선(교통), 폐교(교육), 도서 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응급)
- 통계자료 미비: 경찰서비스(응급)
- 통계자료의 지수 산정 적합성 부족: 고등학교(교육), 의견 수렴(교육), 진료서비스(보건의료), 청소년(복지), 다문화가족(복지)

1.2. 중요도 평가

1.2.1. 중요도 평가 방법

- 각 부문과 개별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부여 문제는 지수를 구성하는 각 평가변수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중요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와 관련있다. 지수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간에 부여하지 않고 개별 지표들을 단순히 합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지표 간에 상대적인 중요도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중요도 차이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지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011년에는 각 부문과 평가변수들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해 각 부문과 평가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촌 사회복지, 농어촌 보건의료, 농어촌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구성하는 각 부문과 항목들 간의 중요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총 14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 하지만 농어촌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농어촌에서의 삶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전문 분야 혹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기 힘들고, 전문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들을 균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 2012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시·군의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시·군의 정책 담당자들은 전문가 혹은 연구자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정책에 개입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접촉도 보다 빈번하여 현실의 요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각 시·군의 정책 담당자들 중에서도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전 분야에 걸친 균형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국 139개 시·군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응답한 95개 설문지를 이용해 부문 및 평가변수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 2011년 평가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에서도 정책 담당자의 중요도 평가에서 산출한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2012년 가중치를 이용해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다시 산출하고, 이를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와 비교하였다.

1.2.2. 부문 및 항목별 중요도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부문에 대한 2011년과 2012년의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3-2>와 같다.
 - 2011년: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 2012년: 시·군 정책 담당자
- 2012년 중요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8개의 부문 중 ‘교육’ 부문의 가중치가 0.210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0.166, ‘복지’ 0.154, ‘주거’ 0.139, ‘교통’ 0.117, ‘응급’ 0.099, ‘문화’ 0.075, ‘정보통신’ 0.040의 순이었다. 가장 가중치가 큰 교육 부문과 가장 가중치가 작은 정보통신 부문 간의 가중치 차이는 0.170으로 부문들 간의 가중치 차이가 큰 편이다.
- 2012년 부문별 가중치와 2011년 부문별 가중치는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복지’, ‘응급’ 부문의 가중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 시·군의 정책담당자들은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들보다 복지 부문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복지’ 부문의 가중치는 2011년 0.105점에서 0.049점 증가한 0.154점이다. 2011년에는 8개 부문들 중 6번째로 가중치가 높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나, 2012년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부문들 중 3번째로 가중치가 높았다.
- 반면, 응급 부문의 가중치는 다소 감소하였다. 2011년 응급 부문의 가중치는 8개 부문들 중 4번째로 큰 0.138점이었으나, 2012년에는 0.039점이 감소하여 전체 부문들 중 6번째로 가중치가 높다.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정보통신’ 등 다른 부문에서는 가중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다.

표 3-2.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가중치

부문	가중치		증감량(B-A)
	2011년(A)	2012년(B)	
주거	0.144 (3)	0.139 (4)	-0.005
교통	0.132 (5)	0.117 (5)	-0.015
교육	0.207 (1)	0.210 (1)	0.003
보건의료	0.160 (2)	0.166 (2)	0.006
복지	0.105 (6)	0.154 (3)	0.049
응급	0.138 (4)	0.099 (6)	-0.039
문화	0.062 (7)	0.075 (7)	0.013
정보통신	0.053 (8)	0.040 (8)	-0.013

주: ()안의 숫자는 각 부문의 가중치 순위이다.

- 항목별 가중치도 2011년 조사와 2012년 조사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주거, 교육,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 주거 부문에서는 상수도 항목의 가중치가 많이 상승하였다. 상수도 항목의 가중치는 2011년에는 0.188점으로 5개 항목들 중 4번째였으나 2012년에는 0.279점으로 5개 항목들 중 가장 높다. 반면 주택과 마을공동시설 항목은 0.235점에서 0.188점으로, 0.193점에서 0.146점으로 각각 0.047점

감소하였다.

- 교통 부문에서는 가중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는 대중교통 항목과 인도 항목 사이의 가중치 차이가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즉 대중교통 항목에 보다 큰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 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 항목의 가중치가 많이 상승하였다. 2012년 평생교육 항목의 가중치는 0.341점으로 2011년(0.230)에 비해 0.111점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은 0.100점 가량 가중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2년 조사에서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보건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2011년 조사에서는 순회방문 항목의 가중치가 의약품 구입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의약품 구입 항목의 가중치가 순회방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각 0.080점의 점수 증감이 있었다.
- 복지 부문에서는 아동 항목의 가중치가 0.039점 가량 증가한 반면 영유아 항목의 가중치가 0.027점 가량 감소하여 부문 내 가중치 순위가 서로 바뀌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노인 항목의 가중치는 0.012점 가량 감소하였다.
- 응급 부문에서는 항목 간 가중치 순위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가중치 순위가 가장 낮은 도난 방지 항목의 가중치가 0.066점 가량 상승하였고, 가중치 순위가 가장 높은 응급서비스 항목의 가중치가 0.087점 가량 감소하여 항목 간의 가중치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다.
- 문화 부문에서는 2011년 조사와 2012년 조사 간의 가중치 차이가 거의 없다. 독서 항목과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항목의 가중치 순위가 바뀌기는 하였으나, 2011년 조사에서도 두 항목 간의 가중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3-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가중치

부문	항목	가중치		증감량(B-A)
		2011년(A)	2012년(B)	
주거	주택	<u>0.235</u> (1)	<u>0.188</u> (4)	<u>-0.047</u>
	난방	0.200 (2)	0.190 (3)	-0.010
	마을공동시설	<u>0.193</u> (3)	<u>0.146</u> (5)	<u>-0.047</u>
	상수도	<u>0.188</u> (4)	<u>0.279</u> (1)	<u>0.091</u>
	하수도	0.184 (5)	0.196 (2)	0.012
교통	대중교통	0.599 (1)	0.628 (1)	0.029
	인도(人道)	0.401 (2)	0.372 (2)	-0.029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u>0.454</u> (1)	<u>0.354</u> (1)	<u>-0.100</u>
	방과 후 학교	0.315 (2)	0.305 (3)	-0.010
	평생교육	<u>0.230</u> (3)	<u>0.341</u> (2)	<u>0.111</u>
보건 의료	순회방문	<u>0.571</u> (1)	<u>0.491</u> (2)	<u>-0.080</u>
	의약품 구입	<u>0.429</u> (2)	<u>0.509</u> (1)	<u>0.080</u>
복지	노인	0.398 (1)	0.386 (1)	-0.012
	아동	<u>0.284</u> (3)	<u>0.323</u> (2)	<u>0.039</u>
	영유아	0.318 (2)	0.291 (3)	-0.027
응급	응급 서비스	<u>0.539</u> (1)	<u>0.452</u> (1)	<u>-0.087</u>
	소방 서비스	0.286 (2)	0.307 (2)	0.021
	도난 방지	0.175 (3)	0.241 (3)	0.066
문화	독서	0.310 (2)	0.292 (3)	-0.018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0.406 (1)	0.415 (1)	0.009
	찾아가는 문화	0.284 (3)	0.294 (2)	0.010
	프로그램			
정보통신	초고속망	1.000 (1)	1.000 (1)	0.000

주: ()안의 숫자는 각 항목의 가중치 순위임.

1.3. 지수 산출 방법

- 지수를 구성하는 각 평가변수들은 값의 측정단위가 서로 다르다.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할 경우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된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점수법, Max-Min 방법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① 표준화 점수법: 표준화 점수법은 각 지표별로 그 값들을 Z-score값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각 지표값들을 평균 0, 표준편차 1의 분포를 갖도록 전환한다. 아래의 공식을 통해 각 지표별로 표준화 점수를 얻을 수 있다.

$$Z_{ij} = \frac{X_{ij} - \overline{X_j}}{s_j}$$

Z_{ij} = i 지역 j 지표의 표준화지수

X_{ij} = i 지역 j 지표값

$\overline{X_j}$ = j 지표의 평균값

s_j = j 지표의 표준편차

- ② Max-Min 방법: Max-Min 방법에 의한 표준화 지수는 자료 중 가장 큰 값을 1, 가장 작은 값을 0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Z_{ij} = \frac{X_{ij} - \min(X_j)}{\max(X_j) - \min(X_j)}$$

Z_{ij} = i 지역 j 지표의 표준화지수

X_{ij} = i 지역 j 지표값

$\max(X_j)$ = j 요인의 최대값

$\min(X_j)$ = j 요인의 최소값

- 종합 지수값 혹은 부문별 지수값은 표준화한 지표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각 지표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각 지표값을 산술평균 혹은 기하평균하여 지수값을 도출한다.
 -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지수값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산출평균을 많이 사용한다.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은 지표 간 대체성(substitutability)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지표의 값이 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특정 지표 값만 크게 변화하면 지수 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특징을 가진다(이내찬, 2012).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출에서는 표준화 점수법을 응용한 지수 산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표준화 점수법에서는 지표값에서 평균을 빼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지수값을 산정한다. 하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에서는 지표값에서 평균을 빼는 대신 기준 충족값을 제하여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 각 시·군의 평가변수값에서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의 기준 충족값을 제한 후 표준편차로 나누고 가중치를 곱하여 부문별 이행지수를 구하였다. 표준편차로 나누어 준 것은 각 평가변수의 단위를 표준화하여 부문별 이행지수로 합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지수 산출 방식은 다른 산출 방식에 비해 지수값만을 보고도 서비스 기준의 충족 정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각 지표값에서 기준 충족값을 제하였기 때문에 지역이 해당 서비스기준을 충족한다면 부문별 이행지수는 0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기준을 초과 충족하였다면 양의 값(+)을, 반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RSS = \sum_{i=1}^8 w_i RSS_i$$

$$RSS_i = \sum_{j=1}^n w_{ij} \frac{x_{ij} - S_{ij}}{\sigma_{ij}}$$

RSS = 농어촌 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

RSS_i = 부문별 이행지수

w_i = 부문별가중치

w_{ij} = 평가변수별 가중치

x_{ij} = 평가변수 값

S_{ij} = 평가변수별 기준 충족값

σ_{ij} = 평가변수별 표준편차

i = 농어촌 서비스기준 부문

j =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변수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에서도 2011년과 동일한 지수 산출 방식을 사용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수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지수 산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출의 목적은 각 시·군별로 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2011년의 지수 산출 방식은 0을 기준으로 서비스

- 기준의 달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지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 또한 2011년과 2012년 간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지수 산출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012년 이행실태 평가 결과

2.1. 부문별 이행지수

- 2011년 이행실태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2년 평가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부문별로 부문별 이행지수를 산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부문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이다. 각 부문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정도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부문 중에서 기준 충족값인 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는 부문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교육, 정보통신, 문화 등의 부문에서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많이 미흡한 편이다.
 - 교육 부문은 -2.955, 정보통신 부문은 -2.456, 문화 부문은 -2.240의 이행지수값을 가진다.
-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부문은 주거 부문이다. 주거 부문의 이행지수값의 평균은 -0.814로 비교적 큰 편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기준을 충족했을 때 가지게 되는 값인 '0'에는 미치지 못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있는 부문은 주거, 보건의료, 문화 부문이다. 주거 부문은 12개, 보건의료 부문은 7개, 문화 부문은 7개 지역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여 다수의 지역들이 기준 충족 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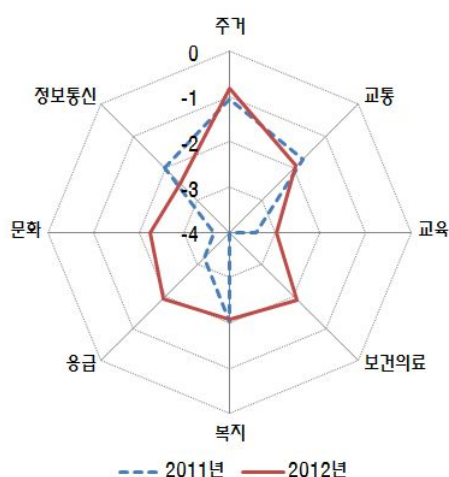
- 주 거: 달성군, 양주시, 계룡시, 경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기장군, 진주시, 광주시, 용인시, 사천시, 양산시, (김해시)
 - 보건의료: 연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김포시, 양양군, 울릉군, 영양군
 - 문 화: 해남군, 증평군, 서귀포시, 양주시, 무주군, 제주시, 하동군, (완주군)
 - 정보통신: (계룡시, 화천군)
- ※ 굵은 글씨로 표시된 시·군은 2011년에 기준 충족 지역에 포함되었던 지역들이다.
- ※ ()안의 시·군은 2011년에는 기준 충족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12년에는 기준 충족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들이다.

표 3-4. 2011년과 2012년의 부문별 이행지수

부문	2011년		2012년	
	평균	기준 충족 지역 수	평균	기준 충족 지역 수
주거	-1.058	6	-0.814	12
교통	-1.729	0	-1.921	0
교육	-3.419	0	-2.955	0
보건의료	-4.000	0	-1.899	7
복지	-2.035	0	-2.088	0
응급	-3.196	0	-1.940	0
문화	-3.654	1	-2.240	7
정보통신	-1.988	2	-2.456	0

- 주 1) 기준 충족 지역이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가 '0 이상'인 지역을 의미
 2) 2011년 이행지수는 2012년에 조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집계하였음

그림 3-2. 2011년과 2012년의 부문별 이행지수 비교



주: 실제 2011년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는 -4보다 작은 값을 가짐

- 2011년²³⁾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각 부문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보건의료, 금융, 문화 부문에서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라는 순회방문 항목의 기준 이행실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²⁴⁾
 - 월 1회 이상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 마을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아직 전체의 절반 이상이기는 하지만, 순회방문을 실시하는 마을이 전체의 50%이상인 시·군도 10여 개가 존재한다. 순회방문을 받는 마을 비율의 평균은 2011년 0.2%에서 2012년 9.3%로 증가하였다.

23)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는 2012년에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문별·항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재산정한 것이다. 이하에서도 2012년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2011년 이행지수를 사용하였다.

24) 순회방문 마을 비율은 지자체 행정 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순회방문 마을 비율이 100%라고 응답한 시·군들도 있었는데 현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 산정에는 행정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 응급 부문에서는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도난방지 항목의 기준 이행실태가 많이 개선되었다.
 - 2011년 11.5%에서 2012년 21.7%로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 문화 부문에서는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항목의 기준 이행 정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기준 충족 읍·면 비율의 평균은 2011년 15.9%에서 2012년 33.3%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정보통신 부문의 서비스기준 이행 정도가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정보통신 기반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정보통신 부문의 서비스기준 이행 정도는 초고속망 가입자 수와 광대역 통합망 가입자 수를 총가구 수로 각각 나누어 측정하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자 수가 줄거나 가구 수가 증가하면 기준 충족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 기반의 약화로 보기는 힘들다.
 - 지역에서 인터넷과 광대역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수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군과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부문에서 도농복합시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주거, 교통 부문에서의 격차가 큰 편이다.
 - 정보통신, 주거, 교통 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프라 투자와 이를 위한 재정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도시화가 진행된 도농복합시의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군과 도농복합시의 부문별 이행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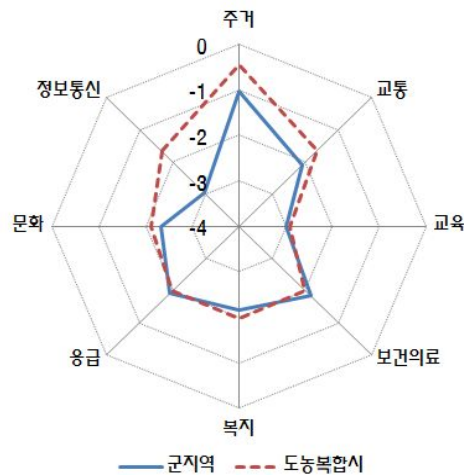


표 3-5.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이행지수

부문	군				도농복합시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평균	기준충족 지역 수	평균	기준충족 지역 수	평균	기준충족 지역 수	평균	기준충족 지역 수
주거	-1.326	0	-1.037	2	-0.631	6	-0.452	10
교통	-1.863	0	-2.086	0	-1.514	0	-1.653	0
교육	-3.381	0	-2.989	0	-3.480	0	-2.900	0
보건의료	-53.584	0	-1.837	4	-53.635	0	-1.999	3
복지	-2.152	0	-2.164	0	-1.848	0	-1.963	0
응급	-3.128	0	-1.915	0	-3.304	0	-1.980	0
문화	-3.699	1	-2.316	4	-3.582	0	-2.117	3
정보통신	-2.381	1	-2.943	0	-1.363	1	-1.666	0

주 1) 기준 충족지역이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가 '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2) 2011년 이행지수는 2012년에 조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집계하였음.

○ 문화, 응급, 복지, 보건의료, 교육 부문에서는 군과 도농복합시 간에 서비스 기준 이행 정도의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보건의료, 응급 부문에서는 군

에서의 이행 정도가 도농복합시보다 약간 양호하게 나타난다.

- 군은 도농복합시보다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순회방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기반시설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 정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1.1. 주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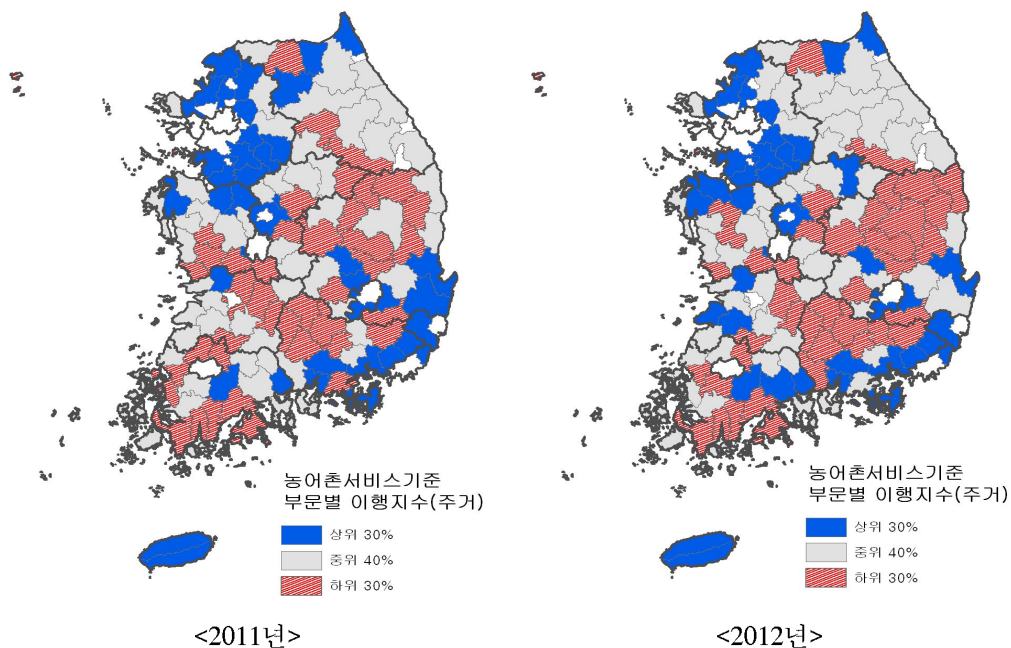
- 주거 부문 이행지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 맞추어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마을 비율, 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마을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으로 구성된다.
- 주거 부문 이행지수 값이 큰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인근에 대부분의 상위 지역들이 집중되어 있다.
 -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시·군은 달성군, 양주시, 계룡시, 경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기장군, 진주시, 광주시, 용인시 등이다. 달성군과 기장군을 제외하면 모두 도농복합시이고, 달성군과 기장군도 광역시에 포함된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군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 반면 지수 값이 작은 지역들은 대부분 경상도와 전라도에 산재해 있다.
 - 이행지수 값이 작은 하위 10개 시·군은 봉화군, 영양군, 성주군, 합천군, 청송군, 군위군, 의성군, 함양군, 예천군, 산청군 등이다. 상위 10개 지역과 달리 모두 군 지역이다.
- 주거 부문은 상당한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의 규모와 경제력은 부문별 이행지수 값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1년과 2012년의 주거 부문 이행지수 값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해보면 군

본적인 변화 없이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12년에 새롭게 상위 30% 내로 진입한 시·군은 5개에 불과하다. 전북에서 3개의 시·군(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새롭게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 나머지 2개의 시·군은 각각 충청북도 제천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이다.

- 주거 부문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비교적 많이 개선된 시·군도 일부 있다. 이러한 시·군들의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의 증가는 주택 개발, 상수도·하수도 개발 등의 기반시설 정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과도 관계가 있다(고흥군, 무안군 등).

그림 3-4. 주거 부문 이행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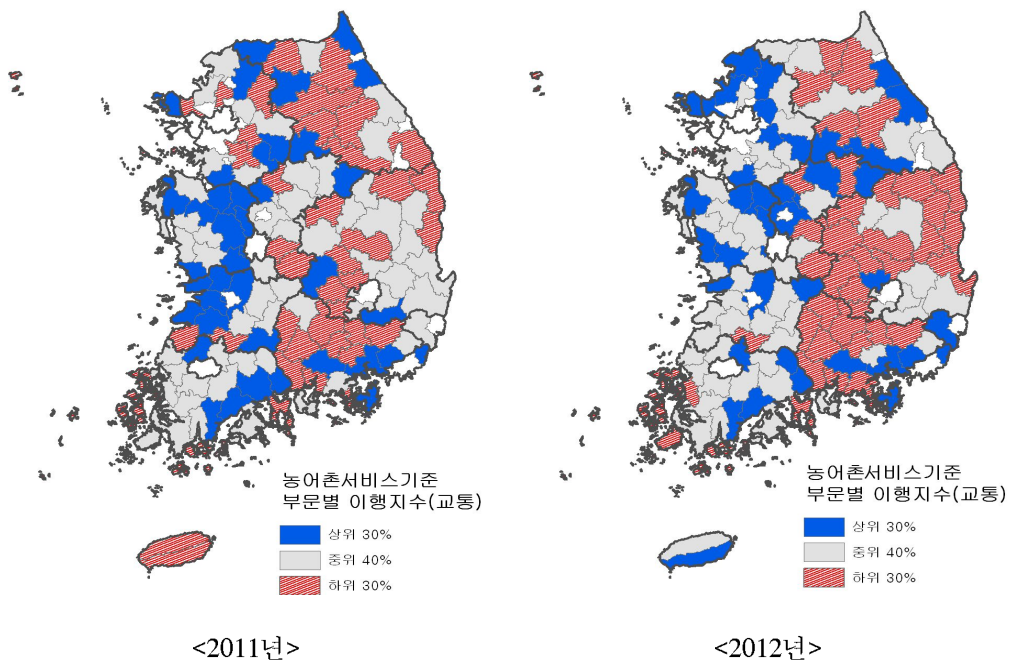
2.1.2. 교통 부문

- 교통 부문 이행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대중교통 기준 충족 마을 비율, 인도 설치 도로 비율 등이다. 대중교통 기준 충족 마을은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 교통 부문 이행지수 값이 높은 상위 30% 시·군들은 대전시 인근 지역을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전주시 등 지방 중소도시 인근에 주로 위치해 있다.
 - 교통 부문 이행지수 값이 높게 나타난 상위 10개 시·군은 파주시, 여주군, 계룡시, 울릉군, 아산시, 군산시, 서귀포시, 장흥군, 김포시, 천안시 등이다.
- 반면 강원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에는 교통 부문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낮은 시·군들이 집중되어 있다. 전라도 시·군들의 교통 부문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교통 부문 이행지수 값이 낮은 하위 10개 시·군은 신안군, 평창군, 성주군, 영동군, 완도군, 여주시, 봉화군, 군위군, 영덕군, 웅진군 등이다.
-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교통 부문 이행지수 값은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도 지역과 해안 및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에서 낮은 편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교통 부문 이행지수 값과 지리적 여건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지역들에서 불리한 지형 여건과 분산하여 거주하는 취락 구조의 특성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 부문 서비스기준 충족을 위해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1년과 2012년의 교통 부문 이행지수 값의 분포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혹은 지방 중소도시 인근 군 지역들에서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에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많이 개선된 시·군이 많이 있다.

- 이들 지역들 중에는 교통 부문 이행지수를 구성하는 대중교통과 인도의 두 항목 중 대중교통 항목의 충족 정도가 개선된 곳이 많다.

그림 3-5. 교통 부문 이행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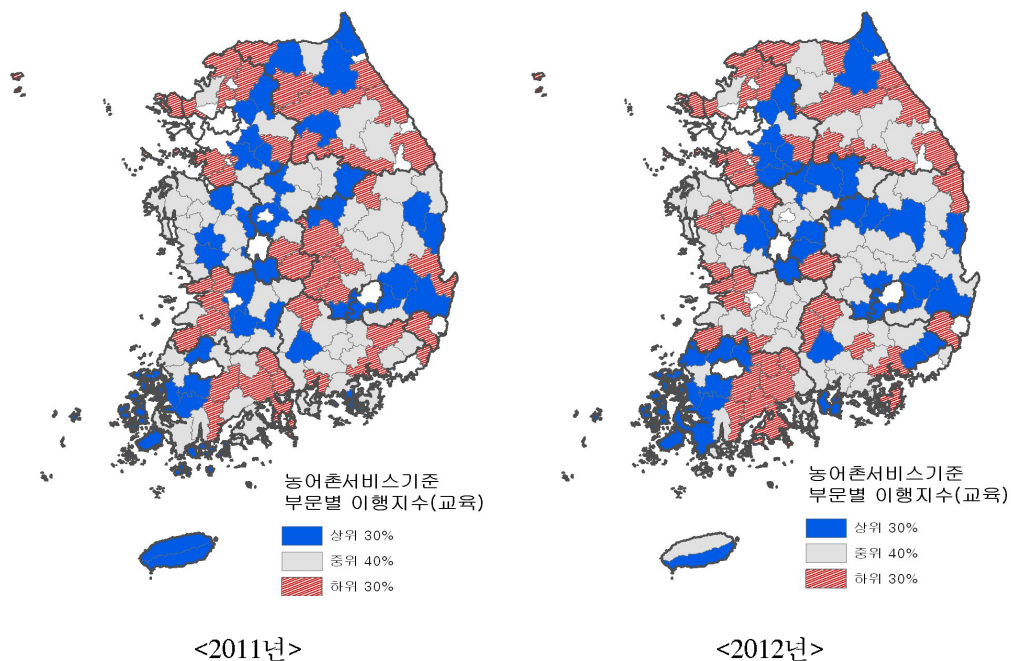


2.1.3. 교육 부문

- 교육 부문 이행지수는 소규모학교 중 적정규모학교 육성 비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평생교육기관 소재 읍·면 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 2012년 교육 부문 이행지수 값 상위 30% 시·군의 분포는 2011년에 비해 대도시 인근으로 보다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1년에 비해 대전광역시 인근의 충청북도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다수의 상위권 시·군들이 집중되어 있다.

- 이행지수 값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은 증평군, 계룡시, 광주시, 연기군, 경산시, 서귀포시, 용인시, 칠곡군, 양산시, 영천시 등이다.
 - 하위 10개 시·군은 평택시, 양양군, 철원군, 김제시, 순천시, 포천시, 홍천군, 연천군, 화성시, 울주군 등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8개 부문 중 교육 부문은 지역의 규모, 경제력, 지형 등 외부 조건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다른 부문보다 기준 달성이 용이할 수 있다. 2011년에 공간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상위권 시·군들이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림 3-6. 교육 부문 이행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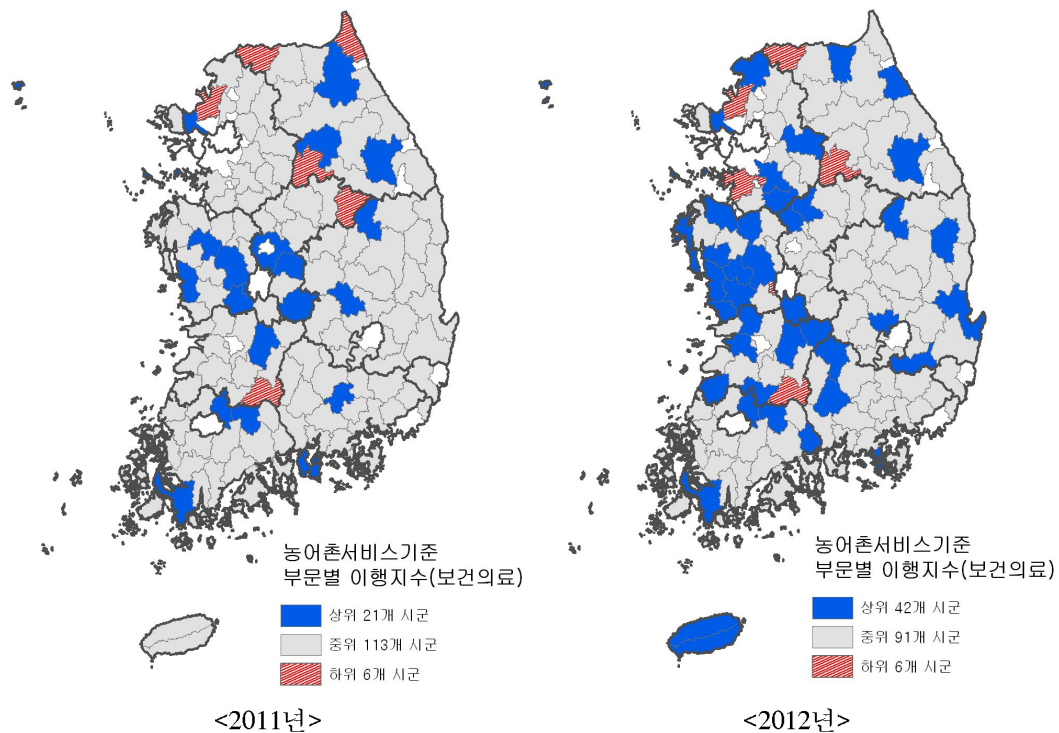


- 하지만 2012년 교육 부문 이행지수 분포에서는 수도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권 인근 시·군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도농복합시의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2.1.4. 보건의료 부문

-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는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의 비율,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등이다.
- 2011년과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은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100%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동일한 이행 점수를 가진 시·군들이 많았다(70개 시·군). 하지만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의 비율이 증가한 시·군이 많아 2011년 보다는 시·군별 충족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2011년에는 최대 113개 시·군이 동일한 이행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시·군들은 모두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의 비율이 0%였다.
-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 값이 상위권인 시·군들은 충청북도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다. 그 외 지역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행지수 값을 가지며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하위 지역이 각각 1~2개씩 분포해 있다.
 -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시·군은 양양군, 연천군, 김포시, 울릉군, 제주시, 영양군, 서귀포시, 고창군, 해남군, 통영시 등이다.
 - 이행지수 값이 작은 하위 6개 시·군은 남원시, 화성시, 파주시, 원주시, 철원군, 계룡시 등이다.
- 2011년에는 동일한 이행지수 값을 가진 시·군이 대부분이라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 경향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의료 순회방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이 나타나면서, 시·군 간에 의료 부문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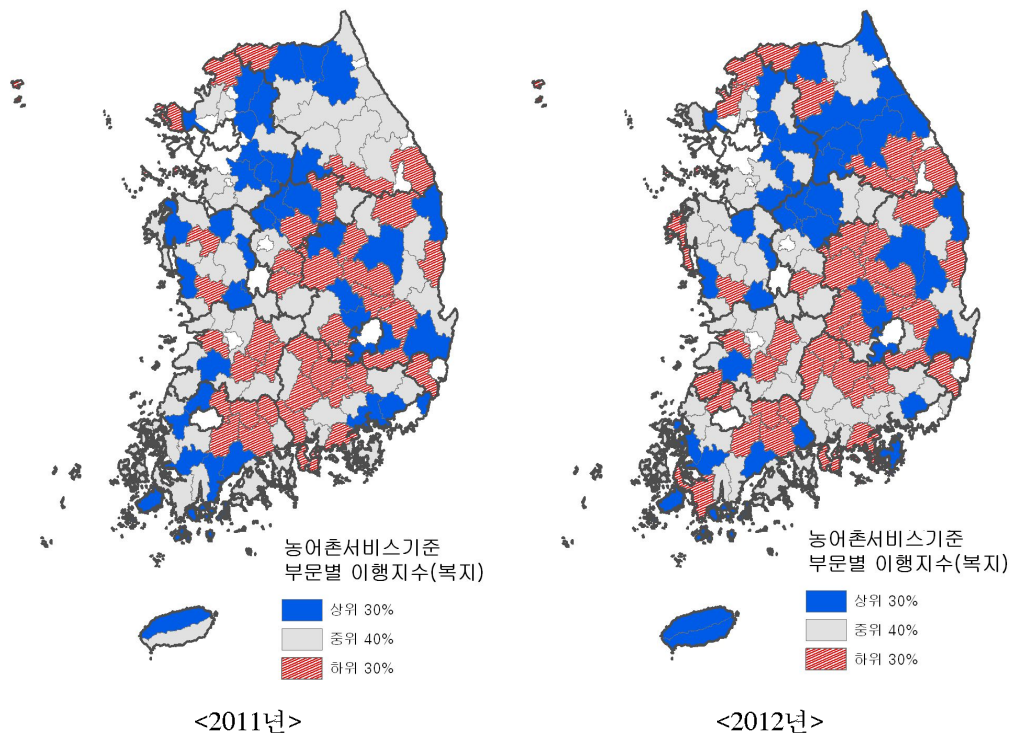
그림 3-7.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 분포



2.1.5. 복지 부문

- 복지 부문 이행지수의 구성 변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방과 후 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등이다.
-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강원도 지역에 복지 부문 이행지수 값 상위 지역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경상도 지역 시·군들은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고 대부분 복지 부문 서비스기준 이행지수 값이 낮은 편이다.
 - 복지 부문 이행지수 값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은 충주시, 울진군, 칠곡군, 아산시, 진천군, 보성군, 안동시, 괴산군, 달성군, 청송군 등이다.
 - 반면 이행지수 값이 낮은 하위 10개 시·군은 연천군, 옹진군, 예천군, 곡성군, 군위군, 화순군, 철원군, 영덕군, 진안군, 영천시 등이다.

그림 3-8. 복지 부문 이행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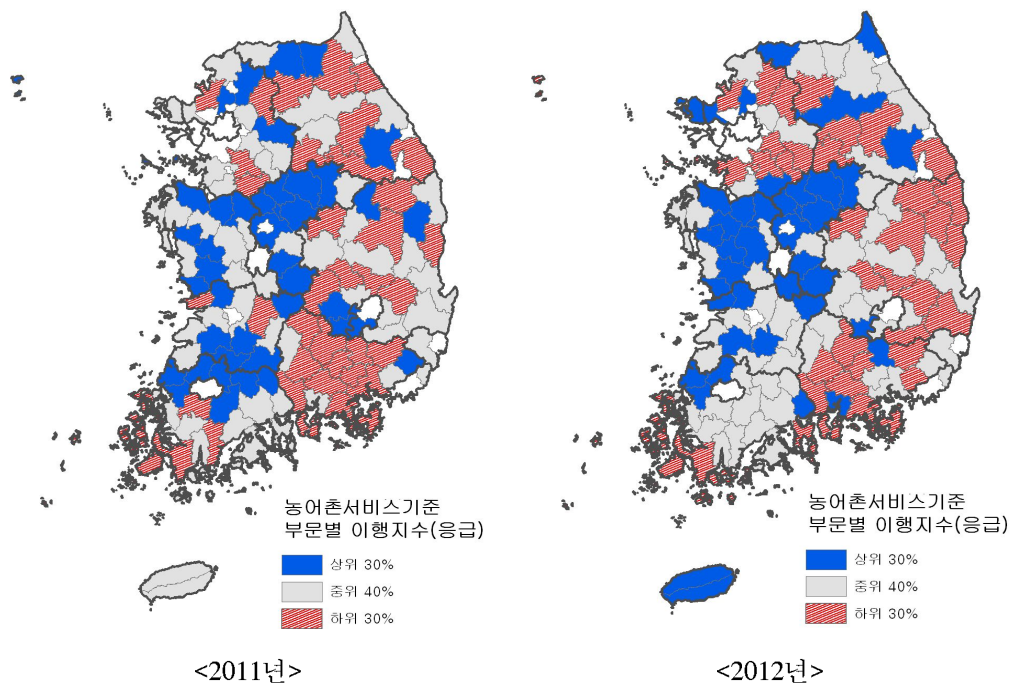
- 2011년에는 대도시 인근에 복지 부문 이행지수 값 상위 지역이 많이 분포하였고,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에서는 복지 부문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복지 부문 서비스기준 충족에서는 아동센터, 보육시설, 청소년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 때문에 인구가 적고 재정 규모가 열악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일수록 이행지수 값이 낮아진다고 판단하였다.
- 하지만 2012년 복지 부문 이행지수 값의 공간적 분포에서는 2011년과는 다른 경향이 발견되었다.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강원도 지역 시·군들의 서비스기준 충족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분포 변화는 복지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증가보다는 방문 서비스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 2012년에 상위 30% 지역에 새롭게 진입한 강원도 6개 시·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노인 항목의 기준 충족 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2.1.6. 응급 부문

- 응급 부문 이행지수는 30분 내 구급차의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5분 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CCTV설치 행정리 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2년 응급 부문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하위 지역들이, 서쪽에는 상위 지역들이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도권에 하위 지역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 응급 부문 이행지수 상위 10개 시·군은 중평군, 무주군, 청원군, 영동군, 계룡시, 음성군, 아산시, 진천군, 사천시, 정읍시 등이다.
 - 이행지수값이 작은 하위 10개 시·군은 울릉군, 춘천시, 통영시, 신안군, 진도군, 고성군(경남), 영덕군, 하동군, 안동시, 의령군 등이다.
- 2011년 응급 부문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와 마찬가지로 2012년의 분포에서도 지형적 조건과 응급 부문 이행지수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난다. 이는 2012년에도 지형적 조건 때문에 응급 서비스 도착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 산간 지역에 응급 부문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9. 응급 부문 이행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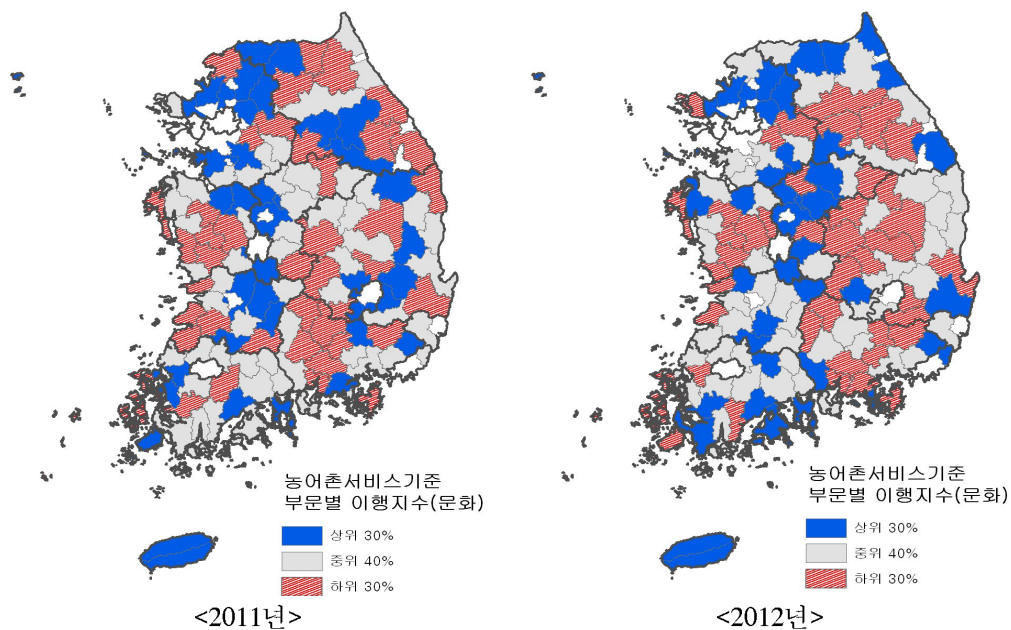


2.1.7. 문화 부문

- 문화 부문 이행지수는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읍·면 비율, 문화 프로그램 월 공연 횟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대상 읍·면 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 2012년 문화 부문 이행지수 값의 분포는 2011년에 비해 변화가 많은 편이다. 2011년에는 수도권 인근 등 주요 지방 대도시 인근에 상위 지역들이 많이 분포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뚜렷한 공간적 분포 경향을 발견하기 힘들다.
 - 상위 지역에서 하위 지역으로 혹은 하위 지역에서 상위 지역으로 2011년과 2012년의 순위 분포가 뒤바뀌는 시·군도 많이 있다.
 - 문화 부문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지역은 해남군, 증평군, 서귀포시, 양주시, 무주군, 제주시, 하동군, 보성군, 기장군, 이천시 등이다.

- 이행지수 값이 작은 하위 10개 지역은 청양군, 상주시, 보은군, 예산군, 영주시, 구미시, 강화군, 안동시, 부안군, 진주시 등이다.

그림 3-10. 문화 부문 이행지수 분포



- 2011년과 2012년의 문화 부문 이행지수 값의 분포 변화는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군들이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다.
 - 2012년 문화 부문 이행지수 값이 많이 증가한 시·군들에서는 대부분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1.8. 정보통신 부문

-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값은 초고속인터넷망 가입률과 광대역통합망 가입률로 구성된다.
 - 초고속인터넷망 가입률은 2008년 기준 시·군별 가구 수 대비 초고속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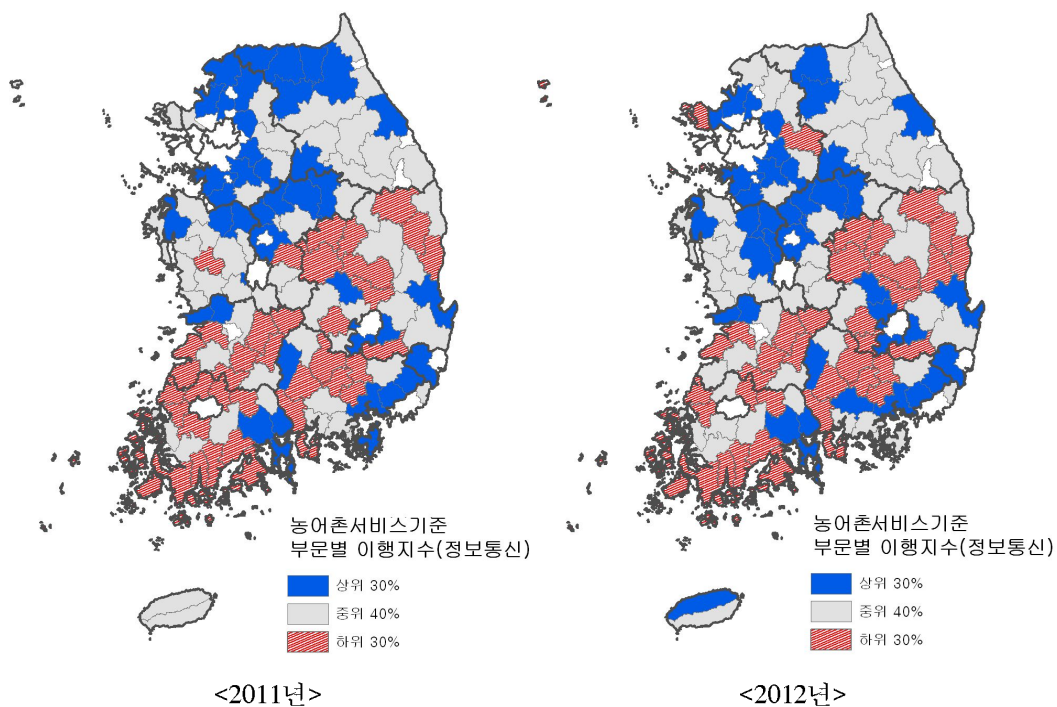
넷망 가입자 수의 비율이다.

- 광대역통합망 가입률은 시·군별 총 가구수 대비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의 비율이다.

○ 2011년과 2012년의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값의 공간적 분포 경향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30%지역은 주로 충청도 이북 지역에 위치한다. 반면 이행지수 값이 작은 하위 30%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충청도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정보통신 부문의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지역은 천안시, 계룡시, 춘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양산시, 함양군, 경산시, 아산시, 창원시 등이다.
- 이행지수 값이 작은 하위 10개 시·군은 울릉군, 함안군, 옹진군, 신안군, 봉화군, 성주군, 의성군, 군위군, 강화군, 영양군 등이다.

그림 3-11.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분포



2.2. 종합 이행지수

2.2.1. 종합 이행지수로 살펴본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2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 모든 서비스기준을 충족한다면 종합 이행지수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합 이행지수 평균값은 -2.053으로 기준 충족값인 0에는 미치지 못한다. 시·군별로도 이행지수가 0 이상인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종합 이행지수 값이 크게 증가한 것은 보건의료 부문의 서비스기준 충족 실태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 도농복합시의 이행지수 평균값이 군의 평균값보다 다소 큰 편이다. 도농복합시의 종합 이행지수 평균값은 -1.921이고 군의 종합 이행지수 평균값은 -2.135이다.

표 3-6.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 비교

지역구분	2011년			2012년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군(n=86)	-9.901	-11.725	-11.001	-0.830	-2.764	-2.135
도농복합시(n=53)	-9.819	-11.395	-10.813	-0.980	-2.572	-1.921
전체 시·군(n=139)	-9.819	-11.725	-10.929	-0.830	-2.764	-2.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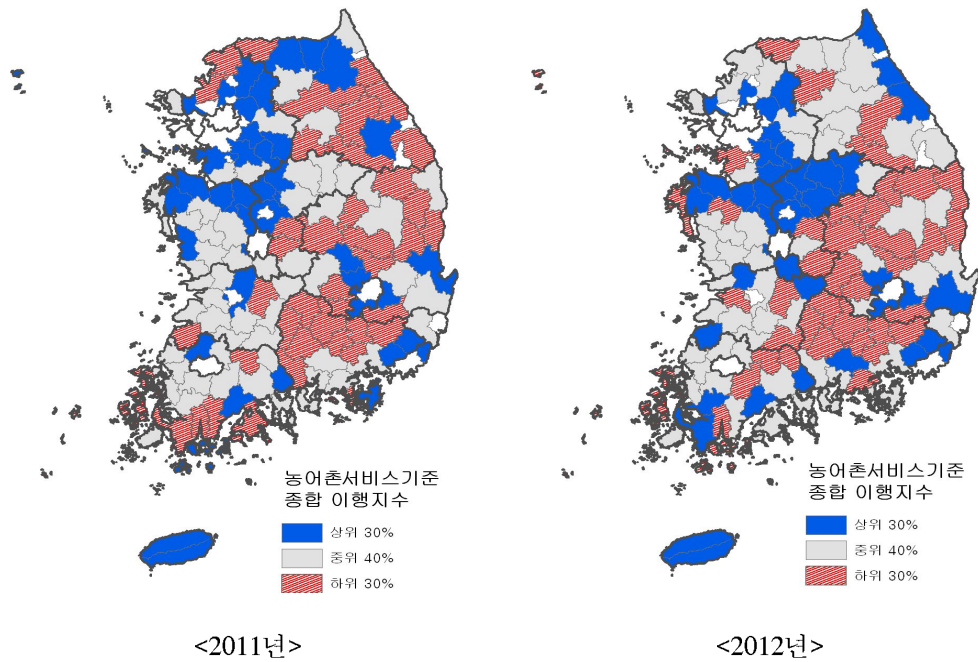
주: 2011년의 도농복합시 수는 마산시가 포함된 54개이며, 전체 시·군은 140개임.

- 앞의 부문별 이행지수에서 보았듯이 도농복합시와 군 간의 이행지수 값 차이는 정보통신, 주거, 교통 부문의 기준 충족 격차에서 기인한다. 이들 부문들은 상당한 인프라 투자와 재정 여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도농복합시와 군 간의 격차를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2.2. 종합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

- 2011년과 2012년의 종합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해보면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 종합 이행지수 값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다. 종합 이행지수 상위 30%지역(42개)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과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의 값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증평군, 서귀포시, 제주시, 김포시, 아산시, 충주시, 광주시, 남양주시, 진천군, 연기군 등이다. 10개 시·군 중 7개가 도농복합시이고 3개가 군이다.
- 반면 종합 이행지수 값이 낮은 하위 30% 지역(42개)은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강원도 지역의 하위권 시·군이 상당 수 줄어들었다.
 - 종합 이행지수 하위 10개 농어촌 지역은 군위군, 의성군, 철원군, 용진군, 봉화군, 의령군, 상주시, 성주군, 합천군, 예천군 등이다. 대부분 군 지역이며, 전형적인 농어촌 오지로 평가되는 곳들이다.

그림 3-12. 종합 이행지수 분포



3. 핵심 기준의 이행실태 평가

3.1. 핵심 기준

- 2011년에는 31개 서비스기준 항목들 중 보다 시급히 달성해야 할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각 시·군의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 영국에서는 2000년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 후 2004년도에 기준 항목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간 4년 정도 동 기준제도를 운영하면서 일

부 기준 항목에서는 서비스 공급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또 어떤 기준 항목에서는 개별 농어촌 지역의 상황이 너무도 달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11개 핵심 서비스기준(실제 13개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연도인 2006년까지 동 기준제도를 운영하였다(김광선 등, 2011).

-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되어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폭넓은 범위와 항목의 기준을 달성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를 먼저 운영한 경험이 있는 영국의 경험을 미리 습득하여 우리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농어촌 지역에 시급히 공급되고 목표치가 달성되어야 할 서비스기준을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광선 등, 2011).
- 정책담당자들이 생각하는 10개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고등학교,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응급 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 2011년 전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2년 정책담당자 조사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보다 깊은 연관을 가진 항목들이 핵심기준으로 선정되었다.
 -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학교, 진료서비스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일수록 서비스기준으로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 여객선, 인도, 폐교, 의견 수렴,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등은 핵심 기준으로 선정된 항목에 비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
 - 소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등도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표 3-7. 농어촌서비스기준 10개 핵심기준

부문	2011년	2012년	서비스기준 내용
주거	주택	주택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상수도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문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정보 통신	-		-

표 3-8. 농어촌서비스기준별 중요성에 대한 정책담당자 조사 결과

부문	항목	핵심기준	
		빈도	응답비중
1.주거	가. 주택	63	52.5%
	나. 난방	38	31.7%
	다. 마을공동시설	27	22.5%
	라. 상수도	76	63.3%
	마. 하수도	33	27.5%
2.교통	가. 대중교통	87	72.5%
	나. 여객선	7	5.8%
	다. 인도(人道)	10	8.3%
3.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35	29.2%
	나. 고등학교	82	68.3%
	다. 폐교	2	1.7%
	라. 방과 후 학교	30	25.0%
	마. 의견 수렴	4	3.3%
	바. 평생교육	42	35.0%
4.보건의료	가. 진료 서비스	86	71.7%
	나. 순회방문	15	12.5%
	다. 의약품 구입	14	11.7%
5.복지	가. 노인	84	70.0%
	나. 청소년	30	25.0%
	다. 아동	35	29.2%
	라. 영유아	50	41.7%
	마. 다문화가족	29	24.2%
6.응급	가. 응급 서비스	73	60.8%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24	20.0%
	다. 소방 서비스	17	14.2%
	라. 도난 방지	22	18.3%
	마. 경찰 서비스	35	29.2%
7.문화	가. 독서	23	19.2%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66	55.0%
	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20	16.7%
8.정보통신	가. 초고속망	41	34.2%

주 1) 정책담당자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기준 10개를 선정하도록 함.

2) 응답비중은 전체 정책담당자(120명) 대비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을 의미함.

- 2011년 전문가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난방,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아동 항목이 제외되었고, 평생교육, 노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난방 항목은 읍 지역 도시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관련된다.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은 상당한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한다.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측면의 고려가 핵심 기준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아동 항목이 제외되고 노인 항목이 추가된 것은 농촌의 고령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 통합 대신 농촌형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다.
 - 평생 교육과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적이다. 농촌 지역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3.2. 핵심 이행지수

- 10개 핵심 기준 항목을 종합하여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를 도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도출에 사용한 항목은 총 8개이다. 고등학교, 진료서비스 항목은 점검을 위한 통계 자료가 지수 산정에 적합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표 3-9.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부문	항목	평가 변수	비고
주거	주택	최소 주거 기준 이상 주택 비율(%)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교육	고등학교	-	제외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보건의료	진료서비스	-	제외
복지	노인	취약계층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영유아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읍면 비율(%)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문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월 공연 횟수	
정보통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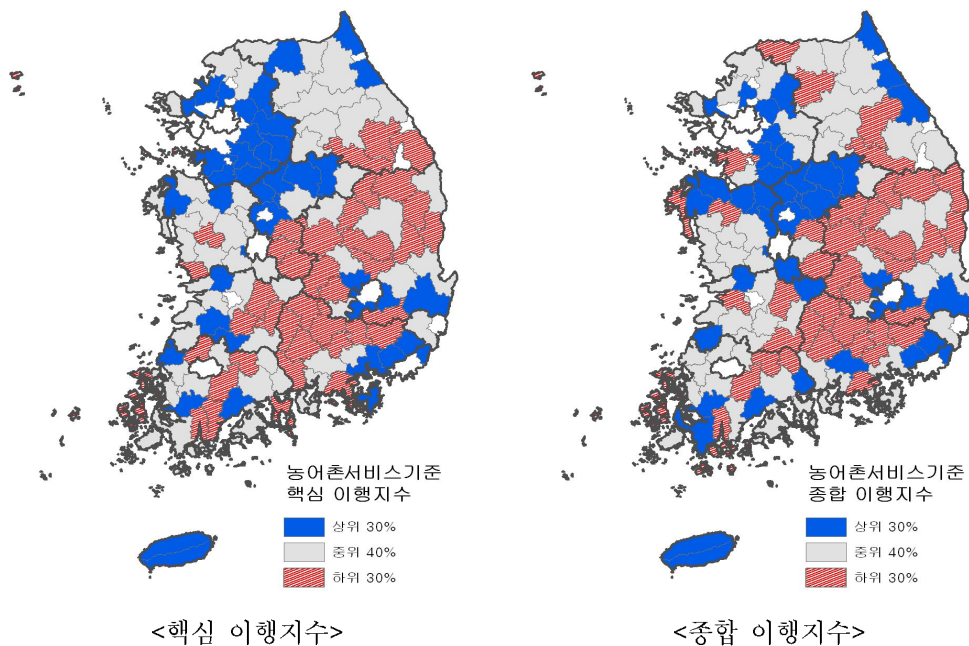
주: 고등학교와 진료서비스 항목은 통계 자료가 지수 산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이행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 핵심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와 유사하다. 종합 이행지수와 마찬가지로 핵심 이행지수 상위 30% 시·군들도 주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핵심 이행지수 값 분포에서는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상위 지역 집중이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 핵심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시·군은 충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달성군, 아산시, 서귀포시, 칠곡군, 중평군, 이천시, 광주시 등이다.
- 핵심 이행지수 하위 30% 시·군들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와 거의 유사하다. 경상도 지역에 하위 30% 시·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 핵심 이행지수값이 작은 하위 10개 시·군은 울릉군, 봉화군, 군위군, 의령군, 의성군, 성주군, 상주시, 거창군, 합천군, 영주시 등이다. 농촌 중에서

도 전형적인 오지로 평가되는 곳들이다.

-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의 핵심 이행지수도 보다 실질적인 주민 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여객선, 폐교, 의견 수렴, 다문화가족, 순회 방문, 소방서비스, 도난 방지 등의 항목을 지수 구성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13. 핵심 이행지수와 종합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 비교



- 모든 항목을 포함한 종합 이행지수와 이를 간소화한 핵심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대도시 인근 지역과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간의 서비스기준 격차는 핵심 이행지수로 판단했을 때 더욱 커진다.

4. 소결: 정책적 시사점

- 3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였다. 95명의 시·군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부문과 항목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문별 이행지수와 종합 이행지수를 산출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의 산출 방식은 201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2011년의 자료에 2012년에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2011년 이행지수를 다시 산정한 후 2012년 이행지수와 비교하였다.
-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정도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미흡한 수준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의 평균값은 -2.053으로 기준 충족값인 0에는 미치지 못하며, 개별 시·군 중에서도 종합 이행지수값이 0보다 큰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 부문별로는 보건의료, 응급, 문화 부문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많이 개선된 편이다.
-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 분석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다. 또한 도농복합시의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군 보다 높다. 인구, 경제 규모, 지리적 위치 등이 기초 생활서비스 공급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낙후한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 하지만 지리적 환경 등이 불리함에도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상당 부분 개선된 지역들이 존재한다. 특히 복지 부문과 문화 부문에서 이러한 시·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복지 부문에서는 교통 환경이 열악한 강원도 시·군의 순위가 많이 상승하였고, 문화 부문에서는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들 중에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시·군들이 다수 존재한다.
-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상승한 시·군들에서는 주로 시설 설치가 아닌 서비스 전달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순회방문 행정리 비율 증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증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로 방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서비스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기반 시설 설치가 힘든 지역에서는 방문 서비스 등으로 개선 가능한 서비스기준이 우선적으로 충족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하지만 주거,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 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문에서는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복지 부문의 영유아 항목, 문화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 등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한 세부 항목에서의 기준 충족 수준도 정체 상태이다.
- 방문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공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시·군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당 규모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서비스기준 항목의 충족을 위해서는 시·군 수준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기준으로는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고등학교,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응급 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2011년과 달리 난방,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아동 항목이 핵심기준에서 제외되었고, 평생교육, 노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핵심 이행지수 값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핵심 이행지수로 평가했을 때 대도시 인근 지역과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간의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제 4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향

1.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역 적합성 분석의 목적과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2011년 관련법 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농어촌 현장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농어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었다.
 - 첫째, 각 지자체의 전 예산을 투입해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모두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예: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도시가스 공급, 인도 설치 등
* 기준 항목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
 - 둘째, 도-농 간 무차별적인 기준 적용이 문제다. 예: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등
 - 셋째, 농어촌의 전문인력 부족이나 인구의 분산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 순회방문(마을별 월 1회 의료 전문인력의 순회방문)
 - 넷째,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채 설정된 기준이 있다. 예: 적정규모학교 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

- 다섯째, 도시적 사고에서가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려면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 예: 소방서비스(5분 내 출동)
- 따라서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시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내용 등에 대한 개정을 목적으로 각 기준 항목별, 세부기준별 현장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 138개 농어촌 시·군의 ‘기획계장’ 또는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5개 시·군에서 응답하였다(응답률 68.8%).
 - * 창원시로 통합된 마산시(도농복합시)와 세종특별시로 편입된 연기군 제외
 - 이와 함께 각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 항목별, 세부기준별로 2014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그리고 기준 항목별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 조사에 응한 95개 시·군 중 군은 63곳(66.3%), 도농복합시는 32곳(33.7%)이며, 시·도별 분포는 <표 4-1>과 같다.

표 4-1. 농어촌서비스기준 적합성 검토 등 설문조사 응답 현황

시·도명	시·군수	비중(%)
경기	6 (15)	6.3
강원	7 (15)	7.4
충북	6 (11)	6.3
충남	13 (15)	13.7
전북	9 (13)	9.5
전남	15 (21)	15.8
경북	20 (23)	21.1
경남	14 (18)	14.7
제주	1 (2)	1.1
광역시 군	4 (5)	4.2
총합계	95 (138)	100.0

주: 광역시 군은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울산 울주군 4곳을 의미함(대구 달성군은 미응답). 괄호는 해당 시·도에 속하는 시·군 수를 의미함.

1.2.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분석 결과

- 현장 적합성을 ‘해당 시·군의 여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이 해당 시·군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적절한 내용인지의 여부’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달성 가능성은 ‘해당 시·군의 관련 시책이나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을 2014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농어촌 지역 현장에 적합하다고 평가된(평가 점수 8점 이상)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은 공통적으로 주거 부문의 공동시설(운영비 지원)과 상수도(지자체 수질관리), 교육 부문의 고등학교(우수고교 육성), 복지 부문의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주 1회 이상), 보건의료 부문의 진료서비스(주요 과목 1차 진료)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도농복합시에서는 면지역 상수도 보급(주거), 폐교 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교육),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 설치(교육),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보건의료), 의약품 구입(보건의료)이 8점 이상의 현장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 반면, 현장 적합성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세부기준)은 여객선(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과 여객선(도서주민 운임지원), 난방(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난방(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도서·벽지 응급(환자이송체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객선 및 도서·벽지 응급에 대한 기준 항목은 일부 도서지역 등에만 해당하므로 전체적인 적합성 평가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대중교통(준공공 교통 프로그램)의 경우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표 4-2.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평가 결과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군지역	도농복합시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7.254	7.844	7.453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4.635	5.969	5.084
	난방: 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5.333	5.500	5.389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8.508	8.781	8.600
	공동시설: 상설프로그램 운영	6.952	7.719	7.211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	7.698	8.406	7.937
	상수도: 지자체 수질관리	8.206	8.813	8.411
	하수도 보급	6.905	7.969	7.263
교통	대중교통: 1일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6.317	7.500	6.716
	대중교통: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운영	5.825	6.563	6.074
	여객선: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3.127	4.844	3.705
	여객선: 도서주민 운임 지원	3.302	4.969	3.863
	인도: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 설치	6.222	7.344	6.600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통폐합)	6.857	7.719	7.147
	적정규모화(통폐합)된 학교에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7.333	7.906	7.526
	고등학교: 시군별 1개교 이상 우수고교 육성	8.175	8.625	8.326
	폐교: 폐교시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7.222	8.094	7.516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	7.508	7.813	7.611
	의견수렴: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7.222	8.156	7.537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서비스 거점시설 운영	6.984	7.719	7.232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7.905	8.469	8.095
	순회방문: 모든 오지마을에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	7.698	8.094	7.832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7.381	8.063	7.611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에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	8.032	8.313	8.126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 청소년센터 도달	7.127	7.469	7.242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 방과후 돌봄시설 도달	6.921	7.656	7.168
	영유아: 영유아 3인 이상 지역에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도달	6.905	7.906	7.242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 서비스 제공시설 도달	6.873	7.406	7.053
	다문화가족: 교통 불편 지역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6.937	7.219	7.032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군지역	도농복합시	
응급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내 현장 도착 (마을별)	7.619	7.813	7.684
	도서·벽지 응급: 헬기·선박 등 환자 이송체계 구축	5.111	6.063	5.432
	소방: 신고 직후 5분 내 소방차 현장 도착(마을별)	6.317	7.406	6.684
	도난방지: 방법용 CCTV 마을별 설치	6.778	7.156	6.905
	경찰: 112신고 후 10분 내 경찰 도착(마을별)	6.889	7.188	6.989
문화	도서: 읍면 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한 도서관 설치	7.254	7.531	7.347
	도서: 대안적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 운영	6.159	7.031	6.45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 운영	6.698	7.656	7.021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해당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관람 가능	6.825	7.906	7.189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해당 문화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 관람 가능	6.635	7.719	7.000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읍면별 연2회 이상	6.302	7.406	6.674
정보통신	초고속인터넷: 모든 마을에 초고속인터넷 망 구축	7.143	7.031	7.105
	광대역통합망: 전체 80% 마을에 망 구축	6.683	6.969	6.779

주: 읍영은 적합도 평가에서 8점 이상의 높은 값을 의미하며, 읍영 및 밀줄의 값은 8점 미만의 낮은 값을 의미함.

○ 현장 적합성 평가 결과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난방(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항목만이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전체 제시된 42개 항목 중 절반이 넘는 26개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강원도에서의 이러한 평가 결과는 도내 농어촌 시·군들이 재정이나 서비스인력 등의 부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각 군의 특성이 워낙 달라 비교적 다양한 항목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타났다.
- 나머지 도 지역에서는 유사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표 4-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평가 결과

시·도	현장 적합성 평가 6점 미만 세부기준
경기	여객선(1일 회 이상), 여객선(운임지원), 도서·벽지 응급, 난방(재생에너지),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강원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문화시설 운영, 경찰서비스, 영객선(운임지원), 도서·벽지 응급, 의약품 구입, 도난방지(CCTV), 여객선(1일 회 이상), 초고속인터넷, 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 다문화가족(서비스제공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광대역통합망, 적정규모학교육생(통폐합),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관람, 응급서비스, 독서(대안적 시스템), 소방서비스, 평생교육, 월1회 이상 프로그램 관람, 의견수렴(교육발전위원회), 인도, 대중교통(1일 3회 이상)
충북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 회 이상),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독서(대안적 시스템)
충남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 회 이상),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도서·벽지 응급, 대중교통(1일 3회 이상)
전북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 회 이상), 난방(재생에너지), 공동시설(상설프로그램), 난방(도시가스),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전남	여객선(1일 회 이상), 여객선(운임지원),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경북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 회 이상), 난방(도시가스), 도서·벽지 응급, 난방(재생에너지)
경남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 회 이상), 도서·벽지 응급,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제주	난방(재생에너지)
광역시 군	여객선(1일 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여객선(운임지원),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초고속인터넷, 도서·벽지 응급, 아동(방과후 돌봄 시설), 광대역통합망, 문화시설운영, 월1회 이상 프로그램 관람, 난방(재생에너지),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다문화가족(서비스제공시설), 평생교육, 의견수렴(교육발전위원회)

주: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한 항목(세부기준)은 뒤에서 제시할 <표 4-5>의 '지역별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평가'에서도 동시에 6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임.

○ 2014년까지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시설(운영비 지원),

상수도(지자체 수질 관리) 두 항목(세부기준)만이 8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즉 농어촌서비스기준 대부분의 항목이 2014년까지 달성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 다만, 군 지역과 달리 도농복합시의 경우 상기 두 항목 외에도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공동시설(상설프로그램 운영), 상수도(면지역 보급), 하수도 보급, 시·군별 우수고교 육성, 노인 재가서비스, 영유아(소규모 보육시설),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등의 항목에서 8점 이상으로 달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 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달성 가능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6점 미만으로 낮게 평가한 항목은 현장 적합성 평가 시 낮게 평가된 항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 여객선(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과 여객선(도서주민 운임지원), 난방(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난방(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도서·벽지 응급(환자이송체계), 대중교통(준공공교통 프로그램) 항목 순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 이들 항목은 도서·벽지 지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기준 항목이거나 도시가스 보급과 같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항목이다.

표 4-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군지역	도농복합시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7.111	8.000	7.411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4.889	6.250	5.347
	난방: 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4.857	5.969	5.232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8.429	8.938	8.600
	공동시설: 상설프로그램 운영	7.349	8.344	7.684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	7.619	8.406	7.884
	상수도: 지자체 수질관리	8.111	8.813	8.347
	하수도 보급	6.810	8.125	7.253
교통	대중교통: 1일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6.333	7.438	6.705
	대중교통: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운영	5.587	6.094	5.758
	여객선: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3.079	4.625	3.600
	여객선: 도서주민 운임 지원	3.286	4.844	3.811
	인도: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 설치	6.127	6.938	6.400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적정규모학교 육성 (통폐합)	6.873	7.625	7.126
	적정규모화(통폐합)된 학교에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6.873	7.688	7.147
	고등학교: 시군별 1개교 이상 우수고교 육성	7.889	8.000	7.926
	폐교: 폐교시 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6.952	7.781	7.232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	7.540	7.688	7.589
	의견수렴: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7.302	7.813	7.474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서비스 거점시설 운영	6.857	7.719	7.147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7.048	7.563	7.221
	순회방문: 모든 오지마을에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	6.905	7.344	7.053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6.746	7.438	6.979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에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	7.714	8.281	7.905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 청소년센터 도달	7.317	7.688	7.442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 방과후 돌봄시설 도달	7.079	7.719	7.295
	영유아: 영유아 3인 이상 지역에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도달	7.111	8.000	7.411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 서비스 제공시설 도달	6.921	7.656	7.168
	다문화가족: 교통 불편 지역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6.841	7.563	7.084
응급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내 현장 도착(마을별)	7.492	7.938	7.642
	도서·벽지 응급: 헬기·선박 등 환자 이송체계 구축	4.921	6.188	5.347

부문	세부기준	농어촌		
		군지역	도농복합시	
	소방: 신고 직후 5분 내 소방차 현장 도착(마을별)	6.492	7.563	6.853
	도난방지: 방범용 CCTV 마을별 설치	6.714	7.688	7.042
	경찰: 112신고 후 10분 내 경찰 도착(마을별)	6.762	7.531	7.021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한 도서관 설치	7.095	7.875	7.358
	독서: 대안적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 운영	6.143	7.438	6.579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 운영	6.984	7.844	7.274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해당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관람 가능	7.190	8.094	7.495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해당 문화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 관람 가능	7.190	8.094	7.495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읍·면별 연2회 이상	6.397	7.813	6.874
정보통신	초고속인터넷: 모든 마을에 초고속인터넷 망 구축	6.937	7.281	7.053
	광대역통합망: 전체 80% 마을에 망 구축	6.635	7.094	6.789

주: 읍영은 적합도 평가에서 8점 이상의 높은 값을 의미하며, 읍영 및 밑줄의 값은 6점 미만의 낮은 값을 의미함.

○ 달성 가능성 평가 역시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6점 미만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이 없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반면, 강원도에서는 제시된 42개 항목 중 27개 항목에 6점 미만의 달성 가능성 평가 점수를 주고 있다.

- 기준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현장 적합성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표 4-5>에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한 항목(세부기준)은 앞의 <표 4-3>에서 나타난 현장 적합성 평가 시 6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들로 두 표에 나타난 항목(세부기준)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표 4-5.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

시·도	달성 가능성 평가 6점 미만 세부기준
경기	여객선(1일1회 이상), 여객선(운임지원), 도서·벽지 응급, 난방(재생에너지)
강원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다문화가족(서비스제공시설), 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 의약품 구입, 여객선(운임지원), 진료서비스, 경찰서비스, 최저주거기준, 여객선(1일1회 이상), 문화시설운영, 순회방문, 의견수렴(교육발전위원회), 도난방재(CCTV), 도서·벽지 응급 평생교육 인도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재가서비스), 적정규모학교육상(통폐합), 하수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독서(대안시스템), 대중교통(1일3회 이상), 상수도
충북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1회 이상),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충남	여객선(1일1회 이상), 여객선(운임지원), 난방(도시가스),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난방(재생에너지)
전북	여객선(1일1회 이상), 여객선(운임지원), 난방(재생에너지),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서·벽지 응급, 난방(도시가스), 인도, 독서(대안시스템)
전남	여객선(1일1회 이상), 여객선(운임지원), 난방(재생에너지),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난방(도시가스), 도서·벽지 응급
경북	여객선(1일1회 이상), 여객선(운임지원), 도서·벽지 응급, 난방(도시가스), 난방(재생에너지)
경남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1회 이상), 도서·벽지 응급
제주	6점 미만 항목 없음
광역시군	여객선(운임지원), 여객선(1일1회 이상), 초고속인터넷, 광대역통합망, 대중교통(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서·벽지 응급, 난방(재생에너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 평생교육, 난방(도시가스), 독서(대안시스템), 아동(방과후돌봄시설)

주: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한 항목(세부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표 4-3>의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평가'에서도 동시에 6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임.

-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항목은 국가적 기준으로서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중앙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과 관계된 기준 항목은

농어촌 지자체가 자구적인 정책 노력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기준 항목의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 간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준의 목표치를 보다 현실화 하는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낮고 재정 여력도 낮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행할 정책 의지가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간 협약에 근거한 별도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2.1.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주민들이 삶의 현장인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였다.
 - 주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 사항, 불만족 사항, 가장 필요한 서비스 항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본 조사는 앞서 제시한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정·보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현장의 KREI 리포터 1천 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대상 KREI 리포터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주민들이다.

-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총 622명이며, 지역별로는 군에서 372명(59.8%), 도농복합시에서 250명(40.2%)이 응답하였다.
- 시·도별로는 경북(109명), 전남(103명)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지역은 50~80명 정도로 응답률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단, 제주도와 광역시에 속한 지역에서는 각각 9명, 7명이 응답하여 지역 전체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다.
 - 또한 응답자는 622명이지만, 질문별로 중복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총합계는 다를 수 있다.

표 4-6. 공공서비스 만족도 설문 응답 현황

구분	응답 빈도	응답 비중(%)
경기	48	7.7
강원	48	7.7
충북	59	9.5
충남	77	12.4
전북	72	11.6
전남	103	16.6
경북	109	17.5
경남	90	14.5
제주	9	1.4
광역시 군	7	1.1
계	622	100.0

2.2.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분석 결과

□ 주거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농어촌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18.7%였으며, 그 외 72.3%는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응답된 것은 난방시설이었으며, 그 다음은 지붕이었다.
 - 「주택법」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을 방의 면적과 수, 목욕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적 측면에서 설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난방시설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자신의 주택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충남과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54.5%로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주택에 대한 불만족 사항

단위: %

구분	만족합	불만족 사항								총합계
		지붕	화장실	부엌	목욕 시설	난방 시설	외벽	주택 구조	기타	
경기	13.8	21.5	7.7	9.2	4.6	20.0	12.3	4.6	6.2	100.0
강원	14.5	14.5	6.6	7.9	6.6	25.0	7.9	9.2	7.9	100.0
충북	12.0	19.6	7.6	7.6	4.3	27.2	7.6	6.5	7.6	100.0
충남	17.2	14.8	10.7	6.6	11.5	15.6	14.8	4.9	4.1	100.0
전북	24.0	17.3	6.7	2.9	8.7	17.3	13.5	6.7	2.9	100.0
전남	12.5	16.1	10.1	6.0	10.1	22.6	11.9	7.7	3.0	100.0
경북	24.7	13.3	5.4	3.0	7.2	22.9	11.4	8.4	3.6	100.0
경남	23.5	10.3	11.0	2.9	11.8	14.0	14.0	9.6	2.9	100.0
제주	54.5	9.1	9.1	0.0	27.3	0.0	0.0	0.0	0.0	100.0
광역시 군	8.3	8.3	16.7	0.0	16.7	16.7	25.0	8.3	0.0	100.0
계	18.7	15.1	8.5	5.1	8.9	20.1	12.0	7.4	4.2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난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어떤 보일러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에서는 전기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지역은 모두 기름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표 4-8.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사용 난방시설

단위: %

구분	도시 가스	연탄	기름	화목	기름 화목 겸용	목재 펠릿	전기	태양열	아궁이	기타	총합계
경기	0.0	2.2	30.4	8.7	4.3	0.0	54.3	0.0	0.0	0.0	100.0
강원	0.0	14.5	20.0	9.1	10.9	0.0	40.0	3.6	1.8	0.0	100.0
충북	1.6	4.9	34.4	6.6	3.3	1.6	44.3	1.6	0.0	1.6	100.0
충남	3.8	1.3	35.9	9.0	10.3	0.0	33.3	1.3	2.6	2.6	100.0
전북	1.3	1.3	64.0	5.3	2.7	0.0	21.3	0.0	1.3	2.7	100.0
전남	0.0	5.4	68.8	4.5	2.7	1.8	15.2	0.0	1.8	0.0	100.0
경북	1.8	5.3	48.7	8.0	6.2	0.0	23.0	5.3	0.9	0.9	100.0
경남	0.0	1.0	56.6	6.1	8.1	1.0	17.2	6.1	3.0	1.0	100.0
제주	0.0	0.0	63.6	0.0	0.0	0.0	18.2	18.2	0.0	0.0	100.0
광역시 군	0.0	0.0	75.0	25.0	0.0	0.0	0.0	0.0	0.0	0.0	100.0
계	1.1	4.1	49.1	7.0	5.8	0.6	27.1	2.7	1.5	1.1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난방을 위하여 어떤 보일러로 바꾸기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태양열보일러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가스보일러가 높게 나왔다(표 4-9).

표 4-9. 농어촌 주민의 희망 난방시설

단위: %

구분	도시 가스	연탄	기름	화목	기름 화목 겸용	목재 펠릿	전기	태양열	아궁이	기타	총합계
경기	29.8	0.0	2.1	2.1	19.1	0.0	10.6	34.0	2.1	0.0	100.0
강원	18.8	4.2	0.0	6.3	10.4	2.1	18.8	39.6	0.0	0.0	100.0
충북	25.9	0.0	5.2	0.0	3.4	5.2	13.8	46.6	0.0	0.0	100.0
충남	22.4	0.0	3.9	1.3	25.0	0.0	10.5	31.6	2.6	2.6	100.0
전북	18.3	2.8	5.6	4.2	7.0	1.4	11.3	47.9	1.4	0.0	100.0
전남	17.5	4.9	9.7	1.9	18.4	1.0	12.6	33.0	1.0	0.0	100.0
경북	31.1	0.9	0.9	1.9	17.0	0.0	14.2	32.1	0.0	1.9	100.0
경남	23.3	1.1	2.2	0.0	20.0	3.3	8.9	38.9	2.2	0.0	100.0
제주	0.0	0.0	11.1	0.0	22.2	0.0	44.4	22.2	0.0	0.0	100.0
광역시 군	57.1	0.0	0.0	0.0	0.0	0.0	14.3	28.6	0.0	0.0	100.0
계	23.4	1.8	4.1	2.0	15.8	1.5	12.8	36.9	1.1	0.7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현재 농어촌의 난방비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유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비해 난방비가 2배 이상 들며, 농어촌 주택의 열효율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난방 기간이 긴 산간지역의 경우 그 비용의 차이는 4~5배로 커질 수 있다.
- 실제로 겨울철 집중적으로 난방하는 기간과 그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5~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난방을 하며, 그 비용은 대부분 51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경북 등 중부지역 또는 산간 지역에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도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겨울철 집중 난방기간

단위: %

구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총합계
경기	0.0	4.3	19.1	29.8	14.9	19.1	12.8	0.0	100.0
강원	0.0	4.2	4.2	20.8	29.2	16.7	12.5	12.5	100.0
충북	0.0	5.4	17.9	23.2	23.2	17.9	7.1	5.4	100.0
충남	1.4	4.2	11.1	40.3	9.7	22.2	8.3	2.8	100.0
전북	0.0	5.7	10.0	25.7	20.0	22.9	12.9	2.9	100.0
전남	0.0	4.1	13.3	31.6	25.5	13.3	10.2	2.0	100.0
경북	0.0	4.1	9.2	20.4	28.6	22.4	9.2	6.1	100.0
경남	0.0	7.8	8.9	32.2	17.8	24.4	4.4	4.4	100.0
제주	0.0	0.0	33.3	11.1	55.6	0.0	0.0	0.0	100.0
광역시 군	16.7	0.0	0.0	33.3	0.0	50.0	0.0	0.0	100.0
계	0.3	4.9	11.6	28.1	21.7	20.0	9.1	4.2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표 4-11. 겨울철 집중 난방기간 소요 난방비

단위: %

구분	50만 원 이하	51 ~100	101 ~150	151 ~200	201 ~250	251 ~300	301 ~400	401 ~500	501 ~700	701 ~1000	1001 이상	총합계
경기	0.0	10.9	23.9	32.6	10.9	10.9	6.5	2.2	2.2	0.0	0.0	100.0
강원	4.3	12.8	31.9	17.0	8.5	17.0	4.3	4.3	0.0	0.0	0.0	100.0
충북	8.0	18.0	28.0	26.0	8.0	6.0	4.0	0.0	0.0	2.0	0.0	100.0
충남	4.3	31.9	26.1	20.3	8.7	4.3	1.4	0.0	1.4	1.4	0.0	100.0
전북	7.2	30.4	26.1	21.7	4.3	1.4	2.9	0.0	0.0	4.3	1.4	100.0
전남	10.6	39.4	25.5	12.8	4.3	4.3	1.1	1.1	0.0	1.1	0.0	100.0
경북	6.3	19.8	29.2	21.9	6.3	7.3	3.1	1.0	2.1	2.1	1.0	100.0
경남	15.7	31.3	31.3	7.2	4.8	6.0	1.2	2.4	0.0	0.0	0.0	100.0
제주	37.5	0.0	25.0	12.5	0.0	12.5	12.5	0.0	0.0	0.0	0.0	100.0
광역시 군	14.3	42.9	28.6	14.3	0.0	0.0	0.0	0.0	0.0	0.0	0.0	100.0
계	8.3	26.0	27.8	18.6	6.3	6.5	2.8	1.2	0.7	1.4	0.4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보급과 관련하여 태양열을 비롯하여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하는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읍지역에 대한 점진적인 도시가스 보급과 더불어 태양열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난방 시설 보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먹는 물과 관련하여 상수도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광역 및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상수도과 관정(지하수, 우물) 등을 사용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역 및 지역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충남의 경우 관정(지하수, 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기도의 경우 특이하게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만큼 관정(지하수, 우물) 사용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농어촌 주민의 상수도 이용 실태

단위: %

구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관정 (지하수, 우물)	기타	총합계
경기	41.7	16.7	41.7	0.0	100.0
강원	42.6	27.7	27.7	2.1	100.0
충북	37.9	31.0	29.3	1.7	100.0
충남	21.0	31.6	47.4	0.0	100.0
전북	61.1	15.3	22.2	1.4	100.0
전남	40.8	32.0	27.2	0.0	100.0
경북	45.9	31.2	21.1	1.8	100.0
경남	42.2	36.7	20.0	1.1	100.0
제주	88.9	11.1	0.0	0.0	100.0
광역시 군	57.2	28.6	14.3	0.0	100.0
계	42.7	28.6	27.8	1.0	100.0

주: 읍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농어촌 주민들은 이러한 먹는 물의 수질이나 안전과 관련하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71.6%). 그러나 불안한 편이라는 응답(28.4%) 또한 높게 나타났다.
 - 하절기 고온현상에 의해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거나, 또는 최근 마을상수도에 농약을 뿌리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외에도 마을상수도, 또는 관정 사용이 활발한 편이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마을상수도에 대해 원수 수질 검사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향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교통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주거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인도(보도)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로 포장 및 정비,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농어촌에서 도로에서 노인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적지 않다. 이는 인도 여부와 많은 관련이 있다. 농어촌에서 인도가 구분된 도로는 많지 않은 반면,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통행 속도는 더욱 빠르기 때문이다.
 - 이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인도 설치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으나, 서비스기준 내용 자체에 강제성이 부족하여 개선하기 쉽지 않다.

표 4-13. 교통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단위: %

구분	과속방지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인도 (보도)	도로 포장/정비	도로 표지판	기타	총합계
경기	27.3	6.8	6.8	20.5	27.3	9.1	2.3	100.0
강원	8.9	8.9	2.2	26.7	26.7	20.0	6.7	100.0
충북	25.5	10.9	12.7	23.6	14.5	9.1	3.6	100.0
충남	11.6	5.8	10.1	29.0	24.6	8.7	10.1	100.0
전북	21.7	17.4	5.8	23.2	13.0	10.1	8.7	100.0
전남	21.6	6.9	8.8	18.6	24.5	19.6	0.0	100.0
경북	18.1	20.0	7.6	14.3	22.9	14.3	2.9	100.0
경남	16.9	14.5	7.2	24.1	21.7	12.0	3.6	100.0
제주	50.0	0.0	0.0	25.0	0.0	25.0	0.0	100.0
광역시 군	0.0	14.3	14.3	42.9	28.6	0.0	0.0	100.0
계	19.1	11.9	7.8	22.0	21.6	13.3	4.3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거주 마을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운행 횟수 부족을 꼽았다. 비록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15분 내에 있기는 하지만 버스 운행 횟수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는 마을에서 1일 3회 이상 대중교통 운영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농어촌 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대중교통을 모든 마을에 대해 운행할 수 없다면, 이러한 지역 자체적인 준공공교통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 교육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부문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는 통학 거리가 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제주도, 광역시의 군 등 대도시 근교 지역에서는 통학거리와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도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의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통학 거리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었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역시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교과부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과 효율성, 주민의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재는 교육 부문에서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장려하는 듯 보이는 항목이 있다.

표 4-14. 교육서비스 관련 불만족 사항

단위: %

구분	만족함	불만족 사항								총합 계
		통학 거리	교사 수	교사 전문성	사교육 기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통학 버스	시설/차재 노후화	기타	
경기	20.5	29.5	0.0	25.0	9.1	2.3	6.8	2.3	4.5	100.0
강원	6.4	38.3	0.0	12.8	6.4	21.3	4.3	4.3	6.4	100.0
충북	19.6	32.1	0.0	12.5	10.7	8.9	7.1	5.4	3.6	100.0
충남	27.8	23.6	0.0	6.9	12.5	9.7	6.9	9.7	2.8	100.0
전북	25.0	19.4	1.4	18.1	13.9	11.1	4.2	2.8	4.2	100.0
전남	22.8	27.7	2.0	8.9	7.9	15.8	9.9	4.0	1.0	100.0
경북	25.8	23.7	1.0	21.6	15.5	4.1	1.0	7.2	0.0	100.0
경남	26.4	23.0	2.3	16.1	4.6	16.1	3.4	1.1	6.9	100.0
제주	22.2	11.1	0.0	22.2	22.2	22.2	0.0	0.0	0.0	100.0
광역시 군	14.3	28.6	0.0	28.6	14.3	14.3	0.0	0.0	0.0	100.0
계	22.8	26.0	1.0	15.2	10.5	11.5	5.2	4.6	3.2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현재 폐교 활용 실태에 대하여 대체로 폐교가 없거나, 있어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운동시설이나 수련시설, 노인을 위한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였다.
- 폐교가 있을 시, 또는 발생할 시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험 및 도농교류 관련 시설,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결국 마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와는 달리 광역시 군지역의 경우 운동·스포츠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보건 의료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농어촌 주민들은 병원 진료에 필요할 경우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읍·면이나 시·군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 경기도, 강원도, 전남, 경북, 제주도 등의 지역에서는 관내 병원과 더불어 인근 타 시·군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 특히 제주도와 광역시의 군에서는 대도시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인근 지역,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5.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 위치

단위: %

구분	거주 읍·면	시·군 관내	인근 타 시·군	대도시	총합계
경기	22.9	52.1	18.8	6.3	100.0
강원	29.2	50.0	12.5	8.3	100.0
충북	33.3	50.9	8.8	7.0	100.0
충남	26.0	66.2	5.2	2.6	100.0
전북	27.1	62.9	7.1	2.9	100.0
전남	41.7	45.6	10.7	1.9	100.0
경북	19.6	57.9	15.0	7.5	100.0
경남	28.1	60.7	5.6	5.6	100.0
제주	33.3	44.4	11.1	11.1	100.0
광역시 군	28.6	57.1	0.0	14.3	100.0
계	28.8	55.9	10.1	5.2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관내 병원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 읍·면, 또는 시·군 관내 병원을 이용하면서도 의료 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외적으로 광역시 군지역에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6. 병원 이용 시 불만족 사항

단위: %

구분	없음 (만족함)	불만족 사항						총합계
		의료기관 부족	의료인력 부족	의료인력 질	낙후된 의료시설	입원치료 어려움	기타	
경기	19.1	12.8	0.0	46.8	8.5	6.4	6.4	100.0
강원	16.7	12.5	4.2	43.8	14.6	8.3	0.0	100.0
충북	10.3	12.1	1.7	62.1	6.9	6.9	0.0	100.0
충남	13.3	4.0	9.3	49.3	13.3	10.7	0.0	100.0
전북	24.3	4.3	5.7	48.6	10.0	7.1	0.0	100.0
전남	14.6	6.8	1.0	50.5	21.4	3.9	1.9	100.0
경북	19.3	4.6	4.6	55.0	7.3	7.3	1.8	100.0
경남	21.8	4.6	8.0	54.0	4.6	5.7	1.1	100.0
제주	33.3	0.0	0.0	55.6	11.1	0.0	0.0	100.0
광역시 군	42.9	0.0	0.0	28.6	28.6	0.0	0.0	100.0
계	18.1	6.7	4.4	51.5	11.3	6.7	1.3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거주지역에 추가적으로 어떤 진료과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내과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특이사항으로는 보통의 농어촌 지역과는 달리 대도시 인근 지역이거나 생활 수준이 높은 경기도와 제주도, 광역시 군 등의 지역에서는 내과와 더불어 정형외과, 안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타났다.

□ 복지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거주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집중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노인을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및 아동으로 나타났다.

- 예외적으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복지서비스 집중 대상

단위: %

구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기타	총합계
경기	19.0	4.8	39.3	9.5	13.1	6.0	7.1	1.2	100.0
강원	20.7	9.8	39.0	8.5	8.5	6.1	6.1	1.2	100.0
충북	15.6	7.3	51.0	3.1	4.2	7.3	10.4	1.0	100.0
충남	21.6	7.2	44.6	4.3	5.8	4.3	12.2	0.0	100.0
전북	21.3	8.2	45.9	4.9	7.4	4.9	7.4	0.0	100.0
전남	14.1	7.6	42.9	11.4	7.1	2.7	13.0	1.1	100.0
경북	13.2	10.4	44.5	10.4	9.9	2.7	7.1	1.6	100.0
경남	15.8	11.2	43.4	5.9	9.9	5.9	6.6	1.3	100.0
제주	22.2	11.1	33.3	5.6	16.7	5.6	5.6	0.0	100.0
광역시 군	28.6	0.0	28.6	7.1	7.1	28.6	0.0	0.0	100.0
계	17.3	8.5	43.6	7.5	8.3	4.9	8.9	0.9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은 지원금(많은 자부담), 한정된 지원 대상을 꼽았다.
 - 특히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에서는 적은 지원금(많은 자부담)을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에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는 현재 취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노노케어 사업이나 직원들을 활용한 사업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이러한 개별 지자체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에서의 평가도 염두해 볼 만 하다.

□ 응급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마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구급차의 지연 도착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너무 멀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광역시에 속하는 군과 제주도의 경우 응급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의하면 응급서비스는 ‘응급 신고 시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착 시간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그 시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지연 도착을 최소화한다면 응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표 4-18. 응급환자 응급조치에 대한 불만족 사항

단위: %

구분	없음 (만족함)	불만족 사항						총계
		지연 도착	전문인력 부족	응급차량/ 장비부족	응급의료 센터부재	모르겠음	기타	
경기	28.3	34.8	10.9	2.2	21.7	2.2	0.0	100.0
강원	22.4	18.4	20.4	4.1	24.5	10.2	0.0	100.0
충북	24.6	36.1	11.5	9.8	13.1	3.3	1.6	100.0
충남	22.8	32.9	13.9	7.6	20.3	2.5	0.0	100.0
전북	29.6	32.4	16.9	5.6	12.7	2.8	0.0	100.0
전남	19.2	29.8	17.3	5.8	25.0	2.9	0.0	100.0
경북	22.0	29.4	14.7	6.4	22.9	3.7	0.9	100.0
경남	31.8	28.4	9.1	9.1	18.2	2.3	1.1	100.0
제주	44.4	0.0	0.0	0.0	44.4	11.1	0.0	100.0
광역시 군	85.7	14.3	0.0	0.0	0.0	0.0	0.0	100.0
계	25.7	29.7	14.0	6.4	20.2	3.5	0.5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응급서비스와는 달리 소방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도착이 늦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 전남의 경우 도착 시간이 늦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경남에서도 지연 도착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또한 충북과 경북은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충남과 전북, 전남, 경남, 광역시 내 군 등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표 4-19. 화재 발생 시 소방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

단위: %

구분	없음 (만족함)	불만족 사항						총합계
		지연 도착	전문인력 부족	장비 부족	마을내 소화전/소 화기 부족	모르 겠음	기타	
경기	34.8	23.9	0.0	8.7	19.6	13.0	0.0	100.0
강원	27.7	23.4	6.4	8.5	14.9	19.1	0.0	100.0
충북	19.0	15.5	13.8	10.3	29.3	12.1	0.0	100.0
충남	27.6	22.4	9.2	5.3	25.0	10.5	0.0	100.0
전북	32.9	17.1	4.3	2.9	24.3	17.1	1.4	100.0
전남	20.4	25.2	11.7	8.7	23.3	10.7	0.0	100.0
경북	25.2	19.6	1.9	4.7	30.8	15.0	2.8	100.0
경남	33.0	21.6	4.5	4.5	22.7	12.5	1.1	100.0
제주	55.6	11.1	0.0	0.0	0.0	22.2	11.1	100.0
광역시 군	42.9	0.0	0.0	0.0	28.6	14.3	14.3	100.0
계	27.7	20.8	6.4	6.2	24.2	13.6	1.1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르면 소방서비스의 경우 신고 접수 후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방서 관할구역이 매우 넓으면서도, 도로 여건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5분 내 도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일례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관내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공용소화기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공용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가 커지기 전에 진압한 사례가 많다.
- 또한 마을 내 소화전 및 소화기가 공급된다면 주민의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다.

○ 마을 내 도난사건이나 대인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안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의 59.3%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충북과 제주도, 경기도 등지에서 불안하다는 의견이 특히 많았다.
- 반면에 광역시에 속한 군지역과 전남의 경우 안전한 편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표 4-20.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계
경기	0.0	29.8	63.8	6.4	100.0
강원	2.1	41.7	47.9	8.3	100.0
충북	0.0	24.6	68.4	7.0	100.0
충남	1.3	34.2	55.3	9.2	100.0
전북	1.4	46.5	49.3	2.8	100.0
전남	1.0	51.0	41.2	6.9	100.0
경북	1.8	33.0	58.7	6.4	100.0
경남	3.3	43.3	48.9	4.4	100.0
제주	0.0	33.3	66.7	0.0	100.0
광역시 군	0.0	71.4	28.6	0.0	100.0
계	1.5	39.3	53.1	6.2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실제로 농작물 및 재산에 대한 도난사고나 대인 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 3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응답자의 75.0%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북 역시 50.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주민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을 내 CCTV를 설치 또는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제주도 주민들은 우범지역에 대한 경찰 순찰 증가를 가장 필요로 했다.
- 도시와 달리 농어촌에서는 야간에 불빛이 많지 않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에는 마을 주요 진입로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마다 자구적인 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일례로 마을에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비상벨 등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초동대응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문화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문화여가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관련 시설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강원도, 경북, 경남 등 산간지역의 경우 관련 시설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두드러진 반면, 경기도, 충북, 충남, 제주도 등의 경우 먼 거리 외에도 관련 비용 지출이 크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거리보다는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하였다.

표 4-21. 문화여가 활동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관련비용 지출	너무 멀리 있음	장비 부족/ 노후화	프로그램 질이 낮음	교통 불편	기타	총합계
경기	34.8	43.5	0.0	0.0	19.6	2.2	100.0
강원	23.4	57.4	4.3	8.5	6.4	0.0	100.0
충북	28.1	49.1	0.0	8.8	12.3	1.8	100.0
충남	35.1	40.5	4.1	6.8	9.5	4.1	100.0
전북	28.6	41.4	4.3	8.6	15.7	1.4	100.0
전남	32.7	50.5	2.0	6.9	6.9	1.0	100.0
경북	21.7	50.9	1.9	8.5	14.2	2.8	100.0
경남	17.6	62.4	1.2	4.7	12.9	1.2	100.0
제주	71.4	28.6	0.0	0.0	0.0	0.0	100.0
광역시 군	42.9	42.9	0.0	0.0	14.3	0.0	100.0
계	28.0	49.5	2.2	6.7	11.8	1.8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으로는 운동 및 건강 증진 활동(요가·체조·게이트볼·스포츠 등)이 3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여행(등산, 낚시 등) 23.9%, 공연 및 전시 관람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의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분기별 1회 전문공연과 월 1회 일반 공연 프로그램 등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급적 측면에서의 기준일 뿐,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의 기준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 실례로 위 결과를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애로사항으로 손꼽은 것이 관련 시설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것과 비용 지출이 크다는 것이다.
 - 시·군별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에서의 공연 프로그램은 대부분 개설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에게는 그 시설에 갈 수단과 시간도,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 수요자 입장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그에 이어서 거의 매일 사용한다거나 1주일에 2~3회 이용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 이러한 인터넷 사용 실태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충북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인터넷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등지에서는 매일 사용하거나 1주일에 2~3회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4-22. 초고속인터넷 사용 실태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1주일에 2~3회	1달에 2~3회	매우 드물게	이용 안함	기타	총합계
경기	24.4	33.3	6.7	15.6	17.8	2.2	100.0
강원	31.9	23.4	8.5	17.0	17.0	2.1	100.0
충북	24.5	24.5	7.5	9.4	32.1	1.9	100.0
충남	29.7	27.0	10.8	4.1	25.7	2.7	100.0
전북	23.5	16.2	7.4	13.2	36.8	2.9	100.0
전남	23.5	22.5	4.9	11.8	36.3	1.0	100.0
경북	19.0	24.8	9.5	16.2	29.5	1.0	100.0
경남	21.3	21.3	6.3	8.8	38.8	3.8	100.0
제주	28.6	42.9	0.0	0.0	28.6	0.0	100.0
광역시 군	0.0	20.0	0.0	20.0	60.0	0.0	100.0
계	23.9	23.9	7.5	11.8	30.9	2.0	100.0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이와 같이 초고속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6.9%를 차지하였다. 이는 농어촌 주민들 역시 인터넷의 유용함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만족도 및 중요도

○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기준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거 부문의 상수도 설치가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주거 부문의 마을공동시설 운영, 교통 부문의 대중교통 운행, 복지 부문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 부문의 응급서비스(구급차) 등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

- 그 밖에 주택의 질, 하수도 설치, 인도 설치, 유치원/초·중고교의 적정 규모화, 초고속 인터넷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 환경 구축 등도 만족하고 있다.

표 4-23. 지역별 가장 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기준
경기	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응급서비스(구급차), 초고속 인터넷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강원	상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적정규모화,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충북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응급서비스(구급차)
충남	주택의 질, 상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전북	주택의 질,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응급서비스(구급차)
전남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경북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경남	주택의 질,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제주	주택의 질, 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광역시 군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응급서비스(구급차)

주: 응답률이 동일하여 6개가 꼽힐 수 있음. 또한 광역시 군과 제주도의 경우 응답률이 저조하여 5개 이하일 수 있음.

-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군과 도농복합시 모두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교통 부문의 대중교통 운행, 복지 부문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 부문의 응급서비스(구급차) 관련 기준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4-24).

- 다만 도농복합시의 경우 하수도 설치에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

표 4-24. 지역 유형별 가장 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기준
군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노인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도농복합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노인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전체	마을공동시설 운영, 상수도 설치, 대중교통 운행, 노인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서비스(구급차)

주: 응답률이 동일하여 6개가 뽑힐 수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서비스기준은 만족스러운 기준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4-25).
 -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기준으로는 주거 부문의 난방비, 교통 부문의 인도 설치,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등을 꼽았다.
 - 그 외에 주거 부문의 주택의 질, 보건의료 부문의 (1차)진료 서비스, 복지 부문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문화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 지역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주거 부문의 난방비, 교통 부문의 인도설치, 복지 부문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군의 경우 문화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리

고 도농복합시의 경우 주거 부문의 주택의 질에 대해서 보다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꼽았다.

표 4-25. 지역별 가장 불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가장 불만족스러운 서비스기준
경기	난방비, 대중교통 운행,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강원	난방비, 하수도 설치, 의약품 구입처 운영,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읍·면별 도서관 설치 및 대출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충북	난방비,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1차)진료 서비스,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충남	상수도 설치,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1차)진료 서비스,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전북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전남	주택의 질, 난방비, 하수도 설치, (1차)진료 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경북	주택의 질, 난방비, 마을공동시설 운영,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경남	난방비, 대중교통 운행,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제주	난방비, 아동 서비스(방과 후 돌봄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광역시 군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주: 응답률이 동일하여 6개가 꼽힐 수 있음. 또한 광역시 군과 제주도의 경우 응답률이 저조하여 5개 이하일 수 있음.

표 4-26. 지역 유형별 가장 불만족스러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가장 불만족스러운 서비스기준
군	난방비, 인도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도농 복합시	주택의 질, 난방비, 인도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전체	주택의 질, 난방비, 인도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향후 가장 중요한 기준,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기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서비스기준을 향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하였는데, 주거 부문의 난방비, 교통 부문의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복지 부문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문화여가 부문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그 외로 주거 부문의 주택의 질,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통신 부문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등의 서비스기준이 거론되었다.

표 4-27. 지역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경기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원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충북	주택의 질, 난방비, 마을공동시설 운영,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충남	난방비, 하수도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북	하수도 설치,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남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경북	주택의 질, 마을공동시설 운영,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경남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제주	난방비, 여객선 운임 보조,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경찰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광역시 군	난방비,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센터 및 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 응답률이 동일하여 6개가 꼽힐 수 있음. 또한 광역시 군과 제주도의 경우 응답률이 저조하여 5개 이하일 수 있음.

- 지역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시도별 결과와 유사하게 주거 부문의 난방비, 복지 부문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등이 향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 다만 군의 경우 주거 부문의 주택의 질, 교통 부문의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농복합시의 경우 문화 부문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초고속 인터넷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지역 유형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군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도농복합시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체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 응답률이 동일하여 6개가 꼽힐 수 있음.

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에 대한 조사,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동 기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적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을 제시한다.
- 개선안 도출의 기본 전제는 국가적 기준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너무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오히려 지역적 차이나 특수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이 모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 재정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그 항목 수를 최소화 하고 보다 농어촌 현실에 적합한 기준으로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장 적합성이나 목표 달성 가능성이 극히 낮은 항목들을 우선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둘째, 첫 번째 제외 과정에 포함된 항목일지라도 농어촌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된 항목은 제외하지 않는다.
 - 셋째, 두 번째 과정까지 거쳐 제외할 항목으로 결정될 지라도 항목 자체의 제외보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개선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내용 개선안을 제안한다.
 - 넷째, 기존 항목의 내용이 특정 부처의 정책 추진방향 내지 사회 내 특정 의견에 경도되어 있다면 농어촌 현실을 보다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19)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표 4-29>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시한다.
- 이는 현행 31개 기준항목 및 44개 세부기준을 29개 기준항목 및 33개 세부기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표 4-29.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방안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세부기준 및 점검방법
1. 주거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총 주택 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수 비율
	나. 난방	도시가스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거용 주택에 난방비를 저감할 수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 화목·등유겸용보일러,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까지 높인다. ²⁵⁾	읍·면 지역 도시가스 미보급 총 가구 수 대비 목재펠릿보일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구 수 비율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체 행정리 수 대비 경로당·마을회관에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행정리 수 비율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면지역 총 인구 수 대비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인구 수 비율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농어촌 시·군 총 인구 대비 공공 하수처리 인구 수 비율
2. 교통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 등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총 행정리 수 대비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가능 행정리 수 비율
	나. 인도(人道)	인근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도로구간 중 소재지(시가지) 외각의 위험구간에 인도를 설치한다. ²⁶⁾	읍·면 소재지 외곽 도로구간 중 위험구간 총 수 대비 인도가 설치된 구간의 수 비율
3. 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각 읍·면별로 1개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를 유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며, 통학시간(편도)이 도보로 30분 이상인 학생에게는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전체 읍·면 수 대비 유치원·초등학교가 각각 또는 통합학교로 1개교 이상 운영되고 있는 읍·면 수 비율 읍·면별 유치원·초등학교 원생·학생 중 통학 시 30분 이상(편도)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의 유무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²⁷⁾	농어촌 시·군 수 대비 관내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있는 시·군의 수 비율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통폐합 학교 수 대비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과 폐교시설 재활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학교 수 비율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세부기준 및 점검방법
	라.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초·중·고교생 총 수 대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비율
	마.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어촌 시·군 수 대비 교육발전위원회·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시·군의 수 비율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²⁸⁾	전체 읍·면 수 대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거나 읍·면 단위 특정 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읍·면의 수 비율
4. 보건 의료	가.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농어촌 시·군 수 대비 관내에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등의 주요과목 진료가 가능한 시·군의 수 비율
	나. 순회방문	오지마을별로 월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서비스를 받는다. ²⁹⁾	전체 오지마을(행정리) 수 대비 월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는 오지마을 수 비율
	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전체 읍·면 수 대비 의약품 소매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는 읍·면 수 비율
5. 복지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시·군의 취약계층 노인 수 대비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수 비율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농어촌 시·군 수 대비 관내에 1개 이상의 청소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 수 비율
	다. 아동	저소득계층 가정 중 취업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초·중학생 자녀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³⁰⁾	취업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학생 수 대비 해당 가정의 자녀로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초·중학생 수 비율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3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소규모 포함)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비중
	마.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	농어촌 시·군 수 대비 관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수 비율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세부기준 및 점검방법
		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시·군 수 대비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수 비율
6. 응급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신고가 발생한 행정리 수 대비 구급차가 30분 이내로 도착한 행정리 수 비율
	나. 소방 서비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노인정, 마을회관 등 마을 내 주요 공동시설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마을 주요 지점에 소화전을 설치한다. ³¹⁾	전체 행정리 수 대비 노인정·마을회관과 같은 마을단위 주요 공동시설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행정리 수 비율
		마을별로 화재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한 실습교육을 소방전문인력에 의해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전체 행정리 수 대비 소방전문인력에 의해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실습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행정리 수 비율
	다. 도난 방지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 지점 및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전체 행정리 수 대비 방범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비율
	라.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경찰(112)신고가 발생한 행정리 수 대비 경찰이 10분 내로 경찰의 도착이 10분 내로 이루어진 행정리 수 비율
7. 문화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전체 읍·면 수 대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수 비율
		읍면별 도서대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 시·군 수 대비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이동도서관 등 대안적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수 비율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상설 문화·예술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농어촌 시·군 수 대비 관내에 문화예술회관 및 기타 상설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수 비율
	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전체 읍·면 수 대비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읍·면 수 비율
8. 정보통신	가.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다. ³²⁾	전체 행정리 수 대비 인터넷 초고속망이 구축된 행정리 수 비율
계	29개 기준항목	-	33개 세부기준

- 25) 개정안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구 비율을 계산한 결과 기준 달성률(2010년 기준)이 1.3%로 나타남. 139개 시·군 중 기준달성률이 1% 이상인 곳은 44곳, 1.5% 이상인 곳은 35곳, 2% 이상인 곳은 27곳, 3% 이상인 곳은 15곳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개정안의 목표치를 2%로 잠정 제시함. 단, 이는 도농복합시 동 지역 보급가구가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 읍·면부의 기준달성률은 제시된 결과의 2/3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26) 개정안의 ‘위험구간’은 다음과 같은 사고발생지역을 의미.
- ① 최근 3년 간 반경 300m 이내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4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3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점
 - ② 최근 1년 간 반경 200m 이내에서 14세 이하 보행 어린이 사고 3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점
 - ③ 최근 1년 간 반경 200m 이내에서 65세 이상 보행노인사고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점
 - ④ 최근 1년 간 반경 200m 이내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점 이상의 사고다발지점에 도로를 따라 차도와 분리된 폭 1m 이상의 보도(인도)를 200m 이상 설치
- 27) 교과부의 150개 농어촌 우수고교 외에도 과목별 특기반 운영 학교, 외고, 특목고 등 포함.
- 2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외에도 읍·면 단위 특정 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
- 29) 오지마을이란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대중교통을 1일 3회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마을이나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의료취약지역으로 구분한 마을(행정리)을 의미.
- 30)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의미.
- 31)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을단위 공동시설인 마을회관·경로당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규정됨(시행령 [별표 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과 같은 마을단위 공동시설 역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실제 이행실태 점검·평가 대상에서 제외.
- 32) 현재 전체 행정리 중 인터넷 초고속망이 구축된 행정리 비중이 99.7%에 달해 동 기준은 기 달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기준으로 유지. 따라서 실제 이행실태 점검·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 5 장

농어촌 공공서비스 부문별 집중 분석: 도로·교통 부문

1. 농어촌 도로·교통 운영 실태 분석의 개요

- 교통은 그 자체가 인간의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의 형태이지만, 다른 서비스 및 재화 구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내 다른 항목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어촌 교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도로는 교통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교통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로와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준다.
 - 도로의 굴곡, 경사, 노면 관리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형태가 달라진다(예: 저상버스 운행).
 - 차도와 구분된 인도의 설치, 신호체계의 개선, 신호등 및 건널목의 설치,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 우기 및 겨울철 노면 관리 등은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다.
-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에는 농어촌 도로 및 교통 서비

스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를 주요 주제로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 첫째,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 도로 실태와 정책 수요’, ‘대중교통(버스) 이용의 애로 점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 둘째, 충남발전연구원의 대중교통 전문가에 원고를 의뢰하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대중교통의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및 준공공 교통 서비스의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 셋째, 현지 조사와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형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를 모범사례로 제시하였다.

2. 농어촌 도로·교통 이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2.1. 농어촌 도로 이용 여건과 정책 수요

2.1.1. 농어촌 도로의 개념과 범위

- 농어촌 도로는 그 개념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도로와 「도로법」 상의 일부 도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는 농어촌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농어촌 도로를 면도(面道), 리도(里道), 농도(農道)로 구분하고 있다.

- 면도: 「도로법」 제8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 리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표 5-1.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농어촌 도로

구분	개념	일반적인 폭원 기준
면도	군도(郡道)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도로폭 8.0m, 포장폭 6.0m
리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도로폭 6.5m, 포장폭 5.0m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이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도로폭 4.0m, 포장폭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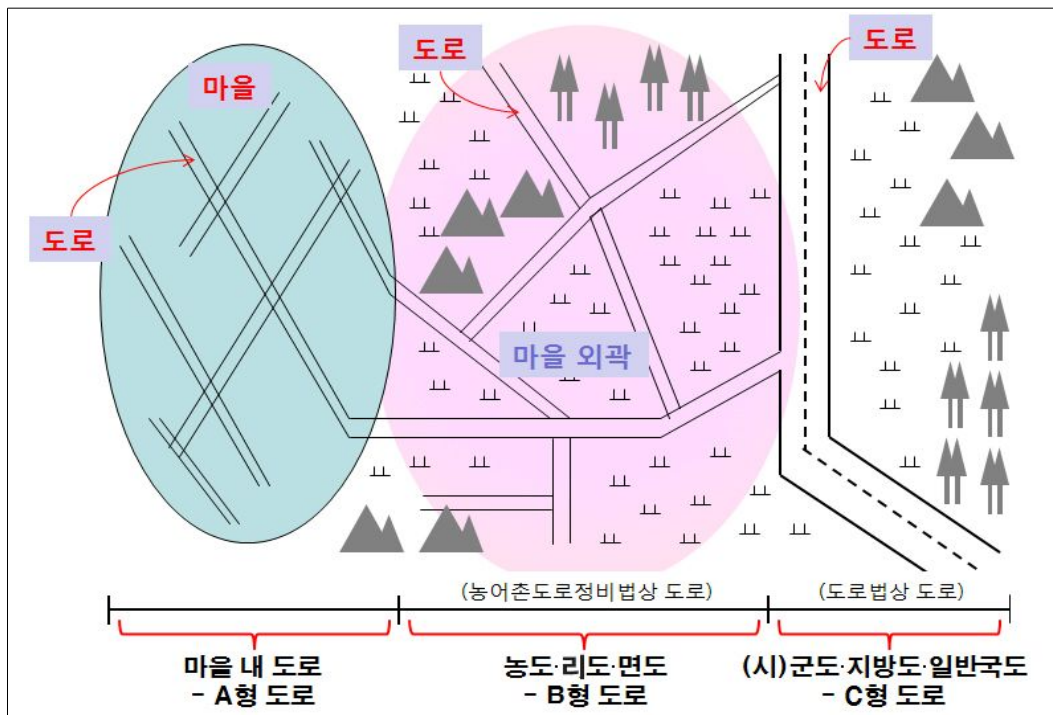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면도, 리도, 농도 외에도 「도로법」 상의 일반국도와 지방도, 시도, 군도 등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로서 농어촌 도로라 할 수 있다.

- 이 외에 마을 내 도로 역시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과 생산·유통활동에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농어촌 도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의 일상공간을 기준으로 농어촌 도로를 <그림 5-1>과 같이 세 부분으로 개념화 하였다.

- 즉, 마을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을 돕는 마을 내 도로(A형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면도·리도·농도(B형 도로), 「도로법」 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C형 도로)를 농어촌 도로에 포함하였다.

그림 5-1. 현실에서의 농어촌 도로



2.1.2. 농어촌 주민의 도로 이용 여건과 정책 수요

□ 마을 내 도로

- 마을 내 도로(A형 도로)의 경우 이용 여건이 대부분 보통(5점) 또는 보통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이용 여건은 10점 만점에 평균 5.202점이다.
 - 이용 여건이 가장 좋게 평가된 항목은 ‘도로의 포장 정도(포장률)’이지만 평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6.086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 이용 여건이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마을 내 도로변의 주차공간 확보’로 나타났다.

표 5-2. 마을 내 도로 이용 여건

마을 내 도로(A형 도로) 이용 여건	평가 점수 (10점 만점)
(1) 도로의 포장 정도(마을 내부도로의 포장률)	6.086
(2) 도로 표면 관리 정도(도로 유실, 파임, 토사 유출, 강우·강설 시 등)	5.324
(3)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 폭	5.188
(4) (수로·하천 등으로) 차량·사람의 추락 및 빠짐 방지 시설(예: 난간)	5.250
(5)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 시설	5.676
(6)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5.270
(7)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	4.876
(8) 도로변 주차 공간의 확보	4.350
(9)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	4.800

○ 마을 내 도로의 여건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로 폭 확장(19.7%)’과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19.4%)’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 외 마을 내 주요 부분에 가로등 설치(17.4%)와 마을 내 도로변 주차공간 확보(13.5%)에 대한 수요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과속방지턱, 추락방지난간 등 사고방지시설 설치(9.6%)와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변 블록거울(반사경) 설치(7.1%)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도·리도·면도

○ 농도·리도·면도(B형 도로)의 이용 여건은 10점 만점에 평균 4.980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다.

- ‘도로의 포장 정도(포장률)’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지만 5.770점에 머물고

있고, 도로 표면 관리 정도(5.214),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 시설(5.146), 도로의 폭(5.13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반면,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4.528)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고, 두 차량의 안전한 교차통행 가능성(4.630), 농어촌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오토바이(사발이) 및 자전거 등의 이동 적합성·안전성(4.714) 등에 대한 이용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농도·리도·면도의 경우 농기계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안전성(4.858)에 대한 이용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농도·리도·면도의 여건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도로 폭 확장(17.6%)’과 ‘두 차량의 교차통행을 위한 대기 공간(16.7%)’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 외에도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15.3%)와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14.4%), 별도의 인도 설치(13.7%)에 대한 수요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 농도·리도·면도의 이용 여건

농도·이도·면도(B형 도로)의 이용 여건	평가 점수 (10점 만점)
(1) 도로의 포장 정도(도로 포장률)	5.770
(2) 도로 표면 관리 정도(도로 유실, 파임, 토사 유출, 강우·강설 시 등)	5.214
(3) 도로의 폭	5.134
(4) (수로·하천 등으로)차량·사람의 추락 및 빠짐 방지 시설(예: 난간)	4.868
(5)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 시설	5.146
(6)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4.854
(7)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	4.528
(8) 오토바이(사발이), 자전거 등의 이동 적합성·안전성	4.714
(9)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안전성	4.858
(10) 두 차량의 안전한 교차통행 가능성	4.630
(11) 차량, 사람 등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전방 시야의 확보	5.068

□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

-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의 이용 여건은 다른 두 유형의 농어촌 도로(A·B형 도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평균 5.724).
- 도로의 포장 정도, 도로의 폭, 도로 표면 관리 정도, 과속방지턱 등 사고 예방 시설, (수로·하천 등으로) 차량·사람의 추락 및 빠짐 방지 시설 등에 대한 이용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안전성, 오토바이(사발이)·자전거 등의 이동 적합성·안전성 등은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되었다.

표 5-4.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의 이용 여건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C형 도로)의 이용 여건	평가 점수 (10점 만점)
(1) 도로의 포장 정도(도로 포장률)	6.786
(2) 도로 표면 관리 정도(도로 유실, 파임, 토사 유출, 강우·강설 시 등)	6.182
(3) 도로의 폭	6.468
(4) (수로·하천 등으로) 차량·사람의 추락 및 빠짐 방지 시설(예: 난간)	6.122
(5)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 시설	6.154
(6)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5.920
(7)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	5.148
(8) 도로 횡단의 안전	5.102
(9) 오토바이(사발이), 자전거 등의 이동 적합성·안전성	4.994
(10)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안전성	4.826
(11) 버스 등 대중교통 승·하차의 편리성	5.368
(12) 차량, 사람 등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전방 시야의 확보	5.700
(13) 도로의 신호체계와 도로표지의 적절한 설치·운영	5.648

-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의 여건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별도의 인도 설치(15.3%)’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승·하차 시설 설치(14.6%)’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아, 이 역시 다른 두 유형의 농어촌 도로(A·B형 도로)와는 다소 다른 정책 수요를 보이고 있다.

- 이 외에도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11.6%)와 건널목 및 신호등 설치(10.2%)에 대한 수요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2.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과 정책 수요

- 농어촌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 빈도 역시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월 2~3회 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³³⁾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듯, 학교나 학원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근(직장·일터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15.2%에 이르는 것을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 농어촌 주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5.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주요 목적

단위: %

교통이용 목적	거의 이용 않음	년 2~3회	월 2~3회	주2~3회	거의 매일	총합계
(1) 통근(직장·일터출퇴근)	59.8	6.6	11.2	7.2%	15.2	100.0
(2) 통학(등교·하교)	70.6	3.0	6.2	5.6%	14.6	100.0
(3) 학원(보습·예체능학원, 기술· 직업훈련소등)	82.8	3.2	4.2	5.0	4.8	100.0
(4) 쇼핑(물품 구매)	46.8	12.0	24.6	14.8	1.8	100.0
(5) 병원 방문(약국 포함)	56.6	13.4	22.6	6.8	0.6	100.0
(6) 문화·여가·운동활동	48.2	15.2	23.8	10.8	2.0	100.0
(7) 친지·친구방문	37.8	22.8	29.4	8.4	1.6	100.0

33) 목적별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설문 피응답자를 포함한 가족의 입장에서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아서이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5-6>과 <표5-7> 참조).
-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800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항목별로는 신체 약자(고령자·장애인·영유아 등)의 이용 편리성(4.144)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농어촌의 고령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 운행(4.256), 버스 운행 형태와 종류의 다양성(4.328), 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4.360), 정류장 대기시설의 확충(4.494), 버스 운행 횟수(4.536), 버스 등 교통수단의 쾌적성(4.846) 등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평가 되고 있다.

표 5-6.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만족도 조사 항목	평가 점수 (10점 만점)
버스정류장까지 걸리는 거리(시간)	6.264
버스 요금	5.084
버스 운행 횟수	4.536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 운행	4.256
버스 운행 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4.360
버스 운행 형태와 종류의 다양성	4.328
버스 등 교통수단의 쾌적성	4.846
정류장 대기시설의 확충(정류장 이용의 편리성)	4.494
운전기사의 친절(친절한 서비스)	5.032
규정된 버스 운행시간의 준수	5.230
목적지까지의 연계 대중교통(환승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5.022
신체 약자(고령자·장애우·영유아 등)의 이용 편리성	4.144

○ 농어촌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 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버스 운행 횟수의 부족’(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더해 원하는 시간에 버스가 없는 점(16.7%)과 버스 운행 시간에 대한 정보 부족(14.2%) 등의 문제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로 지적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지만, 앞서 제시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표 5-7.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애로점

단위: %

대중교통 이용 애로점 조사 항목	응답 비중
거리가 너무 먼 버스정류장	5.1
너무 비싼 버스 요금	6.8
버스 운행 횟수의 부족	22.3
원하는 시간에 없는 버스	16.7
버스 운행 시간 정보 부족	14.2
버스 운행 종류 및 유형 다양성 부족	6.0
오래된 버스 등 교통수단 낙후	3.7
정류장 대기시설의 부족	5.5
운전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	5.2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운행시간	3.9
너무 많이 갈아타는 번거로움	1.2
환승 시(갈아 탈 때) 할인요금 미적용	1.5
연계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	3.5
신체 약자의 이용 불편	3.5
기타	0.9
총합계	100.0

○ 대중교통의 이용 만족도와 대중교통 이용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관련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운행 횟수의 증가(25.4%)’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 외에도 ‘대중교통 운행 시간의 연장(16.4%)’과 ‘목적지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환승 수단 확대(12.9%)’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다.
- 마을까지 들어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10.0%), 기존노선에서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제공(9.4%),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주 가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확보(8.3%) 등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8.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관련 정책 수요

단위: %

농어촌 대중교통 정책 수요	응답 비중
현행 방식의 버스 노선제도 유지	3.2
대중교통 운행 횟수의 증가	25.4
대중교통 운행 시간의 연장	16.4
목적지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환승 수단 확대	12.9
마을까지 들어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10.0
기존노선에서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제공	9.4
마을에서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제공	7.3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주 가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확보	8.3
콜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 지원	3.7
개인 승용차를 마을주민이 공동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재정 지원	3.0
기타	0.4
총합계	100.0

○ 또 다른 유형의 대중교통 관련 정책 수요로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대중교통 수단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대형버스보다는 소형버스와 중형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인승 미니버스 역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여건이 비교적 좋지 못한 농어촌 지역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규모를 현재보다 소형화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5-9. 농어촌 대중교통 규모에 대한 수요

단위: 회, %

농어촌 대중교통 규모	응답 빈도	응답 비중
승용차 규모의 초미니 교통편	5	1.0
15인승 미니버스	85	17.0
25인승 소형버스	167	33.4
32인승 중형버스	164	32.8
42인승 이상 대형버스	76	15.2
기 타	3	0.6
총합계	500	100.0

주: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고 경형을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을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중형을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및 35인승 이하, 대형을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농어촌 대중교통 규모를 <표 5-9>와 같이 구분하였음.

3. 농어촌 대중교통 공급·이용 실태: 충청남도 사례³⁴⁾

3.1. 대중교통 운영 현황

-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 기준 9개사의 운수업체가 9개 군 지역에서 총 314대의 농어촌버스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군 지역의 전체 운행 노선 수는 659개이며, 이 중 예산군이 140개로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청양군이 35개로 가장 적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 버스 1대가 담당하는 운행 노선 수의 충청남도 평균은 2.1개 노선이며, 금산군이 4.3개 노선으로 충청남도 평균보다 2.1배로 가장 많고 가장 열악함을 알 수 있다.

34) 이하 충청남도 사례조사는 충청남도 관내 9개 군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 운전사 1인이 담당하는 노선 수는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평균 1.4개 노선이며, 이 중에서 금산군이 3.0개 노선으로 충청남도 평균보다 2.1배 높고 가장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의 2011년 기준 버스 노선 수는 총 659개이며, 운행 횟수는 총 4,062회이다.
 - 이 중에서 비수익노선은 농어촌지역 전체 280개로, 전체 659개 노선 중에서 42.5%를 점유하고 있다.
 - 벽지노선은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전체 142개로, 전체 659개 노선의 21.5%를 점유하고 있다.

표 5-10.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버스노선 현황(2011년 12월 기준)

업체명	전체 노선				비수익노선		비수익 노선 점유율 (%)	벽지노선		벽지 노선 점유율 (%)
	일반		좌석							
	노선 수	횟수	노선 수	횟수	노선 수	횟수				
소계	659	4,062	4	43.0	280	1,761	42.5	142	866	21.5
예산교통	140	855	-	-	98	514	70.0	21	122	15.0
서천여객	38	243	-	-	9	50	23.7	19	77	50.0
당진여객	110	812	-	-	33	260	30.0	15	169	13.6
홍주여객	63	726	-	-	45	420	71.4	2	12	3.2
태안여객	71	464	4	43.0	-	-	-	27	232	38.0
부여여객	66	294	-	-	18	110	27.3	22	78	33.3
세종교통	59	350	-	-	47	273	79.7	10	35	16.9
한일교통	77	167	-	-	18	82	23.4	13	54	16.9
청양교통	35	151	-	-	12	52	34.3	13	87	37.1

주: 당진군은 2012년 1월 당진시로 승격되었으며, 연기군은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

자료: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내부자료, 2011.

○ 최근 3개년 동안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는 인원이 연평균 6.9%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양군이 30.8%의 속도로 감소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금산군 15.4%, 서천군 14.6% 순이며, 이들 3개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속도가 빨라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5-11.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버스 수송인원 추이(최근 3개년)

구분	2009년 수송실적(명)	2010년 수송실적(명)	2011년 수송실적(명)	연평균증감률(%)
소계	24,296,523	22,071,474	21,077,553	-6.9
예산군	3,224,344	3,183,672	3,095,756	-2.0
서천군	1,709,596	1,328,219	1,247,113	-14.6
당진군	5,791,958	5,417,787	5,182,247	-5.4
홍성군	3,879,449	3,841,713	3,702,513	-2.3
태안군	3,103,448	2,937,374	2,789,577	-5.2
부여군	2,235,144	2,076,031	1,983,052	-5.8
연기군	1,831,545	1,666,040	1,591,999	-6.8
금산군	1,176,747	914,835	841,804	-15.4
청양군	1,344,292	705,803	643,492	-30.8

주 1) 당진군은 2012년 1월 당진시로 승격되었으며, 연기군은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

2) 광역BIS, BIS/BMS센터, 관련 서비스 제공 포함.

자료: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내부자료.

○ 이러한 이용객 감소로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버스 운수업체의 대당 월 운송수지 적자는 재정 지원을 제외하면 일반버스가 1대 당 월 181만 원, 좌석버스가 229만 원에 이르고 있다.

- 이를 운행 대수를 고려하여 연간으로 환산하면, 재정 지원을 제외하여도 약 68억 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12. 농어촌지역 버스 운수업체 운송수지 현황(2008년)

구분	운송수입	운송비용	운송수지	재정지원	실 운송수지	실 적자율(%)
일반버스	7,250,321	12,804,605	-5,554,284	3,742,252	-1,812,032	-14.2
좌석버스	9,429,459	15,458,427	-6,028,968	3,742,252	-2,286,716	-14.8

자료: 충남버스조합,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산출 연구, 2009. 5.

- 운송수지 악화와 함께 충청남도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부채 규모는 약 159억 원으로 부채율이 144%에 이르고 있다.
 - 동일 업종인 시내버스 부채율이 77%, 시외버스 부채율이 61%임을 감안할 때,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3.2.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

- 충청남도 내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 84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주민의 61.0%가 평소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승용차나 승합차, 트럭 등의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은 28.3%, 오토바이 이용자 비중은 4.5%, 자전거는 4.4%로 나타났으며, 주로 도보로 이동하는 주민의 비중은 1.8%이다.
- 자가용이 없는 농어촌 주민의 경우, 거의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비중이 53.6%에 이르고 있으며 일주일에 2~3일 정도 이용하는 주민까지 포함하면 75.2%에 이르고 있다.
 -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표 5-13. 농어촌 주민의 연간 버스 이용 일수

단위: %

연간 버스 이용 일수		거의 매일	2~3일/주	2~3일/월	2~3일/년	총계
자가용 소유 여부	소유	27.5	13.1	35.6	23.7	100.0 (396명)
	미소유	53.6	21.6	21.4	3.4	100.0 (444명)
전체		41.3	17.6	28.1	13.0	100.0 (840명)

○ 농어촌 주민들은 통근·통학(49.0%)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획득 목적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병원 이용(46.6%)이 그 목적이 되고 있다.

- 병원 이용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겠지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따른 주민들의 버스 이용 목적에 맞추어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5-14. 농어촌 주민의 버스 이용 목적

단위: %

구분		통근(通勤)	통학(通學)	학원 등	병원	쇼핑	기타
전체		26.2	22.8	1.2	46.6	2.0	1.2
성별	남성	26.3	23.6	1.7	45.6	1.4	1.4
	여성	26.2	21.9	0.7	47.6	2.6	1.0
연령	10대	0.0	95.7	3.6	0.7	0.0	0.0
	20대	45.7	39.3	1.4	12.9	0.7	0.0
	30대	43.2	0.7	1.4	50.4	3.6	0.7
	40대	30.7	0.7	0.0	63.6	2.9	2.1
	50대	27.1	0.0	0.0	67.9	4.3	0.7
	60대 이상	10.7	0.0	0.7	84.3	0.7	3.6

주: 기타는 오락·스포츠·레저·친지방문을 의미.

- 농어촌에서는 버스 운행 횟수가 많지 않은 것 외에도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까지 상당 거리를 걸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행 속도를 시속 4~5km로 간주할 때 1.3~1.7km(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농어촌 주민의 비중이 6.7%에 이른다.

표 5-15. 버스 정류장까지의 보행 시간

구 분	10분 미만	20분 미만	30분 미만	40분 미만	40분 이상
전체(명)	364	419	34	18	5
점유율(%)	43.3	49.9	4.0	2.1	0.6

- 대중교통(버스) 서비스에 대한 농어촌 주민들의 불만 정도를 조사한 결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배차 간격, 운행 정보 제공 등에 있어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운행 횟수가 적어 배차 간격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정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원하는 버스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운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 버스를 탔다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하는데 적절한 연계 수단이 없다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표 5-16. 버스 이용 시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불만

단위: %

구분	정류장까지 거리	정류장 대기시설	운행시간 정시성	연계성	요금 지불방식	배차 간격	운행정보제공	요금수준	운행 시간
불만족	27.0	33.9	31.3	52.6	18.0	49.8	46.7	35.1	33.3

- 이와 같은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불만족 실태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 배차 간격, 운행 시간의 정시성, 정류장 대기시설, 운행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결국 버스의 운행 빈도 및 운행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인식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은 비교적 먼 거리를 걸어와 도착한 정류장에서 다시 오랜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정류장 대기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앞서 불만 사항에서는 연계성에 대한 불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선 요구 시 동 사항에 응답 비중은 높지 않다. 이는 연계 교통의 유무는 2차적인 것이고 일단은 마을에서 타고 나갈 대중교통조차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5-17.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

단위: %

구분	정류장까지 거리	정류장 대기시설	운행시간 정시성	연계성	요금 지불방식	배차간격	운행정보 제공	요금수준	운행 시간
1순위	7.8	17.8	17.1	14.0	4.3	23.2	10.3	2.6	2.9
2순위	6.5	12.3	14.4	14.9	7.6	19.1	17.2	4.2	3.8
3순위	8.2	12.5	15.2	13.4	7.7	14.8	16.1	6.5	5.6
4순위	7.2	13.1	13.8	12.8	6.8	13.9	15.0	10.1	7.4
5순위	11.3	11.9	9.4	11.4	8.4	9.7	15.2	14.0	8.7

○ 향후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통수단 운행 횟수를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수요자들이 정확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형 버스 정보 제공 및 운행 관리 시스템(BIS)이 구축·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연계된 최저 교통서비스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동 법(안)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운행 기간, 배차 간격 등의 지표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최저 교통서비스기준'이 담겨있다.

4. 선진국의 대중교통 정책 동향과 준공공 교통 서비스 사례

- 우리 농어촌은 장거리 노선 과다, 긴 배차 간격, 정류장까지 긴 접근시간 등으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수송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역 순환노선 개발, 생활권역 내 주요 교통 결절점을 연계·순환하는 목적형 버스노선 도입, 버스노선의 다양화 등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에서 소형 승합차(11~15인승) 운행을 허용하였다.
 - * 충북 음성군의 경우 소형 승합차 운행 시 운송 원가가 약 42% 감소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탄력적 대중교통을 이미 확대해가고 있는데, 이들의 정책 동향에 대한 검토는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1. 선진국의 농어촌 대중교통 정책 동향

-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교통 약자의 기동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려는 데에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 정책 결정의 기준이 교통 수요(demand)보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교통 필요성(needs)을 충족시키는 데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정책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이들 국가에서는 관행적인 농촌 대중교통 서비스(Conventional Modes)를 최대한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영국의 비관행적인 교통수단(Unconventional Modes), 미국의 Para-Transit 과 같은 다양한 대안적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이는 관행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만으로는 농어촌과 같은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최근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및 준공공 교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5-18>과 같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에 이러한 대안적 교통 서비스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그림 5-2>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DRT가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표 5-18. 선진국의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및 준공공 교통 서비스

교통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1. D/R diversion (Flexibus)	· 수요 응답에 의해 고정된 노선 및 운행계획을 변형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변적인 노선을 운행하는 승합버스
2. Multiple service bus	· 요일과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교통 유형에 맞춰 운행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승합버스
2. Contract bus	· 교통 관련 지방당국이 아닌 기관이 특정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승합버스
1. Subscription bus (cooperative bus)	· 지방단체에 의해 계약되고, 기부금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승합버스: 회원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2. Free shoppers' bus	· 소비자를 쇼핑센터로 실어 나르기 위해 상인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승합버스: 요금 없음
2. School bus	· 학생을 수송하기 위해 지방교육당국이 계약하거나 소유하는 승합버스, 성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수송
1. Post bus	· 우편물 수집·배달을 위해 우체국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을 승객수송에도 이용
1. Community bus(CT)	· 다양한 장소, 수요 응답 서비스, 단체여행이나 고용인 수송 등에 이용되며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소형차량
3. PSV dial-a-bus	· 첨단 제어장비를 갖추고 전화 요청에 응해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 차량
2. Welfare dial-a-bus	· 휠체어를 들어 올리는 보조장치 등을 갖추고 노약자, 불구자 등과 같은 특정인들을 위해 지역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
1. Social car(CT)	· 필수적인 통행이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수송이 불가능한 통행자들을 수송하는 자원자에 의해 운영되는 자가용; 모든 차량은 지방위원회에 의해 통제됨
2. Hospital car	·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으로서, 앰블런스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당국에 의해 조직되거나 환자수송만을 위한 사회복지 차량 등이 있음
2. Lift-giving scheme(CT)	· 자가용 보유자에 의한 차 태워 주기로서 비정형적이나, 규칙적일 수도 있음. 지방단위에서 광고는 하지만 중앙조직은 없음
2. Car pooling	· 규칙적인 통행(주로 통근)을 위해 자가용 소유자들간에 교대로 운영하는 방식
2. Shared taxi/hire-car	· 승객이 각자의 요금을 부담하는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1. Passenger/freight service (Courier)	· 화물, 소포, 잡다한 화물을 수송되도록 개량된 승합버스; 노선은 정기적인 화물배달 경로에 의해 결정됨
1. Demountable vehicle	· 버스의 몸체를 분리하거나 화물 밴과 바꿀 수 있는 차량
2. Rail bus	· 철로 위를 달리는 경전철

주: 1 = 주로 농촌지역을 위해 고안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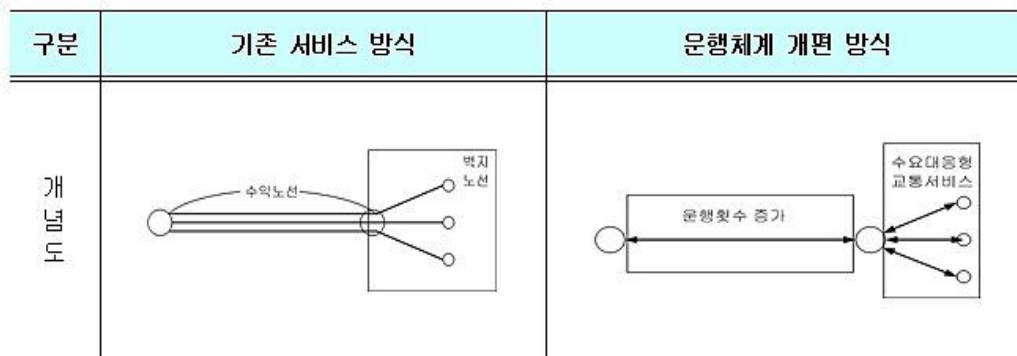
2 =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태

3 = 농촌지역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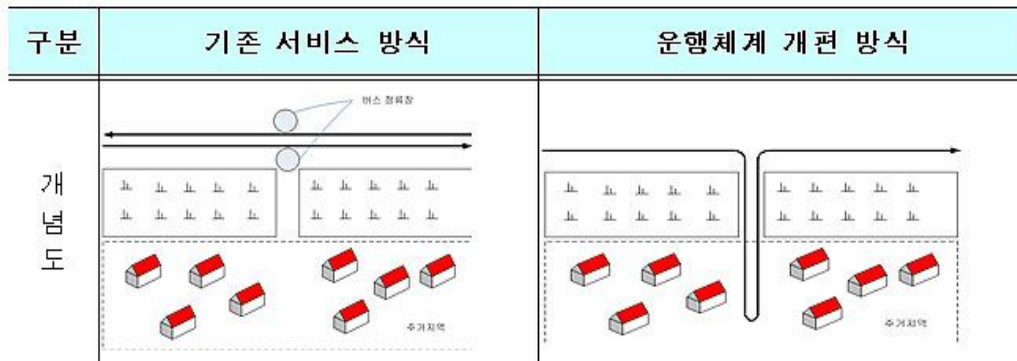
CT = 지역사회 교통수단(communitary transport mode)

그림 5-2.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의 유형

- ① (연계중심형)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등 기존 사업자가 운영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 DRT를 도입하고 주요 환승거점까지 연계하는 방식



- ② (노선탄력형) 기존 노선은 유지하되, 노선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노선에서 수요 발생지점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방식



- 이러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영 형태의 발굴, 다양한 운영주체의 육성, 제도적 뒷받침 등이 있어야 한다.

① 미국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가. 탄력적 정류장 정차 형태(Fixed-route Skeletal) 서비스

- 탄력적 정류장 정차 형태(Fixed-route skeletal) 서비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랄리(Raleigh)에서 운영 중인 CAT connector를 들 수 있음. 이 시스템은 도시 및 지방 지역에서 고정노선 버스가 끝나는 저녁, 밤, 새벽 시간대에 운행이 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에서도 승객 요구에 따라 운행이 가능함.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전에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해야 함.
- 오클라오마 주(州) 오클라오마 시(市)에서 운영 중인 METRO Link는 주중 및 토요일 야간 시간대에 고정노선 버스를 대신해 운행되며 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24시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요일의 경우 낮 시간에도 운행 가능함.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오후 4시까지 사전 예약이 필요함.

나. 탄력노선형태(Deviated Fixed-route) 서비스

- 1986년에 신설된 포토맥과 랍파헨콕 교통위원회(PRTC)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남서쪽 방향에 위치한 도시 외곽지역에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RTC가 운영 중인 옴니링크(Omnalink) 서비스는 기존 5개의 고정노선을 중심으로 기존 정류장 및 노선으로부터 0.75마일(1.2Km) 이내까지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 가능함.
- 옴니링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하며, 기존 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하고자 하는 승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승차하기 최소 2시간 전에 전화 예약을 해야 함.
- 이 시스템은 노선 변경을 요구할 경우 \$1.00씩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60세 이상의 노약자 및 장애인은 기존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할인 요금이 적용됨.

다. 지선노선형태(Feeder Service)

- 캘리포니아주(州) 나파 카운티(Napa county)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서비스는 세인트 헬레나(St. Helena)와 오프빌(Yountville), 두 소규모 마을에서 고정버스와 연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임.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밴(van)으로 탑승 최소 20분 전 전화 사전 예약이 필요함.
- 오리건주(州) 포트랜드의 시덜 밀 셔틀(Cedar Mill shuttle)은 첨두시간대에 기존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소도시의 승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셔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함. 셔틀의 운행 시간은 주중 오전 6시~9시와 오후 3시~7시로 12인승 밴이 운행되며 주말과 휴일은 운행을 하지 않음.

② 일본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 후쿠시마현 오타카초에서는 지자체와 상공회가 공동으로 「생활 교통의 확보」 및 「지역 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주민대표, 교통사업자, 관계 단체 및 상공회 등과 함께 「이용하기 쉽다」를 중점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저(底) 정액제」, 「Door-to-door」를 중시한 「오다까 e-택시」를 도입하였음.
- 이로 인해 지자체는 기존 순환버스를 3분의 1의 경비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Door-to-door서비스를 염가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교통사업자는 차량 활용성을 높여 고정 수입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음.
- e-택시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외출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편한 병원 통행으로 인해 건강 증진과 중증 예방을 도모하여 의료 관련 비용이 감소하였음.
- 현재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인지도 및 이용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오다까 e-택시」는 오타카초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고 있음.

- 후지미마치는 5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으나, 이용이 저조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기를 읊기고 있다’, ‘공기를 더럽히고 있을 뿐’ 등 비난을 받고 있음. 또한, 지자체는 버스회사에 연간 2,000만 엔씩 보조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버스회사는 800만 엔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음. 특히, 고령화가 진행된 후지미마치는 마을 전역에 걸친 생활교통의 확보가 시급하였으며, 또한 굴곡과 회전이 많은 도로 구조 상 큰 버스가 운행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었음.
- 따라서 후지미마치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해 5개 노선을 폐쇄하고 통근 및 통학 등을 위해서 정시 노선 1개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로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령자들이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이용하면서 쇼핑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상점 또한 수입이 늘어 환영하고 있음. 후지미마치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에 의해 교통 공백 지역을 해소하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도 줄어들었음.
- 미야기현 이치하사마쵸는 지역의 생활교통 확보를 위해 운행 중인 3개 정규 노선을 보조하고 실시하고 있었음. 보조를 위해서 연간 2,912만 엔을 투자하고 해마다 보조금이 증대되고 있었음.
- 생활교통 확보 및 재정 보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였음. 미야기현 이치하사마쵸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위해서 운행 중이던 2개의 정규노선을 폐지하였고 통학 및 통근을 위한 1개 노선은 정류장을 주거지역 근처로 설정하여 도보 거리를 단축시켰음. 미야기현 이치하사마쵸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여 주민 이동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며 재정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었음.

③ 영국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 영국의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탄력적 노선 운행(Deviated Fixed Route) 버스 서비스와 전형적인 수요 응답형 버스(Demand Responsive Bus)가 있음.

○ 대표적인 도입사례는 윌트셔(Wiltshire)주의 트로우 브릿지(Trow-bridge)에 위그리(Wiggly)버스라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들 수 있는데, 정해진 기점과 종점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며, 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전화 및 인터넷으로 예약하여 원하는 장소(정해진 노선 중심으로 인근 지역만 해당)에서 버스 이용이 가능한 탄력적 노선운행(Deviated Fixed Route) 서비스임.

○ 98년 RBC(Rural Bus Challenge)*에 응모해 보조금을 확보하여 99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4대의 미니버스를 이용해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영국 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힘.

* Rural Bus Challenge(RBC)는 지자체에서 지방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및 개선을 목표로 수립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평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함. Rural Bus Subsidy Grant(RBSG)는 농어촌 지역의 정규 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당지역의 거주인구규모에 기초한 일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보조대상 서비스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Rural Transport Partnership(RTP)는 지역사회의 요구는 지역사회가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및 NPO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

○ 또한 택시와 같이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차정원이 9~16명인 미니버스로 운행되고, 이용 전일까지 예약이 필요한 다이얼 어 버스(Dial-a-bus)가 있음. 교육, 종교, 사회복지, 여가 등 지역사회의 편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가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서비스인 그룹 하이어(Group hire)가 있는데, 이용 대상은 학교 및 종교단체와 같은 단체 회원으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단, 비영리단체가 여가, 쇼핑, 관광을 기획하여 회원 중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있음.

4.2. 농어촌형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사례³⁵⁾

4.2.1. 아산시 농촌 마중버스 운영

□ 추진 배경

- 충남 아산시는 2읍·9면·6동에 109,718세대의 274,55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농복합시이다.
 - 전체 면적은 542.2km²(서울의 89.6%)이며 6개 동에 전체 인구의 41.3%, 2개 읍에 22.1%, 9개 면에 36.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 도농복합시의 특성상 도시지역(동부)에 비해 농촌지역(읍·면부), 특히 일부 오지면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 도시지역에서도 일부 외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 둔포테크노밸리와 배방신도시의 경우 인구 급증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높지만 시내버스 운행이 부족한 형편이다.

□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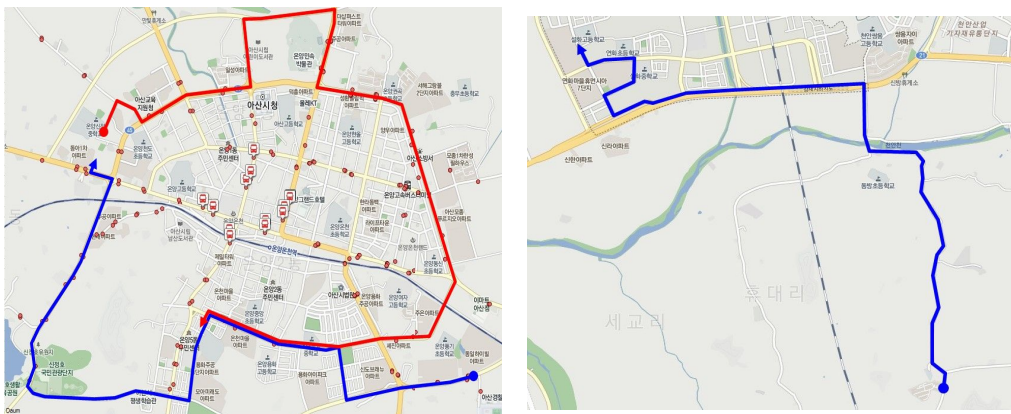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버스 미운행 지역에 15인승형 한정면허 마중버스(미니버스) 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의 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사각지대 마을에 수요 응답형 택시(마중택시)를 도입하였다.³⁶⁾

35) 김광선. 2012. 「농촌 대중교통 및 도로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일부 내용 발췌.

36) ‘마중’은 펌프질을 하기 전 먼저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 데서 따온 용어임. 따라서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는 대중교통 미투입지역에 대중교통 이용 수요자가 발생할 때 손님을 마중 나가듯이 버스와 택시가 마중 나가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의미.

- 5대의 한정면허 마중버스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에는 <그림 5-3>과 같이 등교버스로 운행된다. 즉 신정중학교, 용화중·고등학교, 온양중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총 4대의 한정면허 마중버스를 2개 노선에 각 2대씩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대는 배방읍 휴대리 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운행하고 있다.
-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 마중버스가 지나가는 지역은 아산시 도시부의 외곽지대로 대중교통 수요가 적어 버스 운행 회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곳이다.
 - 신정중학교, 용화중·고등학교, 온양중학교 학생들의 등교버스 2개 노선은 동일하게 첫 버스가 7시 30분에, 두 번째 버스가 7시 40분에 출발하며, 배방읍 휴대리의 등교버스는 7시 30분에만 1회 출발한다.

그림 5-3. 아산시 한정면허 마중버스의 등교버스 운행 노선



(a) 신정중·용화중·온양중 등교버스 노선

(b) 배방읍 휴대리 등교버스 노선

자료: 아산시청 제공.

-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지나면 한정면허 마중버스 5대 중 1대는 ‘둔포테크노밸리’ 주민들을 위한 순환버스로, 다른 2대는 ‘배방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순환버스로, 또 다른 1대는 농촌지역인 도고·선장면 일대 교통접근성이 낮은 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농촌형(오지형) 순환버스로, 그리고 나머지 1대는 예비차량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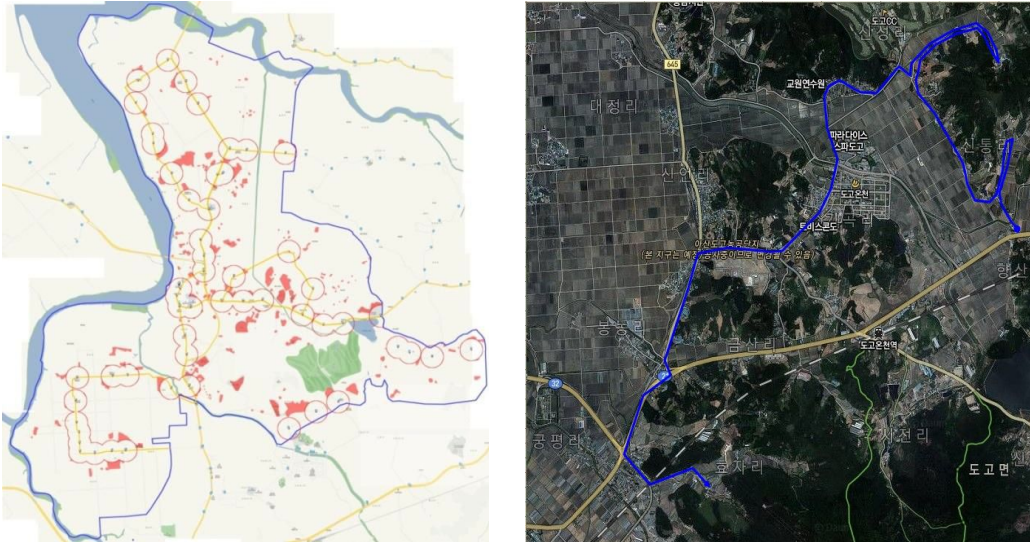
그림 5-4. 아산시 농촌형 순환버스의 외관(좌)과 내부



주: 마중버스는 25인승 소형버스의 내부를 개조하여 15인승으로 운행하고 있음.
 자료: 아산시청 제공

- 농촌형 순환버스로 운영되는 한정면허 미니버스의 노선은 <그림 5-5>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선장면의 마을(좌측 그림 원 외부의 짙은 색)과 도고면의 도고농공단지를 지나도록 설정되었다.
 - 그림의 원 중앙은 버스정류장이며, 원의 중앙을 잇는 선이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5개의 버스노선이다. 기존 운행 노선은 모두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길고 불규칙하며, 운행 횟수가 적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더욱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먼 곳의 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서 더욱 소외되어 왔다.
 - 현재 이곳 선장면·도고면에 투입되고 있는 농촌형 순환버스의 노선은 “효자리 마을회관…효자리 연봉정…도고 꽃 식물원…금산리…신언1리…신언리 삼거리…도고아파트…도고농공단지…도고면사무소…기곡2리 KT연수원…신성1리…신성1리 구마을회관…신성리…신성2리…원앙주조…신성2리…신성리…신통1리 마을회관…신통2리 마을회관…신통교 앞”이다.
 - 이 노선은 도고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버스 1대가 ‘효자리-도고농공단지’ 구간과 ‘신통리-도고농공단지’ 구간을 번갈아 운행하며, 각 구간마다 1일 4회, 총 8회 운행 중이다.

그림 5-5. 아산시 선장면의 기존 버스노선(좌)과 농촌형 순환버스의 노선



자료: 아산시청 제공.

한정면허란 특수한 목적에 따라 기간을 정해 놓고 임시로 면허를 주는 것을 의미함. 농어촌 지역은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을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리를 증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하여(2012.5.23) 운행계통, 운행시간 등을 지금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법의 해당 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아산시는 이에 앞서 동년 11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한정면허버스를 도입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인 온양교통(3대)과 아산여객(2대)에 한정면허를 허가하여 운영 중임.

- 한정면허 마중버스의 경우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하여, 성인 600원(교통카드 550원), 청소년 500원(450원), 어린이 300원(250원)의 요금을 받으며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할인요금으로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온양6동 법곡2통과 배방읍 세교4리의 경우 마을 진입로가 비좁아 시내버스 진입이 불가능하여 수요 응답형 택시(마중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 두 곳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매일 5회씩(편도 10회)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에 주민 수요 발생 시 운행 시간 20분 전에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마중택시 운행업체는 아산시 브랜드택시(스마트콜택시, 600대)이며 운행 요금은 100원이다. 나머지 운영금은 아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 추진 성과

- 한정면허에 의한 마중버스와 마중택시 운영으로 아산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 그러나 아직은 시행 초기라 이용객이 많지 않다. 즉, 마중버스를 처음 운행한 2012년 11월 1일부터 동년 11월 23일까지(23일 간) 마중버스의 총 이용객이 976명에 그쳤는데, 이는 마중버스 1대 당 하루 평균 8.5명의 승객이 탑승했음을, 그리고 각 마중버스가 1회 운행할 때마다 승객이 1명 꼴로 탑승했음을 의미한다.
 - 마중택시 역시 아직은 이용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³⁷⁾
- 현재 이용객 수가 저조하기는 하지만 마중버스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중대형 버스 1대를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하려면 연간 1억 6천만 원이 소요되지만 15인승 마중버스를 운행하면 연간 1억 원의 비용이 든다. 또 마중택

37) 마중택시를 운행하는 두 마을 주민들은 처음 대중교통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버스 운행을 기대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버스가 아니라 택시가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 주민은 아쉬움을 질게 표현했다고 담당 공무원은 언급하고 있다.

- 시를 투입하면 1년에 대당 1~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아산시의 마중버스나 마중택시가 농어촌을 포함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복지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아산시에서도 현재 5대를 운행하고 있는 한정면허 마중버스를 2013년까지 13대로 증차하고, 2015년까지 모두 20대의 한정면허 마중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 아산시는 마중버스 도입을 계기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여 향후에는 농촌 마을과 읍·면소재지 간에는 25인승 소형버스를 개조한 15인승 버스를, 읍·면소재지와 관내 도시지역 간에는 32인승 중형버스를, 그리고 광역 운행 버스는 42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4.2.2. 아일랜드 캐리카운티의 커뮤니티버스 운영

□ 추진 배경

- 아일랜드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70.1% 정도이지만 인구는 2011년 기준 458만 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토의 75%가 방목지와 목초지여서 수도 더블린과 같은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대부분이 오지이거나 농어촌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인구·지리적 특성으로 아일랜드 농어촌 주민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 주민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 2009년 조사에 의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도시 가구가 11%인 반면, 동일 기준의 농어촌 가구는 52%에 달하고 있다.³⁸⁾

38)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 SILC) 2009* published by the Central Statistics Office.

- 이러한 상황하에, 아일랜드 정부는 교통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사회에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삶에 독립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2002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RTP(Rural Transport Programme)를 추진하고 있다.
 - RTP는 공식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하였지만, 2002년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인 RTI(Rural Transport Initiative)를 이어받아 추진되었기에 2002년부터 10년 이상 동안 추진된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RTP는 아일랜드의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07-2013) 하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양질의 교통체계를 전국 농어촌에 제공하는 것’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천 6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및 준대중교통 지원금 전체의 약 2%에 해당한다.
- RTP는 아일랜드 농어촌을 3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그림 5-6>과 같이 RTP그룹을 지정하여 각 지역별 수요에 적합한 비관행적 교통(가변 형태의 교통 및 수요 응답형 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 각 RTP그룹은 비영리기반의 지역사회 기반 기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지역운송사업자들과 공동사업으로 지역별 RTP를 수행한다.
 - 즉 RTP는 기존의 지역 운송사업자들을 활용하고 이들을 지역적으로 통합하는 수요 응답형 또는 가변 형태의 농어촌 대중교통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6. 아일랜드의 지역별 RTP그룹과 KCT지역



자료: RTN(Rural Transport Network), 2011.

□ 추진 경과

- 케리 카운티(Kerry County)의 경우 Kerry County Transport Ltd.(KCT)가 RTP의 일환으로 케리 카운티 내 96개 타운과 마을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KCT는 RTP가 시범사업인 RTI로 추진된 초기(2003년)부터 케리 카운티의 농어촌 교통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RTP 사업 추진 경력이 10년에 이르고 있다.
- 현재는 58개 지역 운송사업자들과 협력하여 96개 타운 및 마을에 RTP 일환으로 지역통합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케리 카운티에서는 2000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55세 이상 노인들의 모임인 ‘Lyreacrompane over 55s’이 금요일 오전마다 개최되는데, KCT는 노인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커뮤니티 센터 간 도어 투 도어(door-to-door)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 ‘Sean Chairde’라는 노인들의 지역사회 모임이 매년 9월부터 5월까지 남부 케리 지역센터에서 티댄스(tea dance)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데 KCT는 이 모임에도 도어 투 도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밖에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 등을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아동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일정에 맞추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 KCT가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탑승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5유로(€)인데, 해당 교통서비스 비용은 개인과 공공, 그리고 지역의 조직·단체 등이 함께 부담한다.
 -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KCT는 케리카운티 전 지역에 126개의 정기운송(scheduled services)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운송노선은 준가변 노선제(semi-flexible routes)를 실시하여 승객의 요구에 따라 정기노선에서 2마일(약 3.2km)까지 벗어나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준가변 노선제 운영을 위해 RTP에 따른 모든 버스 운영을 콜센터에서 조정하고 있다.
- KCT는 <그림 5-7>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버스를 운행하며, 휠체어나 보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KCT가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의 약 40%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며, 25%에서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그림 5-7. RTP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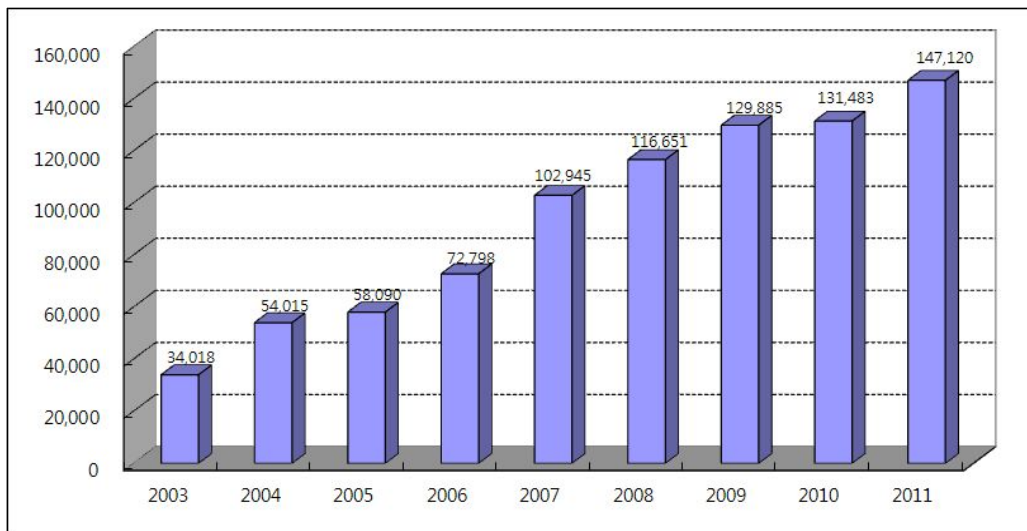


자료: RTN(Rural Transport Network), 2011.

□ 추진 성과

- KCT가 RTP를 추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KCT의 커뮤니티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 2003년 3만 4천 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모두 14만 7천 명이 KCT의 커뮤니티버스를 이용하였다. 동 기간 승객 수가 432% 증가한 것이다.
 - 지난 10년 간 모두 84만 7천여 명의 승객이 KCT 커뮤니티버스를 이용하였다.
- KCT 커뮤니티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여성과 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들은 적어도 1주일에 2일 이상은 마을에서 벗어나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 또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청소년센터에서의 활동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증대되었다.

그림 5-8. KCT 커뮤니티버스 이용자 증가 현황



자료: Kerry Community Transport Ltd.

제 6 장

이행실태 종합평가와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종합평가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준 항목 대부분의 이행정도가 2011년과 비교하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1).
 - 다만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폐교)’,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독서)’,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영유아)’, ‘응급 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응급서비스)’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이행정도가 감소한 기준 항목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는 교육과학기술부(폐교), 문화체육관광부(독서), 보건복지부(영유아), 소방방재청(응급서비스)이 포함된다.

표 6-1. 달성률 향상/하락 여부

주무 부처		서비스기준		향상 여부
국토부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
	교통	대중교통	1일 3회 대중교통 운행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
	교통	여객선	본도 1일 1회 이상 왕복선	-
교과부	교육	유/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
		고등학교	우수고교 육성	↑
		폐교	폐교시 의견 수렴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
문화부	문화	독서	읍면 내 공공/작은도서관	↓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시설	↑
			월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
			분기별 1회 전문공연 관람	↑
복지부	보건 의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진료서비스	중요과목 의사 진료	↑
		순회방문	마을별 월1회 순회방문	↑
		의약품 구입	읍면 내 의약품 구입	-
		노인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여가부	복지	영유아	읍면 내 보육시설	↓
		청소년	시군 내 청소년센터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경부	주거	난방	방문서비스	↑
환경부	주거	상수도	읍 도시가스 보급률	↑
		하수도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	하수도보급률	↑
경찰청	응급	경찰	112 신고 시 출동소요시간	↑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	↑
소방청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	↓
		소방서비스	5분 내 소방차 도착률 55% 이상	↑
다 부 처	해경청	응급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	↑
	교과부/복지부	복지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	↑
	지경부/산림청	주거	신재생에너지 보급	↑
	기타	주거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주: 다음과 같은 8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은 달성률 상승 및 하락 여부 판단에서는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여객선 운임비 지원, 마을상수도 관리)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계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 교통 항목의 인도 구분의 경우,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도로가 법적,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기준이 지자체 권고 사항임에 따라 정확한 이행실태 파악이 불가능함.
- 정보통신 항목의 2개 (세부)기준의 경우 인터넷망의 행정리별 구축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참고적으로 조사한 가입률 역시 가입자 수 현황으로 대체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따라 정확한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의 공간 단위는 시·군, 읍·면, 행정리 등으로 다양한데, 각 기준 항목의 달성 정도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단위로 평가하면 <표 6-2>와 같다.

- 즉, 모든 시·군이 해당 기준 항목을 달성한 경우는 ‘경찰서비스(10분 내 현장 도착)’와 ‘난방(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저감정책 추진)’ 두 항목에 그치고 있다.³⁹⁾
- 이 외 90% 이상의 시·군이 해당 기준 항목을 달성한 경우는 ‘유치원/초중교(적정 통학수단 제공)’, ‘폐교(폐교 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 70% 이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시군 내 문화시설 1개 이상)’, ‘의약품 구입(읍·면별 의약품 구입)’, ‘청소년(청소년 활동진흥 시설 시·군별 1개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군 당 센터 1개소 이상, 방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반면, ‘응급(도난 방지)’과 ‘정보통신(초고속망 구축률 100%)’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일부 기준 항목의 경우 기준을 달성한 시·군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자세한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기준 이행실태’는 <부록 4> 참조.

○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업 또는 사업비의 확대가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즉, <표 6-3>에서 볼 수 있듯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사업비는 2011~2012년 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개별 기준 항목별로도 관련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기간의 기준 이행실태 증감이 투입된 사업비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39)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저감정책 추진의 경우 정도에 상관없이 해당 정책을 추진한 시·군이라면 모두 해당 항목의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경찰서비스 항목 역시 행정리별 이행실태 점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현재는 시·군별 점검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이행실태 점검 결과가 과장되어 측정되는 문제가 있음.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의 투자 외에도 해당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등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 보다 자세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관련 사업 예산 투입 현황’은 <부록 5> 참조.

표 6-2.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기준 이행실태

구분	국토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택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진료 서비스	순회 방문	의약품 구입				
	주거기준을 90% 이상	도보 15분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준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외지 1회 이상 왕복	생활도로 정비사업 차도인도 구분	적정규모 학교육성	적정수단 제공	우수고교 시군당 1개교 이상	폐교 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참여율 70% 이상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읍면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읍면내 도서출판 가능	도서대안시스템	시군내 문화시설 1개 이상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 2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시군내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순회 방문 회 이상	읍면별 의약품 구입
종합	38/139	1/139	49/138	10/11	8/138	0/136	75/79	120/139	74/79	132/139	92/138	1/139	4/139	65/138	137/139	77/139	105/139	18/138	108/138	8/138	133/139

구분	복지부		여가부			지경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방통위		다부처			
	복지		복지			주거		주거		응급		응급		응급	정보통신		복지부/교과부	지경부/산림청	기타 ⁴⁰⁾	
	노인	영유아	청소년	다문화가족		난방	상수도	하수도	경찰서비스	도난방지	응급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초고속망	아동 ⁴¹⁾	난방 ⁴²⁾	마을공동시설			
	주1회 이상 제가노인 복지서비스	읍면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청소년진행 활동시 시군개 이상	시군당 1개소 이상	방문 서비스 제공	읍지역 상수도 보급50% 이상	면지역 상수도 보급75% 이상	하수도 보급71% 이상	10분내 현장 도착	마을방범 용CCTV 설치	30분내 응급 현장 도착	5분내 도착 55% 이상	항포구 CCTV 설치	초고속 망구축 률100%	광대역 망구축 률80%	읍면별 지역아 동센터 또는 초·중 등돌 봄교 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에너 지정책 추진	공동 시설 운영 비지 원	공동 시설 상설 프로 그램 운영 지 원	
	0/138	21/138	127/139	131/139	138/139	33/136	28/139	51/139	139/139	0/138	95/139	59/139	0/48	0/139	3/139	119/139	139/139	51/138	20/138	

주: 다음과 같은 5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계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40)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의 확충,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음.

41) 아동 복지시설 관련 사업으로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시설 지원 사업, 교과부의 초등돌봄교실 사업 등이 있음.

42)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지경부의 그림홈100만호 사업과 산림청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등이 있음.

표 6-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관련 사업 예산 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부문	항목	관련 사업 예산 증감 추세		
		2011년도(A)	2012년도(B)	증감 (B-A)
1. 주거	가. 주택	86,600	93,500	6,900
	나. 난방	269,176	273,837	4,661
	다. 마을공동시설	-	-	-
	라. 상수도	316,000	342,437	26,437
	마. 하수도	367,846	386,326	18,480
2. 교통	가. 대중교통	76,406	77,478	1,072
	나. 여객선	1,600	1,600	0
	다. 인도(人道)	-	-	-
3. 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75,900	121,400	45,500
	나. 고등학교	-	-	-
	다. 폐교	-	-	-
	라. 방과 후 학교	227,322	353,725	126,403
	마. 의견 수렴			
	바. 평생교육	1,350	3,000	1,650
4. 보건 의료	가. 진료 서비스	58,931	56,814	-2,117
	나. 순회방문	63,224	63,446	222
	다. 의약품 구입	-	-	-
5. 복지	가. 노인	146,996	150,435	3,439
	나. 청소년	72,444	68,149	-4,295
	다. 아동	231,102	276,872	45,770
	라. 영유아	30,328	30,795	467
	마. 다문화가족	54,051	60,631	6,580
6. 응급	가. 응급 서비스	35,922	42,622	6,700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11,940	5,630	-6,310
	다. 소방 서비스	68,558	96,748	28,190
	라. 도난 방지	-	-	-
	마. 경찰 서비스	-	-	-
7. 문화	가. 독서	21,518	13,131	-8,387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21,152	106,773	-14,379
	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11,459	12,423	964
8. 정보통신	가. 초고속망	27,200	18,870	-8,330
총 사업비		2,377,025	2,656,642	279,617

주: '항목' 칼럼의 음영·볼더 표시 항목은 2011 이행실태 점검 대비 2012년 이행실태가 감소한 항목임.

2.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주요 정책 개선 방향

2.1. 난방비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일러 보급 확대

-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에 앞서, 또는 이와 병행하여 농어촌 가구의 난방비 저감을 위한 난방시설 개선 노력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택에 대한 불만 요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난방시설’이었는데, 이들이 희망하는 난방시설 형태는 ‘도시가스’보다 ‘태양열’이었다.
 - 도시가스보다는 응답 비중이 낮지만 ‘기름·화목 겸용 보일러’의 응답 비중이 높았던 점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난방시설 공급에 보다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특히 4~5년 내에는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저렴한 보급형의 태양열 보일러와 기름·화목 겸용 보일러를 개발·공급하여 농어촌 가구의 난방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 농어촌 가구의 겨울철 집중 난방기간은 5개월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기간 난방비 역시 150만 원 정도에 달해 월 평균 30만 원의 난방비가 들고 있다.

2.2.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대중교통 공급체계 보장

- 대중교통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운행 정보 제공, 정류장 대기시설, 연계성, 정류장까지의 거리, 배차 간격 등에 대한 요구가 고루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현재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개선만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농어촌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차량을 이용해 농어촌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한정면허 버스’ 운영이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이러한 대안적 대중교통 수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선 버스 역시 지역 실정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버스 등을 운송사업자가 지자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택시사업자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농어촌에서는 노선사업자(버스)와 구역사업자(택시)가 모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아일랜드의 RTP(Rural Transport Programme)와 같이 지역 내 운송사업자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농어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광역단위에서 농어촌 대중교통 계획을 공

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역협의체 운영 역시 필요하다.

- 농어촌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운행 정보제공’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BIS) 구축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보다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⁴³⁾
 - 버스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에는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50%의 사업비 외에도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버스마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 역시 동 사업이 쉽게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3. 보건의료-사회복지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외에 지역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⁴⁴⁾
- 실제 농어촌 최말단에서 기능하는 보건진료소에서 1차 진료나 건강증진 사업 외에도 주민들의 사회복지나 교육복지, 문화·여가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면 또는 권역 단위의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마을 단위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및 마을건강원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보건진료소의 경우 2012년부터 보건진료소장이 각 지자체의 일

43)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44)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내부자료.

반행정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체 특수사업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사회복지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추진, 주민 참여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의 보건진료소처럼 자체의 사업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2.4. 서비스전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및 시스템 구축사업 확대

- 2011년도에 비해 2012년 이행실태가 개선된 항목들은 주로 하드웨어 설치 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준항목들이다.
 - 이는 한정된 예산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과거와 같은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향하는 정책기조의 선회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의 서비스공급 자원 발굴, 특히 지역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 지역의 사례 발굴과 관리, 서비스 공급 등이 지역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2.5. 주민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응 환경 구축 지원

- 인구의 분산 분포라는 농어촌의 지역 특성은 특히 응급서비스 공급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에 더해 농어촌은 도로 인프라의 부족, 서비스 제공 인력의 부족으로 화재, 구급, 경찰 서비스 등의 제공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 즉, 응급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의 확·포장, 관련 시설과 차량의 증대, 인력

확대 등 도시에서와 동일한 공급 방식으로는 농어촌의 응급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소방서비스와 관련해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방차의 빠른 도착보다는 오히려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적절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의 경우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비용 투자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 역시 농어촌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되고 있다.
 -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나 마을건강원 운영 사례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3.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3.1. 주요 수정 항목

- 제4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역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19)에 시행을 고려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동 개정안은 2012년 9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 후 검토되었고, 사무국에서는 이를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으로 보완하였으며 동년 10월 16일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거쳐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최종 수정안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된 최종 수정안은 ‘경찰 순찰’ 항목의 신설, ‘도난 방지’, ‘유치원/초·중학교’, ‘인도’, ‘순회방문’ 항목의 수정을 포함한다.
- 농어촌 지역의 치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 순찰’ 항목을 신설한다.
 - 동 기준 항목에는 “범죄 취약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라는 기준을 둔다.
 - ‘범죄 취약지역’은 범죄 발생 건수, 강력범죄 발생 여부 등 치안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서별로 선정하도록 한다.
- 도난 방지만을 강조한 현행 ‘도난 방지’ 항목은 절도, 강도 등의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방법설비’ 항목으로 수정한다.
 - “도난 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는 현행 기준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 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라는 기준으로 수정한다.
- 현행 ‘유치원/초·중학교’ 항목의 기준을 일부 수정한다.
 - 동 항목의 기준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농어촌 학교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통합보다는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는 현행 기준을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로 수정한다.
- 현행 ‘인도’ 항목의 기준을 전면 수정한다.
 - 동 항목은 이행실태 측정이 어렵고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에만 인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위험구간 방치의 우려를 낳고 있다.
 - 따라서 현행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人道)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기준을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에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보

도(歩道)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확보한다.”로 수정하고 항목명 역시 ‘보행안전’으로 수정한다.⁴⁵⁾

- 현행 ‘순회방문’ 항목은 기준 적용의 수위를 다소 낮추도록 일부 수정한다.
 - 농어촌 지역 의료여건상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순회방문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우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을 중심으로 순회방문을 실시하도록 동 기준을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로 수정한다.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이란 보건소 등에서 의료취약지역으로 구분한 마을, 대중교통 1일 3회 미만 운행 마을 등을 의미한다.
- 현행 ‘폐교’ 항목은 기준 내용의 “재활용 대안”을 “활용 대안”으로 자구를 수정한다.
 - 즉,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로 수정한다.

3.2.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 이러한 수정 사항을 종합하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표 6-4>와 같이 현행 8개 부문 31개 항목에서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정된다.
 - 현행 기준 항목의 일부를 부문 간 조정하여 ‘안전’ 부문을 신설하고, 이에 ‘경찰 순찰’, ‘방범설비’(현행 CCTV), ‘경찰 출동’(현행 경찰서비스) 항목을 포함시킨다.

45)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의미(「도로교통법」).

- 동 수정안이 시행되려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가 개정되어야 한다.

표 6-4.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주거 (5)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3)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보행안전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에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보도(歩道)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확보한다.
교육 (6)	가. 유치원/초·중 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부문	항목	세부 내용
(3)	나.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5)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3)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안전 (3)	가. 경찰 순찰	범죄 취약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나.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다.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3)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 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부 록

- 부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별 통계 기반 구축 현황
- 부록 2. 최저주거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안
- 부록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부록 4.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부록 5.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 부록 6.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등에 대한 조사
- 부록 7.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조사
- 부록 8. 농어촌 주민의 도로 및 대중교통 이용실태와 정책수요 설문조사

부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별 통계기반 구축 현황

○ = 공표통계 구축 가능 항목, ◆ =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달성한 것으로 간주,
 ■ = 지자체 행정조사 필요 항목, ◇ = 관계 부처·기관에 통계 요청 필요 항목,
 ◇(*) = 선언적 항목으로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되 관계 부처·기관에 통계 요청

부 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통계 구득 여부
주 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국토연 최저주거기준 자료 : 시 군 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률	◇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	◇
				그린홈100만호사업 현황: 태양광·태양열·지열·바이오·풍력 등	◇
	마을 공동 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	■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현황	■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환경부 상수도통계:상수도 현황	○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	-	◆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환경부 하수도통계 :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

부 문	관 련 항 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통계 구득 여부
교 통	대중 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경우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콜택시 비용 지원, 탄력적 버스 운영 등)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수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행 마을	■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월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월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여객선 운행 노선별 일정	◇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 일부 지원	-	◆
	인도 (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인도 구분 노력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계획 여부 및 결과 구축	■
교 육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군별 소규모학교 및 통폐합 현황	◇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시·군별 폐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
	고등 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시·군 당 1개교 이상	우수고교 및 기숙형고교 현황	◇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시 폐교 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폐교 활용에 관한 공청회 등의 회의실시 현황	◇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70% 이상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시·군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

부 문	관 련 항 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통계 구득 여부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초지자체에 지자체, 교육청, 주민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
	평생 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운영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
보 건 의 료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시·군 민간의료체계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진료 가능	전국사업체조사: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현황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	○ ■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체계에서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방문 실시	보건직원 정기 순회방문 프로그램 현황	■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읍·면 내에 의약품 구입 가능	전국사업체조사: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점, 공공의료기관 현황	○
복 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주 1회 이상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현황 1. 독거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등급외 3.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각 사항 중복 불가	■
				노인돌봄기본(독거노인 서비스 수혜자 현황	■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서비스 수혜자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 등록 현황	■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시·군 내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부 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통계 구득 여부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정보센터 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 :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 초등학교별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 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최소 3명 이상일 때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 가능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서비스 제공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또는 행정리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
	도서· 벽지 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 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및 산림청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EMS 전용헬기 운영	해경청 헬기 및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현황 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현황 EMS 전용헬기 운영 현황	◇ ◇ ◇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제고함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또는 행정리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간선도로 길목 및 마을 진입 주요 도로에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지별 방법용 CCTV 현황	■
			양식장 등의 어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시·군별 포구/항만, 어장 양식장 현황 및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

부 문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통계 구득 여부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현장 도착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또는 행정리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
문 화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통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문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문고) 현황	○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이동도서관 등 대안적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 운영	대안 방안 운영 여부	■
	문화 시설 /프로 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자동차 30분 내에 문화시설 운영	문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지방문화원프로그램 조사	◇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 관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예회관 운영 현황 조사: 문화예술회관의 정기 공연 현황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2회 이상의 문화프로그램 향유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실시 현황	■
정 보 통 신	초 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	시·군별 초고속망 가입 가구 현황	◇(*)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가입 가구 현황	◇

부록 2. 최저주거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최저주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⁴⁶⁾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2011년 개정 시 추가된 기준임.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m ²)	
			2011년	2004년
1	1인 가구	1 K	14	12
2	부부	1 DK	26	20
3	부부+자녀1	2 DK	36	29
4	부부+자녀2	3 DK	43	37
5	부부+자녀3	3 DK	46	41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49

-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 (커침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3)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부록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초중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주거기준이상이가구비율 90% 이상	읍·면·도·시·군·면 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정류장, 3회 버스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교통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일 1회 이상 왕복	생활도로 정비 시도 구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적정통학수단 제공	우수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 1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부산	기장군	89.1	63.1	0.9	100.0	0.0	94.8	86.6	95.7	0	-	50.0	0.0	-	1	-	85.1	X	40.0	O	0.0	100.0
대구	달성군	90.2	88.6	0.9	100.0	100.0	97.0	78.0	93.6	0	-	0.0	11.1	100.0	2	100.0	80.5	O	44.4	O	0.0	100.0
인천	강화군	86.6	39.5	1.2	89.3	89.3	21.2*	43.8	91.4	0	100.0	53.3	0.0	-	3	-	89.2	O	15.4	O	0.0	100.0
	옹진군	87.4	-	3.1	99.4	12.5	-	24.4	77.3	0	83.3	15.0	0.0	-	0	-	99.5	X	0.0	X	3.2	100.0
울산	울주군	91.2	83.7	1.8	99.4	12.5	60.0	79.2	97.6	0	-	11.2	0.0	-	1	-	75.0	X	25.0	O	0.0	100.0
경기도	평택시	92.9	72.6	2.4	69.8	1.6	72.3	74.3	96.3	0	-	48.8	0.0	-	1	-	59.3	X	11.1	O	0.0	100.0
	남양주시	95.0	78.6	0.8	97.0	22.3	74.0	92.0	99.4	0	-	35.7	0.0	-	1	-	67.5	O	77.8	O	0.0	100.0
	용인시	95.1	70.0	1.7	87.7	14.2	64.1	91.5	95.7	1	-	18.8	0.0	-	1	-	70.9	X	100.0	O	2.4	100.0
	파주시	94.2	59.5	1.1	89.2	1.2	73.0	67.5	98.0	1	-	100.0	0.0	-	1	-	71.0	O	54.5	O	3.3	91.7
	이천시	92.6	57.8	0.5	94.7	30.3	62.0	70.9	94.9	1	-	8.8	14.3	100.0	1	100.0	70.9	O	60.0	O	0.0	100.0
	안성시	90.7	87.0	1.2	99.7	37.3	71.9	52.3	93.7	0	-	0.0	10.0	100.0	0	100.0	76.5	O	50.0	O	4.9	100.0
	김포시	94.3	74.7	1.3	19.7	19.7	60.9	56.4	99.1	1	-	50.0	0.0	-	1	-	72.1	X	33.3	O	100.0	100.0
	화성시	94.4	71.4	0.8	79.7	3.1	90.1	84.0	94.8	0	-	7.5	0.0	-	1	-	61.8	O	46.2	O	0.0	92.3
	광주시	92.0	68.4	1.4	74.3	1.2	80.3	90.0	97.6	1	-	12.5	-	-	1	-	72.0	X	42.9	O	0.0	100.0
	양주시	94.6	68.7	1.2	100.0	86.0	84.2	90.4	97.0	1	-	6.0	0.0	-	1	-	67.7	O	40.0	O	0.0	100.0
	포천시	90.4	64.4	0.6	97.6	18.5	42.2	56.4	88.8	1	-	100.0	0.0	-	1	-	69.3	O	25.0	O	0.0	100.0
	여주군	91.7	73.8	0.8	100.0	1.1	46.9	56.3	96.4	1	-	100.0	8.3	100.0	1	100.0	73.9	O	30.0	O	1.8	100.0
	연천군	90.0	42.3	0.6	100.0	25.5	88.6	73.0	96.9	1	-	20.6	0.0	-	1	-	82.9	O	10.0	O	100.0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초중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주거기준 가구비율 90% 이상	읍·부 도시가 스보급 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동 시설비 운영지 원비율	공동 시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 상·도 보급 률 75% 이상	하수 도보 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정 류장,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지 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도 구분	적정 규모 육성	적정 통수 제공	우수 고등 학교 1개 이상	폐교 시 주민 견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 회 설치	읍·면 별 평 생 교 육 시 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 별 1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 별 의약 품 구입	
강원도	가평군	89.3	0.0	2.0	49.6	8.7	57.8	71.3	96.8	0	-	13.1	0.0	-	1	-	82.7	O	66.7	O	0.0	100.0	
	양평군	88.6	31.1	1.6	100.0	100.0	36.0	82.6	95.4	1	-	4.1	28.6	100.0	1	100.0	72.5	O	25.0	O	11.8	100.0	
	춘천시	89.5	0.0	6.0	83.4	23.3	59.4	92.0	86.9	1	-	26.7	6.7	100.0	0	100.0	75.6	X	40.0	O	0.0	100.0	
	원주시	90.8	72.6	1.7	85.0	10.6	10.8	84.4	93.9	0	-	43.8	0.0	-	0	-	78.5	O	22.2	O	0.0	88.9	
	강릉시	86.6	0.0	1.4	100.0	13.7	47.6	87.7	95.9	2	-	25.0	14.3	100.0	0	100.0	73.1	X	25.0	O	0.0	100.0	
	삼척시	80.8	0.0	0.7	100.0	100.0	43.4	82.8	88.1	0	-	34.3	11.5	100.0	0	100.0	86.7	O	0.0	O	0.0	100.0	
	홍천군	84.6	58.7	0.9	97.4	31.6	40.7	64.3	86.7	0	-	47.1	7.7	100.0	3	100.0	73.6	O	10.0	O	0.0	100.0	
	횡성군	84.2	30.6	0.6	97.1	97.1	31.4	52.8	88.6	1	-	2.5	12.0	100.0	2	100.0	75.1	O	44.4	O	0.0	100.0	
	영월군	78.6	0.0	0.6	91.0	16.9	53.5	46.8	96.0	1	-	46.7	7.4	100.0	1	100.0	81.3	O	11.1	O	1.1	100.0	
	평창군	85.5	0.0	1.1	85.8	70.5	69.8	60.9	69.1	0	-	15.8	6.3	100.0	1	100.0	87.0	X	25.0	O	0.0	100.0	
	정선군	79.1	0.0	0.3	77.3	77.3	59.9	79.2	85.6	0	-	38.5	16.0	100.0	1	100.0	92.6	O	11.1	X	6.1	100.0	
	철원군	89.9	0.0	0.7	100.0	10.7	56.5	48.6	92.7	0	-	37.5	0.0	-	3	-	73.1	O	14.3	O	0.0	85.7	
	화천군	83.8	0.0	0.6	100.0	100.0	43.3	35.2	95.1	0	-	0.0	0.0	-	1	-	80.5	O	40.0	O	0.0	100.0	
	양구군	86.8	0.0	0.9	98.7	98.7	61.4	82.9	86.8	1	-	27.3	0.0	-	2	-	82.9	O	20.0	X	14.1	100.0	
인제군	86.5	0.0	1.0	94.0	94.0	62.1	81.3	86.9	0	-	14.7	0.0	-	2	-	76.5	X	66.7	X	0.0	100.0		
충청북도	고성군	85.2	0.0	0.3	96.1	23.6	91.3	88.2	93.7	0	-	15.8	9.1	100.0	1	100.0	85.3	X	40.0	X	0.0	100.0	
	양양군	86.1	0.0	0.4	94.4	0.0	64.8	53.1	92.8	1	-	66.7	0.0	-	1	-	65.1	O	16.7	X	100.0	100.0	
	충주시	89.9	0.0	2.4	97.3	2.7	31.7	87.9	93.7	0	-	70.0	11.1	100.0	2	100.0	95.0	O	23.1	O	0.6	100.0	
	제천시	88.6	27.6	3.7	100.0	11.8	52.5	89.9	87.6	1	-	6.3	0.0	-	2	-	99.2	X	25.0	O	0.0	100.0	
	청원군	91.0	82.2	2.2	91.4	18.5	54.8	43.0	97.6	1	-	30.7	0.0	-	1	-	91.2	X	28.6	O	0.0	100.0	
	보은군	81.2	0.0	1.5	96.4	16.2	18.7	59.3	83.4	0	-	-	13.3	100.0	1	100.0	99.7	O	9.1	O	0.4	100.0	
	옥천군	84.3	0.0	1.7	100.0	100.0	59.6	72.9	89.0	0	-	22.8	8.3	100.0	1	100.0	98.7	O	11.1	O	1.4	100.0	
	영동군	80.3	8.2	1.2	98.7	38.7	60.7	40.0	72.2	0	-	0.0	0.0	-	1	-	91.9	X	9.1	O	0.4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초중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주거기준이상이가구비율90%이상	읍·도시가스보급률50%이상	신재생에너지보급률	마을공동시설운영비지원행정리비율	공동시설프로그램지원행정리비율	면부상수도보급률75%이상	하수도보급률71%이상	도보15분내정류장, 버스이상이상운행마을비율	준공교통프로그램운영	본도와도서지역1회이상왕복	생활도로정비시인도구분	적정규모학교성	적정통수제공	우수고등학교1개이상	폐교시주민견련	방과후학교프로그램참여율70%이상	교육발전위원회설치	읍면별평생교육시설1개이상	모든주요과목1차진료가능	마을별1회이상순회방문	읍면별의약품구입	
		진천군	87.2	8.3	1.4	90.9	0.0	67.7	65.3	91.4	0	-	75.0	0.0	-	1	-	92.8	O	14.3	O	4.5	100.0
		괴산군	81.3	0.0	2.2	100.0	0.0	36.4	38.0	93.2	1	-	16.4	11.8	100.0	1	100.0	92.3	X	9.1	X	1.8	100.0
		음성군	92.1	24.7	4.1	98.1	34.2	58.3	49.6	81.1	1	-	0.0	0.0	-	1	-	94.9	X	44.4	O	10.9	100.0
		단양군	83.9	0.0	2.3	96.6	10.8	50.1	55.7	95.3	0	-	27.0	6.3	100.0	1	100.0	94.9	O	12.5	X	0.0	100.0
		증평군	92.0	53.3	1.5	100.0	26.2	66.0	78.2	97.0	1	-	25.0	-	-	1	-	87.5	O	50.0	O	0.9	100.0
충청남도	천안시	90.8	54.6	0.9	86.9	14.0	30.7	91.2	96.2	0	-	66.7	0.0	-	1	-	74.8	X	33.3	O	1.6	100.0	
	공주시	87.5	0.0	1.4	100.0	100.0	37.4	62.6	90.5	0	-	25.0	0.0	-	1	-	97.7	X	27.3	O	2.5	100.0	
	보령시	90.5	0.0	1.0	98.3	18.6	28.3	62.5	93.6	2	-	56.3	0.0	-	0	-	95.7	O	9.1	O	4.7	100.0	
	아산시	92.2	71.9	5.4	97.5	8.5	70.8	53.4	95.7	1	-	100.0	0.0	-	1	-	82.2	O	45.5	O	2.3	100.0	
	서산시	91.4	43.8	0.6	100.0	100.0	61.2	61.1	93.5	0	-	39.5	25.0	100.0	0	100.0	83.3	O	10.0	O	0.0	100.0	
	논산시	86.7	0.0	0.6	85.4	8.3	23.6	49.4	91.4	0	-	30.2	6.7	100.0	1	100.0	92.1	O	23.1	O	0.4	100.0	
	계룡시	96.5	-	3.8	87.2	87.2	95.5	95.3	100.0	0	-	75.0	-	-	0	-	87.1	O	33.3	O	100.0	66.7	
	금산군	78.2	38.5	0.5	98.8	26.9	34.7	49.3	91.6	0	-	30.0	14.3	100.0	2	100.0	86.4	O	30.0	O	5.9	100.0	
	연기군	89.5	77.3	0.8	0.0	0.0	39.3	58.9	88.7	-	-	0.0	66.7	100.0	1	100.0	92.2	O	25.0			100.0	
	부여군	87.6	0.0	0.5	96.5	17.8	57.2	37.4	95.4	2	-	32.1	17.6	100.0	1	100.0	93.6	O	6.3	O	9.0	100.0	
	서천군	87.4	39.0	0.4	90.2	12.7	32.6	23.3	89.8	0	-	21.0	0.0	-	2	-	92.4	O	7.7	O	22.9	100.0	
	청양군	85.2	0.0	3.4	100.0	100.0	8.0	45.4	85.8	0	-	75.0	7.7	0.0	2	100.0	82.8	O	30.0	O	26.2	100.0	
	홍성군	88.9	37.4	0.8	98.8	6.0	25.8	57.3	88.3	0	-	46.4	6.3	100.0	2	100.0	82.5	O	9.1	O	3.3	100.0	
	예산군	91.5	31.2	1.0	99.7	1.0	14.4	53.8	90.8	0	-	21.0	0.0	-	1	-	88.4	X	16.7	O	0.3	100.0	
	태안군	89.7	5.9	2.4	99.5	98.4	46.2	44.8	93.5	0	-	3.3	0.0	-	1	-	86.4	O	25.0	O	3.2	100.0	
당진군	91.9	77.5	2.5	100.0	72.7	33.7	59.5	95.0	2	-	21.1	0.0	-	1	-	82.8	X	33.3	O	5.0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초중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주거기준이상이가구비율 90% 이상	읍·부·도·시·가·군·읍·보·금·를 50% 이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상·수·도·보·급·률 75% 이상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적정 규모 학교성	적정 통수 제 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건립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1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전라북도	군산시	92.7	0.1	0.7	6.4	0.0	58.7	88.6	94.6	0	-	100.0	0.0	-	0	-	95.0	O	9.1	O	0.0	100.0
	익산시	90.6	0.0	2.3	100.0	0.0	91.3	85.0	93.0	0	-	18.8	10.7	100.0	0	100.0	87.8	O	0.0	O	2.6	100.0
	정읍시	90.6	0.0	1.1	92.3	2.8	78.6	69.7	95.3	0	-	13.0	4.5	100.0	2	100.0	96.1	X	6.7	O	0.0	100.0
	남원시	85.0	0.0	0.8	100.0	4.2	45.1	79.3	94.0	0	-	16.7	0.0	-	2	-	93.8	O	18.8	O	0.0	93.8
	김제시	89.4	0.0	1.1	83.4	16.3	82.5	48.8	96.3	0	-	0.0	0.0	-	1	-	80.0	X	6.7	O	5.4	100.0
	완주군	84.2	54.4	3.9	87.1	30.7	30.3	61.8	95.5	1	-	39.3	7.1	100.0	1	100.0	87.8	X	23.1	X	0.6	100.0
	진안군	79.6	0.0	2.3	98.3	98.3	36.0	55.6	91.8	0	-	4.2	5.0	100.0	1	100.0	94.3	X	18.2	X	8.3	100.0
	무주군	79.4	0.0	1.6	100.0	26.7	54.0	65.0	98.7	1	-	35.0	0.0	-	1	-	90.8	O	16.7	O	8.7	100.0
	장수군	79.2	0.0	2.0	99.0	3.5	49.6	53.9	93.0	0	-	0.0	8.3	100.0	1	100.0	94.0	X	14.3	O	0.0	100.0
	임실군	75.3	26.2	0.6	100.0	100.0	57.0	64.3	93.0	0	-	24.1	0.0	-	1	-	88.1	X	25.0	X	0.0	100.0
	순창군	78.5	0.0	1.0	96.7	0.0	39.4	44.4	89.1	0	-	0.0	0.0	-	1	-	86.9	X	9.1	O	22.0	100.0
	고창군	90.4	0.0	2.6	88.3	8.5	94.8	47.5	94.1	0	-	0.4	0.0	-	1	-	91.4	O	7.1	O	78.0	100.0
전라남도	부안군	91.4	0.0	0.9	89.2	11.4	96.9	48.9	84.6	0	100.0	50.0	4.3	100.0	1	100.0	95.0	X	7.7	O	0.0	100.0
	여수시	90.2	0.0	9.7	100.0	0.0	12.2	82.8	73.7	0	100.0	16.7	9.8	100.0	1	80.0	92.3	O	14.3	O	0.0	100.0
	순천시	90.5	0.0	1.0	97.6	1.6	64.6	90.2	96.3	0	-	4.7	26.3	100.0	0	100.0	56.4	O	18.2	O	0.0	100.0
	나주시	85.3	0.0	1.3	90.4	15.8	41.2	52.3	95.7	1	-	2.4	27.8	100.0	1	100.0	96.6	O	15.4	O	0.0	100.0
	광양시	91.5	78.0	1.8	61.1	0.0	46.0	91.1	96.9	1	-	45.5	20.0	100.0	1	100.0	83.3	O	14.3	O	27.8	100.0
	담양군	81.7	0.0	1.5	100.0	100.0	41.5	39.5	98.3	0	-	20.0	9.1	100.0	1	100.0	94.9	O	16.7	O	5.0	100.0
	곡성군	80.2	0.0	0.6	99.6	5.2	56.9	65.0	88.6	0	-	25.0	0.0	-	1	-	88.6	O	18.2	X	14.0	100.0
	구례군	87.7	0.0	0.5	100.0	100.0	30.6	87.4	96.1	0	-	20.5	0.0	-	1	-	85.6	X	12.5	X	0.0	100.0
고흥군	88.4	0.0	0.5	98.8	0.0	45.1	41.5	94.4	0	100.0	0.0	14.3	100.0	1	100.0	79.8	O	6.3	O	0.0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초중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주거기준이상이가구비율 90% 이상	읍·부·도·시·가스보급률 50% 이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공동시설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상·도·보·급·률 75% 이상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적정 규모 학교성	적정 통수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견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1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보성군	84.9	0.0	0.9	100.0	5.7	25.6	55.7	94.0	0	-	48.9	0.0	-	2	-	90.4	X	16.7	X	0.0	100.0
	화순군	83.3	76.1	3.4	94.1	5.9	62.0	73.0	90.2	0	-	18.8	11.1	100.0	2	50.0	86.4	O	7.7	O	0.0	100.0
	장흥군	81.7	0.0	0.7	100.0	37.7	29.5	59.7	92.3	1	-	100.0	0.0	-	1	-	85.1	X	10.0	O	0.0	100.0
	강진군	87.7	0.0	2.2	29.2	18.9	21.8	55.6	88.7	0	-	23.1	9.1	100.0	1	100.0	85.3	O	18.2	O	1.7	100.0
	해남군	86.5	0.0	0.8	99.8	5.8	24.2	41.4	89.5	0	-	15.7	33.3	100.0	1	100.0	81.0	O	14.3	O	64.3	100.0
	영암군	88.6	32.2	3.1	100.0	3.9	53.1	56.2	90.9	1	-	33.3	26.7	100.0	1	75.0	85.2	O	27.3	X	0.8	100.0
	무안군	90.1	36.1	0.6	94.2	38.7	48.2	44.7	85.5	0	-	1.6	28.6	100.0	1	100.0	84.8	X	22.2	O	0.0	100.0
	함평군	84.4	0.0	0.7	93.8	93.8	29.2	45.3	93.4	0	-	19.5	0.0	-	1	-	93.9	O	11.1	X	0.0	100.0
	영광군	88.1	0.0	0.4	100.0	8.6	75.7	51.6	93.5	0	100.0	25.0	20.8	100.0	2	80.0	89.7	O	18.2	O	0.0	100.0
	장성군	83.8	26.2	1.0	85.6	85.6	24.7	55.7	89.7	1	-	36.1	14.3	100.0	1	100.0	98.3	X	18.2	O	0.0	100.0
	완도군	90.5	0.0	1.0	100.0	44.5	63.4	54.7	75.2	0	100.0	6.1	25.9	100.0	1	100.0	88.9	O	8.3	O	0.0	100.0
	진도군	86.2	0.0	0.4	100.0	0.0	87.3	60.0	82.6	1	100.0	27.6	25.0	100.0	1	100.0	97.0	X	14.3	X	0.0	100.0
	신안군	82.1	0.0	0.4	100.0	100.0	75.3	28.5	69.7	1	100.0	3.3	14.9	100.0	1	85.7	97.3	O	14.3	X	0.0	100.0
경상북도	포항시	89.2	69.8	1.4	91.3	9.2	58.2	79.2	88.0	0	-	5.7	8.3	100.0	0	100.0	87.5	O	28.6	O	2.1	100.0
	경주시	83.7	23.7	0.5	100.0	5.1	60.8	85.1	89.2	0	-	22.4	28.0	100.0	1	100.0	96.1	X	16.7	O	2.0	100.0
	김천시	83.3	0.0	1.1	100.0	100.0	35.1	68.1	90.5	0	-	0.0	9.7	100.0	2	100.0	97.6	O	0.0	O	0.0	100.0
	안동시	77.7	0.0	0.8	100.0	2.9	41.3	72.3	88.4	0	-	33.3	6.7	100.0	0	100.0	98.2	O	14.3	O	0.0	100.0
	구미시	91.4	35.5	0.4	100.0	12.5	70.2	94.2	86.3	0	-	5.1	20.0	100.0	2	100.0	89.3	O	12.5	O	0.0	100.0
	영주시	76.7	0.0	0.9	95.5	0.0	20.9	78.8	80.4	0	-	0.0	11.1	100.0	2	100.0	89.4	O	10.0	O	2.5	100.0
	영천시	75.3	44.9	0.3	60.1	26.4	60.7	61.9	92.8	0	-	35.9	4.5	100.0	2	100.0	100.0	O	36.4	O	0.0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초중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주거기준이상이가구비율 90% 이상	읍·도시가스보급률 50% 이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리 비율	면부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로 정비시 인도 구분	적정규모 학교성	적정통수 제공	우수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견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1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경상남도	상주시	76.4	0.0	1.1	92.8	0.0	30.8	65.3	82.6	0	-	0.0	11.4	100.0	1	100.0	99.9	O	0.0	O	0.0	100.0
	문경시	80.4	0.0	0.8	100.0	3.1	71.2	77.0	85.2	0	-	11.5	21.1	100.0	2	100.0	99.4	O	11.1	O	0.0	100.0
	경산시	86.1	91.3	1.2	100.0	0.0	92.7	87.6	98.7	0	-	0.0	22.2	100.0	0	100.0	88.8	O	50.0	O	0.0	100.0
	군위군	60.9	0.0	0.3	97.8	14.4	62.1	8.6	77.7	0	-	1.9	7.1	100.0	1	100.0	96.2	O	12.5	X	0.0	100.0
	의성군	61.8	0.0	1.9	99.3	0.0	41.1	37.1	80.0	0	-	7.0	7.1	100.0	2	100.0	94.7	X	5.6	X	0.3	100.0
	청송군	60.6	0.0	1.2	100.0	0.0	54.4	14.6	86.0	0	-	2.1	0.0	-	1	-	93.3	X	12.5	O	0.0	100.0
	영양군	62.6	0.0	0.4	95.6	24.6	54.6	2.5	81.6	0	-	4.0	10.0	100.0	1	100.0	92.2	O	16.7	X	100.0	100.0
	영덕군	77.2	0.0	0.5	85.8	2.9	80.0	68.3	77.5	0	-	10.0	17.6	100.0	1	100.0	93.1	O	22.2	O	1.0	100.0
	청도군	73.8	0.0	1.0	100.0	29.2	27.5	51.5	87.1	0	-	33.3	0.0	-	1	-	97.4	O	11.1	X	6.1	100.0
	고령군	71.2	0.0	4.5	100.0	2.0	79.7	56.8	89.4	0	-	0.0	18.2	100.0	0	100.0	97.5	O	25.0	X	0.0	100.0
	성주군	71.3	0.0	1.1	93.1	26.6	17.4	29.4	70.0	0	-	10.7	0.0	-	1	-	97.2	O	10.0	X	0.0	100.0
	칠곡군	88.6	83.8	3.4	0.0	0.0	63.9	65.6	91.5	0	-	57.1	0.0	-	1	-	97.9	O	50.0	O	5.5	100.0
	예천군	72.8	0.0	0.4	93.6	13.2	40.4	32.0	87.2	0	-	45.5	21.4	100.0	1	100.0	92.8	O	8.3	O	0.0	100.0
	봉화군	64.2	0.0	1.0	100.0	100.0	35.2	3.9	76.3	0	-	10.6	10.0	100.0	1	100.0	89.6	O	10.0	X	0.0	100.0
	울진군	80.1	0.0	1.7	96.4	0.0	49.0	25.0	80.6	0	-	10.3	5.9	100.0	2	100.0	87.6	O	10.0	O	1.0	100.0
	울릉군	81.9	0.0	1.3	88.0	16.0	65.5	1.4	96.0	0	-	100.0	14.3	100.0	0	100.0	89.4	O	0.0	X	100.0	100.0
경상남도	창원시	89.6	77.8	2.8	26.2	0.0	58.3	94.6	97.4	1	-	27.8	5.9	100.0	1	100.0	84.1	X	12.5	O	0.0	100.0
	진주시	85.5	32.2	1.1	100.0	100.0	90.1	90.9	94.6	1	-	65.6	23.1	100.0	1	100.0	89.1	O	6.3	O	0.0	100.0
	통영시	87.4	0.0	0.3	80.3	7.6	81.8	79.8	78.9	1	100.0	66.7	13.0	66.7	1	100.0	84.5	O	14.3	O	33.3	100.0
	사천시	86.5	61.8	7.0	72.3	26.8	86.8	91.8	82.6	2	-	0.0	0.0	-	1	-	93.5	O	25.0	O	0.0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초중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주거기준이상이가구비율 90% 이상	읍·부도시기상보급률 50% 이상	신재생에너지보급률	마을공동시설운영비지원행정리비율	공동시설상설프로그램지원행정리비율	면상수도보급률 75% 이상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교통프로그램운영	본도와 도서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적정규모학교성	적정통수제공	우수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견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1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김해시	92.2	63.0	0.9	0.0	0.0	86.6	90.6	97.3	1	-	43.6	10.0	0.0	1	100.0	90.4	X	37.5	O	0.5	100.0
	밀양시	78.7	0.0	0.5	99.4	30.6	31.4	71.2	82.6	0	-	30.0	6.3	100.0	1	100.0	89.9	X	27.3	O	0.0	100.0
	거제시	89.4	-	2.7	99.0	99.0	77.4	80.8	95.4	1	-	25.0	12.5	100.0	1	100.0	86.9	X	0.0	O	0.0	100.0
	양산시	92.9	78.7	7.8	95.9	40.2	55.0	84.2	95.7	1	-	5.1	20.0	100.0	1	100.0	89.5	X	40.0	O	0.0	100.0
	의령군	69.5	0.0	2.8	100.0	100.0	21.0	52.0	81.1	1	-	20.0	0.0	-	1	-	87.5	O	15.4	X	1.4	100.0
	함안군	82.9	0.0	0.5	0.0	100.0	78.4	35.9	93.1	1	-	19.2	0.0	-	1	-	88.5	O	20.0	O	0.0	100.0
	창녕군	70.3	0.0	1.8	0.0	0.0	76.8	62.4	85.3	0	-	0.0	0.0	-	1	-	95.2	O	14.3	O	0.0	100.0
	고성군	80.8	4.6	2.0	100.0	100.0	42.5	47.2	91.2	1	-	0.0	0.0	-	2	-	97.7	O	7.1	X	0.0	100.0
	남해군	82.8	0.0	1.4	100.0	100.0	36.1	59.0	97.7	1	-	7.1	12.5	100.0	1	100.0	97.6	X	10.0	O	1.4	100.0
	하동군	83.4	0.0	3.0	100.0	4.1	34.9	62.2	79.6	0	-	42.9	6.3	0.0	1	100.0	92.7	X	7.7	X	0.0	100.0
	산청군	71.9	0.0	1.4	99.3	99.3	32.1	29.6	80.4	1	-	0.0	0.0	-	1	-	98.4	X	27.3	X	10.2	100.0
	함양군	79.5	0.0	0.8	26.2	26.2	17.7	52.1	87.1	0	-	0.0	0.0	-	1	-	92.7	O	9.1	O	0.0	100.0
	거창군	75.4	0.0	0.7	100.0	100.0	8.9	66.1	88.0	1	-	4.3	0.0	-	1	-	88.1	O	8.3	O	30.8	100.0
	합천군	66.3	0.0	0.4	100.0	5.1	24.0	37.5	79.7	0	-	7.9	5.3	100.0	1	100.0	96.3	O	11.8	O	0.0	100.0
제주도	제주시	86.6	0.0	0.6	100.0	0.0	100.0	87.7	92.7	1	100.0	3.5	6.3	100.0	0	100.0	86.0	O	28.6	O	100.0	100.0
	서귀포시	86.8	0.0	0.2	100.0	0.0	100.0	85.4	93.4	1	-	100.0	8.3	100.0	0	100.0	90.3	O	60.0	O	100.0	100.0

주: * 인천시 상수도보급률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통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환경부 상수도통계의 수치를 활용함.

부록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계속)

254

구분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경찰서비스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취약계층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 시설 1개 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교 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행정리 방범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대출대여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부산	기장군	19.5	3	100.0	100.0	1	O	100.0	54.5	19.3	29.4	100.0	60.0	0	1	2.3	-	100.0	56.3	53.6
	달성군	55.4	1	100.0	88.9	1	O	100.0	55.9	24.9	-	100.0	44.4	0	1	5.5	-	0.0	69.1	66.2
대구	강화군	42.4	7	100.0	53.8	1	O	100.0	54.8	58.7	9.1	100.0	23.1	0	2	1.7	6.5	0.0	37.0	28.9
	옹진군	28.6	0	71.4	57.1	0	X	100.0	36.1	5.2	2.2	100.0	28.6	0	0	-	-	100.0	35.7	21.9
울산	울주군	16.8	4	100.0	66.7	1	O	100.0	54.6	0.9	33.3	100.0	83.3	0	2	0.9	20.3	25.0	69.9	65.6
	평택시	22.2	6	100.0	88.9	1	O	100.0	47.2	22.4	0.0	100.0	55.6	2	4	5.1	104.5	0.0	71.4	63.7
경기도	남양주시	26.1	5	100.0	100.0	1	O	100.0	47.7	10.5	-	100.0	100.0	1	1	0.0	-	77.8	84.2	79.5
	용인시	19.6	7	100.0	100.0	1	O	100.0	32.7	10.9	-	100.0	71.4	2	2	0.8	11.3	42.9	82.4	78.3
	파주시	13.3	5	90.9	81.8	1	O	100.0	43.1	5.8	-	100.0	90.9	1	1	1.4	-	63.6	75.2	71.0
	이천시	43.5	7	100.0	90.0	1	O	100.0	22.9	18.9	-	100.0	50.0	1	2	3.4	19.8	100.0	68.4	61.7
	안성시	27.4	2	100.0	91.7	1	O	97.6	46.8	81.9	-	100.0	41.7	1	2	4.8	0.0	100.0	62.8	55.1
	김포시	24.9	5	100.0	100.0	1	O	100.0	41.4	65.9	66.7	100.0	50.0	1	1	0.8	-	100.0	69.7	63.0
	화성시	14.2	4	100.0	100.0	1	O	100.0	23.9	23.2	66.7	100.0	53.8	0	2	3.9	41.0	0.0	79.2	74.6
	광주시	45.6	1	100.0	85.7	1	O	98.5	48.6	14.4	-	100.0	42.9	0	2	4.2	8.0	0.0	72.4	67.8
	양주시	32.5	4	100.0	80.0	1	O	100.0	51.6	46.0	-	100.0	100.0	1	2	0.0	15.5	100.0	74.1	69.2
	포천시	22.6	7	100.0	100.0	1	O	98.8	38.5	21.0	-	100.0	58.3	1	2	4.3	16.5	58.3	56.2	49.3
	여주군	20.6	4	100.0	100.0	1	O	100.0	33.8	16.7	-	100.0	70.0	1	1	0.8	-	10.0	53.5	46.0
	연천군	30.1	2	70.0	60.0	1	O	98.1	49.6	25.5	-	100.0	60.0	1	1	0.0	16.2	20.0	49.2	46.9
	가평군	49.2	10	100.0	50.0	1	O	98.2	47.7	4.0	-	100.0	50.0	2	2	2.4	10.5	100.0	52.0	43.2
	양평군	34.5	5	100.0	100.0	1	O	100.0	38.9	33.5	-	100.0	41.7	2	2	0.3	8.3	0.0	47.3	35.3
	강원도	춘천시	21.1	5	90.0	60.0	1	O	95.0	31.3	5.2	-	100.0	40.0	2	2	7.9	18.5	0.0	85.5
원주시		30.0	6	100.0	100.0	1	O	100.0	41.3	5.6	-	100.0	66.7	2	2	5.5	42.8	55.6	79.3	74.8
강릉시		29.5	3	100.0	87.5	1	O	100.0	49.1	24.7	45.5	100.0	25.0	1	3	0.4	52.8	62.5	76.2	70.7
삼척시		29.2	2	87.5	62.5	0	O	96.9	59.7	11.3	37.5	100.0	37.5	1	2	0.6	19.3	100.0	62.5	57.1

구분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 서비스	소방 서비스	도난방지		경찰 서비스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취약계층 노인 1회이상 주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 시설 1개 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 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소방 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행정리 방법범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 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대출/대여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홍천군	63.7	4	100.0	40.0	1	O	100.0	36.1	76.5	-	100.0	20.0	1	2	0.9	15.3	20.0	60.6	47.5	
	횡성군	43.7	1	100.0	88.9	1	O	99.1	41.9	10.3	-	100.0	33.3	0	1	2.2	-	11.1	58.4	45.7	
	영월군	19.6	1	100.0	44.4	1	O	98.6	41.1	34.5	-	100.0	22.2	0	2	0.5	4.0	33.3	55.9	44.0	
	평창군	27.7	3	100.0	100.0	1	O	98.9	37.7	13.7	-	100.0	50.0	1	2	0.9	8.3	0.0	52.9	39.3	
	정선군	12.2	2	100.0	77.8	1	O	100.0	73.5	14.9	-	100.0	44.4	1	2	0.0	21.0	0.0	57.8	49.1	
	철원군	19.9	2	85.7	57.1	1	O	100.0	66.3	30.4	-	100.0	42.9	0	2	2.9	9.0	42.9	60.9	57.4	
	화천군	40.2	2	100.0	100.0	0	O	100.0	42.6	23.5	-	100.0	60.0	1	2	0.5	1.5	60.0	65.7	61.9	
	양구군	43.4	5	100.0	60.0	1	O	100.0	43.3	47.4	-	100.0	40.0	0	2	2.8	12.5	60.0	55.8	52.7	
	인제군	20.4	3	100.0	66.7	1	O	100.0	55.1	25.0	-	100.0	33.3	0	2	0.4	12.0	33.3	55.7	47.0	
	고성군	21.5	6	100.0	100.0	0	O	100.0	60.3	35.4	50.0	100.0	80.0	0	2	1.1	0.0	60.0	55.1	49.0	
	양양군	52.6	0	100.0	66.7	0	O	99.1	52.1	19.4	50.0	100.0	33.3	0	1	5.6	-	50.0	54.1	45.2	
	충·청·북·도	충주시	92.6	1	100.0	76.9	1	O	100.0	77.2	18.6	-	100.0	46.2	1	3	21.7	31.5	38.5	78.6	74.6
		제천시	16.2	4	100.0	75.0	1	O	98.0	83.3	23.5	-	100.0	50.0	1	2	20.8	16.3	0.0	75.8	70.9
청원군		14.0	1	100.0	92.9	1	O	100.0	75.6	61.9	-	100.0	57.1	1	1	3.0	-	57.1	68.5	63.6	
보은군		43.8	5	100.0	27.3	1	O	100.0	60.0	12.6	-	100.0	9.1	1	2	2.5	4.0	0.0	51.2	39.9	
옥천군		23.1	3	100.0	33.3	1	O	100.0	73.0	10.5	-	100.0	11.1	0	3	0.8	11.5	88.9	54.2	48.4	
영동군		33.8	1	100.0	63.6	1	O	99.2	86.0	50.0	-	100.0	54.5	0	2	3.8	9.5	36.4	54.0	45.5	
진천군		66.6	1	100.0	100.0	1	O	100.0	90.7	17.1	-	100.0	42.9	0	3	0.0	5.8	100.0	66.9	61.8	
괴산군		80.1	5	100.0	54.5	1	O	100.0	79.5	25.4	-	100.0	54.5	1	1	0.7	-	90.9	50.0	41.6	
음성군		38.6	3	100.0	100.0	1	O	100.0	78.9	37.9	-	100.0	66.7	0	2	1.1	11.5	0.0	64.6	57.8	
단양군		25.0	4	100.0	62.5	1	O	100.0	51.4	30.4	-	100.0	25.0	1	1	0.4	-	12.5	52.6	42.2	
증평군		45.0	1	100.0	100.0	1	O	100.0	91.2	94.4	-	100.0	100.0	0	2	2.0	2.0	100.0	71.8	70.5	
충·청·남·도	천안시	16.4	3	100.0	75.0	1	O	100.0	68.9	21.9	-	100.0	83.3	1	5	0.8	22.3	25.0	88.7	84.8	
	공주시	18.8	1	100.0	90.9	1	O	100.0	60.5	34.6	-	100.0	9.1	1	2	7.9	16.3	0.0	70.1	60.6	
	보령시	41.1	3	100.0	72.7	1	O	100.0	63.4	19.1	8.0	100.0	45.5	1	2	0.2	8.0	18.2	60.7	55.0	
	아산시	68.4	1	100.0	100.0	1	O	100.0	78.8	35.3	-	100.0	90.9	1	1	0.8	-	36.4	82.2	75.5	
	서산시	20.7	3	100.0	100.0	1	O	99.2	54.0	34.6	28.6	100.0	70.0	1	2	16.8	22.3	40.0	72.3	65.6	

구분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 서비스	소방 서비스	도난방지		경찰 서비스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취약계층 노인 1회 이상 주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 시설 1개 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 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소방 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 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대출/대여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시·도	논산시	27.6	3	100.0	92.3	1	O	99.4	60.9	8.5	-	100.0	30.8	0	2	4.3	16.3	15.4	61.6	53.3
	계룡시	37.7	0	100.0	66.7	0	O	100.0	87.5	33.3	-	100.0	33.3	0	0	-	7.0	33.3	83.5	82.8
	금산군	25.2	2	100.0	80.0	1	O	100.0	81.8	8.3	-	100.0	30.0	1	2	1.4	12.0	80.0	56.2	48.8
	연기군	0.0	1	100.0	-	1	O	100.0	63.6	0.0	-	100.0	50.0	-	2	3.0	12.8	-	73.8	64.9
	부여군	15.5	2	100.0	56.3	1	O	100.0	73.2	27.3	-	100.0	18.8	1	2	0.0	10.8	18.8	50.1	38.6
	서천군	36.3	1	100.0	46.2	1	O	100.0	82.2	5.7	42.9	100.0	38.5	1	2	0.6	5.3	15.4	51.0	45.1
	청양군	23.1	2	100.0	60.0	1	O	100.0	58.8	27.3	-	100.0	10.0	0	2	1.3	9.5	0.0	49.4	40.8
	홍성군	26.5	3	100.0	72.7	1	O	100.0	72.5	15.9	16.7	100.0	36.4	0	2	14.8	6.3	0.0	58.1	47.3
	예산군	31.0	0	100.0	66.7	1	O	100.0	60.6	52.1	-	100.0	16.7	0	2	2.5	14.0	0.0	58.9	48.0
	태안군	8.2	3	100.0	62.5	1	O	100.0	39.2	15.1	19.0	100.0	37.5	0	2	0.7	22.3	12.5	53.7	44.0
	당진군	20.8	3	100.0	83.3	1	O	100.0	72.0	29.5	42.9	100.0	83.3	1	2	2.3	40.0	8.3	64.4	53.9
전라북도	군산시	15.1	2	100.0	90.9	1	O	100.0	71.8	10.4	27.8	100.0	45.5	0	2	0.0	32.0	0.0	77.5	73.6
	익산시	24.6	4	100.0	66.7	1	O	100.0	89.2	13.4	-	100.0	40.0	2	2	25.2	54.0	33.3	74.7	71.0
	정읍시	52.1	5	100.0	53.3	1	O	100.0	72.1	41.8	-	100.0	26.7	0	2	1.3	18.3	20.0	52.4	44.2
	남원시	33.7	2	100.0	62.5	1	O	100.0	65.9	7.8	-	100.0	31.3	0	2	1.1	46.0	18.8	50.7	44.2
	김제시	21.1	6	100.0	46.7	1	O	100.0	68.3	3.9	-	100.0	40.0	1	2	7.3	17.5	0.0	46.5	34.0
	완주군	21.6	4	100.0	84.6	1	O	99.1	54.9	22.7	-	100.0	69.2	1	2	0.0	0.0	30.8	58.9	50.8
	진안군	21.2	3	90.9	36.4	1	O	100.0	52.3	30.0	-	100.0	36.4	1	2	4.8	1.0	36.4	40.5	31.8
	무주군	18.7	3	100.0	83.3	1	O	100.0	80.0	74.7	-	100.0	50.0	1	2	7.8	18.8	100.0	41.1	31.8
	장수군	41.1	1	100.0	42.9	1	O	98.6	75.5	6.0	-	100.0	71.4	1	2	0.2	1.3	28.6	41.4	27.5
	임실군	23.5	2	100.0	25.0	1	O	100.0	77.8	5.1	-	100.0	25.0	0	1	0.0	-	100.0	41.6	31.9
	순창군	24.4	2	100.0	72.7	1	O	99.2	70.7	19.0	-	100.0	9.1	0	2	30.6	3.8	9.1	43.0	33.6
	고창군	19.6	3	100.0	64.3	1	O	98.9	61.8	10.5	0.0	100.0	21.4	0	2	2.0	6.8	57.1	47.9	37.7
전라	부안군	37.9	2	100.0	53.8	1	O	100.0	67.0	12.2	19.0	100.0	30.8	1	2	0.9	5.3	0.0	44.9	33.9
	여수시	23.2	2	100.0	85.7	1	O	96.6	51.9	20.4	5.3	100.0	42.9	2	2	13.8	41.3	57.1	73.7	70.1
	순천시	12.3	2	100.0	72.7	1	O	100.0	51.6	16.2	0.0	100.0	81.8	0	2	0.0	37.0	36.4	73.6	69.5
전라	나주시	19.3	2	100.0	92.3	1	O	100.0	46.6	11.0	-	100.0	23.1	0	2	0.4	35.8	46.2	51.6	40.4

구분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 서비스	소방 서비스	도난방지		경찰 서비스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취약계층 노인 1회이상 주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 시설 1개 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 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소방 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 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대출/대여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남도	광양시	37.5	2	100.0	71.4	1	O	100.0	77.0	5.6	0.0	100.0	14.3	1	2	0.7	5.3	42.9	80.4	75.6	
	담양군	54.2	3	100.0	33.3	1	O	100.0	63.9	4.3	-	100.0	50.0	3	2	5.3	3.0	16.7	45.2	34.6	
	곡성군	24.6	1	81.8	27.3	1	O	99.2	57.8	19.9	-	100.0	54.5	1	1	9.6	-	36.4	41.6	30.0	
	구례군	32.5	2	100.0	37.5	0	O	100.0	47.1	16.4	-	100.0	25.0	0	1	0.0	-	25.0	51.7	40.8	
	고흥군	21.2	4	100.0	75.0	1	O	99.2	53.6	7.6	5.5	100.0	37.5	1	2	0.3	7.0	75.0	45.3	33.0	
	보성군	95.5	1	100.0	50.0	1	O	99.2	53.2	12.4	0.0	100.0	58.3	0	1	2.6	-	100.0	42.6	33.5	
	화순군	25.6	0	92.3	15.4	1	O	98.4	72.4	8.2	-	100.0	38.5	0	2	3.3	0.5	23.1	59.1	52.2	
	장흥군	31.0	3	100.0	70.0	1	O	99.2	60.5	18.3	6.1	100.0	70.0	0	2	0.4	8.0	0.0	42.4	35.0	
	강진군	29.3	0	100.0	54.5	1	O	100.0	58.9	10.3	12.5	100.0	45.5	1	2	0.0	12.0	18.2	43.2	34.2	
	해남군	16.2	1	100.0	71.4	1	O	100.0	39.3	3.9	2.0	100.0	21.4	1	2	19.2	7.8	100.0	45.0	38.2	
	영암군	36.5	1	100.0	81.8	1	O	100.0	61.8	6.8	-	100.0	27.3	1	2	2.5	0.8	100.0	54.5	45.8	
	무안군	45.7	1	100.0	88.9	1	O	100.0	73.9	5.3	0.0	100.0	77.8	0	2	0.6	6.3	0.0	51.6	45.2	
	함평군	16.2	0	100.0	100.0	1	O	100.0	84.0	7.7	0.0	100.0	33.3	0	1	4.3	-	0.0	43.2	25.7	
	영광군	52.4	0	90.9	54.5	1	O	100.0	74.8	4.5	4.5	100.0	45.5	0	1	6.4	-	27.3	46.5	31.4	
	장성군	20.4	1	100.0	36.4	1	O	100.0	52.1	48.5	-	100.0	36.4	0	1	1.2	-	36.4	50.8	39.7	
	완도군	40.2	3	100.0	83.3	1	O	100.0	37.5	9.7	3.0	100.0	33.3	0	2	1.0	9.8	25.0	42.5	30.7	
	진도군	33.0	1	100.0	85.7	1	O	96.5	37.0	5.8	2.8	100.0	14.3	0	2	8.0	10.8	0.0	42.4	34.0	
	신안군	23.6	1	100.0	85.7	0	O	94.8	47.1	3.8	1.9	100.0	35.7	2	1	1.1	-	0.0	41.3	16.5	
경상북도	포항시	31.3	3	100.0	78.6	1	O	99.0	66.8	9.5	14.8	100.0	57.1	0	2	0.0	50.8	7.1	80.8	75.2	
	경주시	27.5	5	100.0	91.7	1	O	99.3	38.8	3.4	16.7	100.0	41.7	0	4	23.1	55.8	0.0	65.7	54.2	
	김천시	23.6	2	93.3	53.3	1	O	99.3	50.0	5.8	-	100.0	13.3	0	3	2.8	20.5	13.3	53.9	46.4	
	안동시	74.3	2	100.0	71.4	1	O	97.7	29.9	29.1	-	100.0	14.3	0	3	3.2	54.8	0.0	52.3	46.7	
	구미시	45.8	3	100.0	62.5	1	O	100.0	40.8	6.5	-	100.0	25.0	0	2	1.3	61.3	0.0	75.9	72.6	
	영주시	23.4	5	100.0	60.0	1	O	98.9	39.1	48.7	-	100.0	20.0	1	2	2.1	7.5	0.0	47.6	43.1	
	영천시	24.7	2	81.8	72.7	1	O	99.4	35.1	9.8	-	100.0	45.5	0	2	0.4	9.5	45.5	53.9	42.2	
	상주시	21.4	2	94.4	44.4	1	O	100.0	50.7	7.2	-	100.0	5.6	0	2	0.0	14.8	5.6	45.1	35.6	
	문경시	23.5	3	88.9	66.7	1	O	100.0	36.7	5.2	-	100.0	33.3	0	2	4.2	15.5	0.0	43.7	35.4	

구분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경찰서비스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취약계층 노인 1회이상 주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청소년 활동진흥 시설 1개 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행정리범범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도착	읍면공공작은도서관	도서대출대여대안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경상남도	경산시	20.9	3	100.0	75.0	1	O	99.3	63.2	11.5	-	100.0	50.0	0	2	0.8	39.8	0.0	82.8	77.2
	군위군	24.5	1	87.5	25.0	1	O	98.9	33.3	23.9	-	100.0	50.0	0	2	0.0	4.3	12.5	38.7	26.3
	의성군	28.9	1	88.9	38.9	1	O	99.4	44.2	31.5	-	100.0	22.2	0	1	1.1	66.0	11.1	38.2	26.3
	청송군	63.4	0	100.0	75.0	1	O	100.0	37.5	40.0	-	100.0	37.5	0	1	0.0	-	37.5	41.3	32.3
	영양군	29.2	1	100.0	66.7	1	O	100.0	38.9	8.8	-	100.0	33.3	1	2	0.9	0.0	50.0	38.7	27.5
	영덕군	20.1	2	88.9	44.4	1	O	97.4	34.3	17.2	17.2	100.0	33.3	0	2	12.5	9.8	22.2	40.6	32.2
	청도군	36.1	1	88.9	55.6	1	O	100.0	31.6	15.6	-	100.0	33.3	0	1	0.3	-	11.1	41.9	26.8
	고령군	41.4	0	100.0	62.5	1	O	100.0	56.0	63.2	-	100.0	37.5	0	2	1.7	2.0	50.0	47.6	37.5
	성주군	34.1	0	90.0	80.0	1	O	100.0	68.5	7.3	-	100.0	70.0	0	2	0.4	5.8	50.0	37.8	25.3
	칠곡군	82.9	1	100.0	87.5	1	O	100.0	38.3	21.4	-	100.0	75.0	0	1	1.6	15.8	0.0	68.1	60.1
	예천군	22.5	1	75.0	58.3	1	O	100.0	46.5	13.2	-	100.0	16.7	0	2	2.0	7.3	33.3	38.0	28.6
	봉화군	20.0	1	100.0	60.0	1	O	97.3	37.8	29.5	-	100.0	60.0	0	1	0.6	-	30.0	37.7	25.5
	울진군	96.1	2	100.0	70.0	1	O	96.3	67.0	15.3	13.0	100.0	60.0	0	2	1.8	5.3	10.0	48.1	38.9
	울릉군	22.2	2	100.0	33.3	1	O	70.0	75.0	60.0	14.3	100.0	33.3	0	2	0.1	2.3	33.3	38.6	1.7
경상남도	창원시	26.3	8	100.0	87.5	2	O	100.0	43.2	9.9	-	100.0	62.5	0	6	3.8	165.5	0.0	80.3	76.7
	진주시	23.5	1	100.0	87.5	1	O	99.2	27.5	26.1	-	100.0	37.5	1	2	0.2	26.5	0.0	64.2	61.7
	통영시	23.7	1	100.0	42.9	1	O	96.0	29.0	8.1	1.8	100.0	71.4	0	2	0.3	30.8	57.1	56.5	50.9
	사천시	22.5	2	100.0	75.0	1	O	100.0	45.9	80.6	2.2	100.0	75.0	1	2	0.3	36.3	0.0	53.7	49.3
	김해시	21.0	5	100.0	100.0	1	O	98.8	46.9	5.5	-	100.0	87.5	1	2	1.2	57.3	25.0	78.7	74.5
	밀양시	17.2	3	100.0	81.8	1	O	100.0	44.1	0.0	-	100.0	36.4	1	1	1.3	-	0.0	54.9	47.2
	거제시	65.9	4	100.0	66.7	1	O	100.0	26.0	9.2	7.7	100.0	11.1	1	2	0.7	43.5	22.2	61.5	58.3
	양산시	31.7	3	100.0	60.0	1	O	100.0	41.5	8.5	-	100.0	80.0	1	2	0.5	31.3	60.0	81.6	79.2
	의령군	22.4	4	100.0	23.1	1	O	100.0	25.4	6.4	-	100.0	38.5	0	2	0.7	4.0	23.1	43.5	34.6
	함안군	35.7	1	100.0	70.0	1	O	100.0	49.7	17.8	-	100.0	30.0	0	1	2.5	15.8	10.0	29.3	23.1
	창녕군	19.7	3	100.0	50.0	1	O	100.0	47.3	64.0	-	100.0	50.0	0	1	0.6	-	0.0	46.5	36.8
고성군	20.2	2	100.0	42.9	1	O	99.1	21.5	11.8	4.5	100.0	21.4	0	2	0.6	2.8	7.1	49.1	42.7	
남해군	19.3	0	100.0	50.0	1	O	100.0	39.8	5.0	3.6	100.0	50.0	0	2	4.5	1.5	20.0	43.8	32.4	

구분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경찰서비스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취약계층 노인 주1회이상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 시설 1개 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 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소방 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행정리 방법범 용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 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여 대안 시스템	문화 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 고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하동군	26.5	7	100.0	61.5	1	O	100.0	21.7	2.8	7.1	100.0	84.6	0	2	0.3	3.3	100.0	44.1	35.6
	산청군	46.2	3	100.0	54.5	1	O	100.0	33.0	1.8	-	100.0	36.4	1	2	2.0	6.0	45.5	43.5	29.8
	함양군	21.3	1	100.0	45.5	1	O	100.0	41.3	12.1	-	100.0	45.5	0	2	0.7	1.3	0.0	87.2	72.1
	거창군	24.1	2	100.0	33.3	1	O	100.0	31.8	60.9	-	100.0	16.7	1	2	2.6	7.8	8.3	48.1	38.5
	합천군	30.3	4	100.0	41.2	1	O	100.0	30.9	8.6	-	100.0	41.2	1	2	7.8	0.8	11.8	44.0	29.9
제주도	제주시	39.4	12	100.0	100.0	1	O	100.0	74.5	18.8	6.8	100.0	71.4	1	4	2.8	120.5	100.0	67.3	63.0
	서귀포시	39.3	15	100.0	100.0	1	O	100.0	68.5	21.1	12.5	100.0	100.0	1	1	1.2	-	100.0	57.0	49.0

부록 4.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260

구분		국토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택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진료서비스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읍면도서대출가능	도서대안시스템		시군내문화시설1개 이상	월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 2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최저 주거기준비율 90% 이상	도보 15분내 정류장 3회 이상 운행	본도시역 1일 이상	생활도로서지자도인도 구분	적정규모	적정통수	우수교당 1개 이상	폐교시 주민견수	방과후 참여율 70% 이상	교육지원회 설치	읍면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읍면도서대출가능	도서대안시스템	시군내문화시설 1개 이상	월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 2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시군내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순회 방문 월1회 이상	의약품 구입				
부산	기장군	X	X	X	-	X	X	-	O	-	O	X	X	X	X	O	O	X	O	O	X	O	
	달성군	O	X	X	-	X	X	O	O	O	O	X	X	X	O	O	X	X	O	X	O		
대구	경화군	X	X	X	O	X	X	-	O	-	O	O	X	X	O	O	O	X	O	X	O		
	용진군	X	X	X	X	X	X	-	X	-	O	X	X	X	X	X	O	X	X	O			
울산	울주군	O	X	X	-	X	X	-	O	-	O	X	X	X	O	X	O	X	O	X	O		
	평택시	O	X	X	-	X	X	-	O	-	X	X	X	O	O	O	X	O	X	O			
	남양주시	O	X	X	-	X	X	-	O	-	X	O	X	O	O	X	X	X	O	X	O		
	용인시	O	X	O	-	X	X	-	O	-	O	X	O	X	O	X	O	X	O	X	O		
	파주시	O	X	O	-	O	X	-	O	-	O	O	X	O	O	O	X	O	X	X	X		
	이천시	O	X	O	-	X	X	O	O	O	O	X	X	O	O	O	O	O	X	O	O		
	안성시	O	X	X	-	X	X	O	X	O	O	O	X	O	O	O	X	O	O	X	O		
	김포시	O	X	O	-	X	X	-	O	-	O	X	X	O	O	X	X	O	O	O	O		
	화성시	O	X	X	-	X	X	-	O	-	X	O	X	X	O	O	X	O	X	X	X		
	광주시	O	X	O	-	X	-	-	O	-	O	X	X	X	O	O	O	X	O	X	O		
	양주시	O	X	O	-	X	X	-	O	-	X	O	X	O	O	X	O	O	X	O	O		
	포천시	O	X	O	-	O	X	-	O	-	X	O	X	X	O	O	O	X	O	X	O		
	여주군	O	X	O	-	O	X	O	O	O	O	O	X	X	O	O	X	X	X	O	O		
	연천군	X	X	O	-	X	X	-	O	-	O	O	X	X	O	O	X	O	O	O	O		
	가평군	X	X	X	-	X	X	-	O	-	O	O	X	X	O	O	O	O	O	X	O		
	양평군	X	X	O	-	X	X	O	O	O	O	O	X	X	O	O	X	O	X	O	O		
	춘천시	X	X	O	-	X	X	O	X	O	O	X	X	O	O	O	O	X	O	X	O		
	원주시	O	X	X	-	X	X	-	X	-	O	O	X	X	O	O	O	X	O	X	X		
	강릉시	X	X	O	-	X	X	O	X	O	O	X	X	X	O	O	X	O	X	X	O		
	삼척시	X	X	X	-	X	X	O	X	O	O	O	X	X	O	O	X	O	O	X	O		
	홍천군	X	X	X	-	X	X	O	O	O	O	X	X	O	O	X	O	X	O	X	O		
	횡성군	X	X	O	-	X	X	O	O	O	O	X	X	X	O	O	X	O	X	O	O		
	영월군	X	X	O	-	X	X	O	O	O	O	X	X	X	O	X	O	X	O	X	O		
	평창군	X	X	X	-	X	X	O	O	O	O	X	X	O	O	X	O	X	O	X	O		
	정선군	X	X	X	-	X	X	O	O	O	O	O	X	X	O	O	X	O	X	X	O		
	철원군	X	X	X	-	X	X	-	O	-	O	O	X	X	X	O	O	X	O	X	X		
	화천군	X	X	X	-	X	X	-	O	-	O	O	X	X	O	O	X	O	X	O	O		
	양구군	X	X	O	-	X	X	-	O	-	O	O	X	X	X	O	O	X	X	X	O		
	인제군	X	X	X	-	X	X	-	O	-	O	X	X	X	O	X	O	X	X	X	O		
	고성군	X	X	X	-	X	X	O	O	O	O	X	X	X	O	O	X	X	X	O	O		
	양양군	X	X	O	-	X	X	-	O	-	X	X	X	X	O	O	X	X	X	O	O		

구분		국토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택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진료 서비스	순회 방문	의약품 구입
		최저기준비율 90% 이상	주거지원율 15% 이상					도보 3회 이상 운행	준공공도로 운영								본도지역 1일 이상	생활도로 정비사업차도 구분	적정모형 구축	적정수준 제공				
충청북도	충주시	X	X	X	-	X	X	O	O	O	O	X	X	O	O	O	O	X	O	X	O	X	O	
	제천시	X	X	O	-	X	X	-	O	-	O	X	X	O	O	O	O	X	O	X	O	X	O	
	청원군	O	X	O	-	X	X	-	O	-	O	X	X	O	O	O	X	X	O	X	O	X	O	
	보은군	X	X	X	-	X	X	O	O	O	O	X	X	O	O	O	O	X	O	X	O	X	O	
	옥천군	X	X	X	-	X	X	O	O	O	O	X	X	X	O	X	O	X	O	X	O	X	O	
	영동군	X	X	X	-	X	X	-	O	-	O	X	X	X	O	O	O	X	O	X	O	X	O	
	진천군	X	X	X	-	X	X	-	O	-	O	X	X	X	O	X	O	O	O	X	O	X	O	
	괴산군	X	X	O	-	X	X	O	O	O	O	X	X	O	O	X	X	X	X	X	X	O	O	
	음성군	O	X	O	-	X	X	-	O	-	O	X	X	X	O	O	O	X	O	X	O	X	O	O
	단양군	X	X	X	-	X	X	O	O	O	O	X	X	O	O	X	X	X	X	X	X	X	O	O
충청남도	충평군	O	X	O	-	X	-	-	O	-	O	O	X	O	X	O	O	O	O	O	O	X	O	O
	천안시	O	X	X	-	X	X	-	O	-	O	X	X	X	O	O	X	O	X	O	X	O	X	O
	공주시	X	X	X	-	X	X	-	O	-	O	X	X	X	O	O	O	O	X	O	X	O	X	O
	보령시	O	X	O	-	X	X	-	X	-	O	O	X	X	O	O	X	O	X	O	X	O	X	O
	아산시	O	X	O	-	O	X	-	O	-	O	O	X	X	O	O	X	X	X	O	X	O	X	O
	서산시	O	X	X	-	X	X	O	X	O	O	O	X	X	O	O	O	O	X	O	X	O	X	O
	논산시	X	X	X	-	X	X	O	O	O	O	O	X	X	X	O	O	O	X	O	X	O	X	O
	계룡시	O	O	X	-	X	-	-	X	-	O	O	X	X	X	X	X	X	O	O	X	O	X	O
	금산군	X	X	X	-	X	X	O	O	O	O	O	X	X	O	O	O	O	X	O	X	O	X	O
	연기군	X	X	-	-	X	O	O	O	O	O	-	X	X	-	O	O	O	-	-	-	-	-	O
전라북도	부여군	X	X	O	-	X	X	O	O	O	O	O	X	X	O	O	X	O	X	O	X	O	X	O
	서천군	X	X	X	-	X	X	-	O	-	O	O	X	X	O	O	X	O	X	O	X	O	X	O
	청양군	X	X	X	-	X	X	X	O	O	O	O	X	X	X	O	O	O	X	O	X	O	X	O
	홍성군	X	X	X	-	X	X	O	O	O	O	O	X	X	X	O	O	O	X	O	X	O	X	O
	예산군	O	X	X	-	X	X	-	O	-	O	X	X	X	X	O	O	O	X	O	X	O	X	O
	태안군	X	X	X	-	X	X	-	O	-	O	O	X	X	X	O	X	O	X	O	X	O	X	O
	당진군	O	X	O	-	X	X	-	O	-	O	X	X	X	O	O	O	O	X	O	X	O	X	O
	군산시	O	X	X	-	O	X	-	X	-	O	O	X	X	X	O	O	X	O	X	O	X	O	O
	익산시	O	X	X	-	X	X	O	X	O	O	O	X	X	O	O	O	O	X	O	X	O	X	O
	정읍시	O	X	X	-	X	X	O	O	O	O	X	X	X	X	O	O	O	X	O	X	O	X	O
전라남도	남원시	X	X	X	-	X	X	-	O	-	O	O	X	X	X	O	O	O	X	O	X	O	X	X
	김제시	X	X	X	-	X	X	-	O	-	O	X	X	X	O	O	O	O	X	O	X	O	X	O
	완주군	X	X	O	-	X	X	O	O	O	O	X	X	X	O	O	X	X	X	X	X	X	O	O
	진안군	X	X	X	-	X	X	O	O	O	O	X	X	X	O	O	O	O	X	X	X	X	O	O
	무주군	X	X	O	-	X	X	-	O	-	O	O	X	X	O	O	O	O	O	O	X	O	X	O
	장수군	X	X	X	-	X	X	O	O	O	O	X	X	X	O	O	X	O	X	O	X	O	X	O
	임실군	X	X	X	-	X	X	-	O	-	O	X	X	X	X	O	X	X	O	X	X	X	O	O

구분		국토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택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적정규모화성	적정통수제공						우수고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견련	방과후학교 참여율 70% 이상	교육발전회 설치	읍면내 도서출판가능					도서대안시스템
전라남도	고창군	○	X	X	-	X	X	-	○	-	○	○	X	X	X	○	○	○	X	○	X	○	
	부안군	○	X	X	○	X	X	○	○	○	○	X	X	X	○	○	X	○	X	○	X	○	
	여수시	○	X	X	○	X	X	○	○	X	○	○	X	X	○	○	○	○	X	○	X	○	
	순천시	○	X	X	-	X	X	○	X	○	X	○	X	X	X	○	X	○	X	○	X	○	
	나주시	X	X	○	-	X	X	○	○	○	○	○	X	X	X	○	X	○	X	○	X	○	
	광양시	○	X	○	-	X	X	○	○	○	○	○	X	X	○	○	X	○	X	○	X	○	
	담양군	X	X	X	-	X	X	○	○	○	○	X	X	○	○	○	○	X	○	X	○		
	곡성군	X	X	X	-	X	X	-	○	-	○	○	X	X	○	○	○	X	X	X	X	○	
	구례군	X	X	X	-	X	X	-	○	-	○	X	X	X	X	○	X	X	X	X	X	○	
	고흥군	X	X	X	○	X	X	○	○	○	○	○	X	X	○	○	X	○	X	○	X	○	
	보성군	X	X	X	-	X	X	-	○	-	○	X	X	X	X	○	○	X	○	X	X	○	
	화순군	X	X	X	-	X	X	○	○	X	○	○	X	X	X	○	○	X	X	○	X	○	
	장흥군	X	X	○	-	○	X	-	○	-	○	X	X	X	X	○	X	○	X	○	X	○	
	강진군	X	X	X	-	X	X	○	○	○	○	○	X	X	○	○	X	○	X	○	X	○	
	해남군	X	X	X	-	X	X	○	○	○	○	○	X	X	○	○	○	○	○	○	X	○	
	영암군	X	X	○	-	X	X	○	○	X	○	○	X	X	○	○	○	X	○	X	X	○	
	무안군	○	X	X	-	X	X	○	○	○	○	○	X	X	X	○	X	○	X	○	X	○	
	함평군	X	X	X	-	X	X	-	○	-	○	○	X	X	X	○	○	X	X	X	X	○	
	영광군	X	X	X	○	X	X	○	○	X	○	○	X	X	X	○	○	X	X	○	X	○	
	장성군	X	X	○	-	X	X	○	○	○	○	○	X	X	X	○	○	X	X	○	X	○	
	완도군	○	X	X	○	X	X	○	○	○	○	○	X	X	X	○	○	○	X	○	X	○	
	진도군	X	X	○	○	X	X	○	○	○	○	○	X	X	X	○	○	○	X	X	X	○	
	신안군	X	X	○	○	X	X	○	○	X	○	○	X	X	○	○	○	X	X	X	X	○	
경상북도	포항시	X	X	X	-	X	X	○	X	○	○	○	X	X	X	○	X	○	X	○	X	○	
	경주시	X	X	X	-	X	X	○	○	○	○	X	X	X	X	○	○	○	X	○	X	○	
	김천시	X	X	X	-	X	X	○	○	○	○	○	X	X	X	○	○	○	X	○	X	○	
	안동시	X	X	X	-	X	X	○	X	○	○	○	X	X	X	○	○	○	X	○	X	○	
	구미시	○	X	X	-	X	X	○	○	○	○	○	X	X	X	○	○	○	X	○	X	○	
	영주시	X	X	X	-	X	X	○	○	○	○	○	X	X	○	○	○	○	X	○	X	○	
	영천시	X	X	X	-	X	X	○	○	○	○	○	X	X	X	○	X	○	X	○	X	○	
	상주시	X	X	X	-	X	X	○	○	○	○	X	X	X	X	○	X	○	X	○	X	○	
	문경시	X	X	X	-	X	X	○	○	○	○	○	X	X	X	○	○	○	X	○	X	○	
	경산시	X	X	X	-	X	X	○	X	○	○	○	X	X	X	○	X	○	X	○	X	○	
	군위군	X	X	X	-	X	X	○	○	○	○	○	X	X	X	○	X	○	X	X	X	○	
	의성군	X	X	X	-	X	X	○	○	○	○	X	X	X	X	○	○	○	X	X	X	○	
	청송군	X	X	X	-	X	X	-	○	-	○	X	X	X	X	○	X	X	X	○	X	○	

구분		국토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택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합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총합

주 1) 'O'는 해당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했음을 의미하고, 'X'는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또한 '-'는 해당하지 않거나,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2) 다음과 같은 5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제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부록 4.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계속)

264

구분		복지부		여가부			지정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방통위		다부처			
		복지		복지			주거	주거		응급		응급		응급	정보통신	정보통신	복지부 /교과부	지정부 /산림청	기타47)	
		노인	영유아	청소년	다문화가족		난방	상수도	하수도	경찰 서비스	도난 방지	응급서 비스	소방서 비스	도난 방지	초고속망	초고속망	아동48)	난방49)	마을공동시설	
		주1회 이상 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읍면별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청소년 활동 시설 시군 1개 이상	시군당 1개소 이상	방문 서비스 제공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50% 이상	면지역 상수도 보급75% 이상	하수도 보급71% 이상	10분내 현장 도착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30분내 응급 현장 도착	5분내 도착 55% 이상	항포구 CCTV 설치	초고 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통 합망 구축률 80%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등학교 운영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저감 정책추진	공동 시설 운영비 지원	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산	기장군	X	O	O	O	O	O	O	O	O	X	O	X	X	X	X	O	O	O	X
	달성군	X	X	O	O	O	O	O	O	O	X	O	O	-	X	X	O	O	O	O
대구	강화군	X	X	O	O	O	X	X	X	O	X	O	X	X	X	X	O	O	X	X
	웅진군	X	X	X	X	X	-	X	X	O	X	O	X	X	X	X	X	O	X	X
인천	울주군	X	X	O	O	O	O	X	O	O	X	O	X	X	X	X	O	O	X	X
	평택시	X	X	O	O	O	O	X	O	O	X	O	X	X	X	X	O	O	X	X
울산	남양주시	X	O	O	O	O	O	X	O	O	X	O	X	-	X	X	O	O	X	X
	용인시	X	O	O	O	O	O	X	O	O	X	O	X	-	X	X	O	O	X	X
경기도	파주시	X	X	O	O	O	O	X	X	O	X	O	X	-	X	X	X	O	X	X
	이천시	X	X	O	O	O	O	X	X	O	X	O	X	-	X	X	O	O	X	X
경기도	안성시	X	X	O	O	O	O	X	X	O	X	X	X	-	X	X	O	O	X	X
	김포시	X	O	O	O	O	O	X	X	O	X	O	X	X	X	X	O	O	X	X
경기도	화성시	X	O	O	O	O	O	O	O	O	X	O	X	X	X	X	O	O	X	X
	광주시	X	X	O	O	O	O	O	O	O	X	X	X	-	X	X	O	O	X	X
경기도	양주시	X	X	O	O	O	O	O	O	O	X	O	X	-	X	X	O	O	O	X
	포천시	X	O	O	O	O	O	X	X	O	X	X	X	-	X	X	O	O	X	X
경기도	여주군	X	O	O	O	O	O	X	X	O	X	O	X	-	X	X	O	O	O	X
	연천군	X	X	O	O	O	X	O	O	O	X	X	X	-	X	X	X	O	O	X
경기도	가평군	X	X	O	O	O	X	X	O	O	X	X	X	-	X	X	O	O	X	X
	양평군	X	O	O	O	O	X	X	O	O	X	O	X	-	X	X	O	O	O	O
강원도	춘천시	X	X	O	O	O	X	X	O	O	X	X	X	-	X	O	X	O	X	X
	원주시	X	O	O	O	O	O	X	O	O	X	O	X	-	X	X	O	O	X	X
강원도	강릉시	X	X	O	O	O	X	X	O	O	X	O	X	X	X	X	O	O	O	X
	삼척시	X	X	O	X	O	X	X	O	O	X	X	O	X	X	X	X	O	O	O
강원도	홍천군	X	X	O	O	O	O	X	X	O	X	O	X	-	X	X	O	O	X	X
	횡성군	X	X	O	O	O	X	X	X	O	X	X	X	-	X	X	O	O	X	X
강원도	영월군	X	X	O	O	O	X	X	X	O	X	X	X	-	X	X	O	O	X	X
	평창군	X	O	O	O	O	X	X	X	O	X	X	X	-	X	X	O	O	X	X
강원도	정선군	X	X	O	O	O	X	X	O	O	X	O	O	-	X	X	O	O	X	X
	철원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X	O	O	X
강원도	화천군	X	O	O	X	O	X	X	X	O	X	O	X	-	X	X	O	O	O	O

구분		복지부		여가부			지경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방통위		다부처			
		복지		복지			주거		주거		응급		응급		응급		정보통신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산림청	기타 ⁴⁷⁾	
		노인		영유아		청소년	다문화가족		난방	상수도	하수도	경찰 서비스	도난 방지	응급서 비스	소방서 비스	도난 방지	초고속망		아동 ⁴⁸⁾	난방 ⁴⁹⁾	마을공동시설	
		주1회 이상 국가노인 복지 서비스	읍면별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청소년 활동 진행 률 시군 1개 이상	시군당 1개소 이상	방문 서비스 제공	읍·지 역 도시 가스 보급 50% 이상	면·지 역 상수 도 보급 75% 이상	하수 도 보급 71% 이상	10분 내 현장 도착	마을 방범 용 CCTV 설치	30분 내 응급 현장 도착	5분 내 도착 55% 이상	항포구 CCTV 설치	초고 속망 구축 률 100%	광대 역 통 합 망 구축 률 80%	읍면별 지역 아동 보호 센터 초등 교 실 운영	신재생 에너지 등 정책 추진	공 동 시설 상 설 운영 비 지 원	공 동 시설 상 설 프로그램 운영 지 원		
충 청 북 도	양구군	X	X	O	O	O	X	X	O	O	X	O	X	-	X	X	O	O	X	X		
	인제군	X	X	O	O	O	X	X	O	O	X	O	O	-	X	X	O	O	X	X		
	고성군	X	O	O	X	O	X	O	O	O	X	O	O	X	X	X	O	O	X	X		
	양양군	X	X	X	X	O	X	X	X	O	X	X	X	X	X	X	O	O	X	X		
	충주시	X	X	O	O	O	X	X	O	O	X	O	O	-	X	X	O	O	X	X		
	제천시	X	X	O	O	O	X	X	O	O	X	X	O	-	X	X	O	O	O	X		
	청원군	X	X	O	O	O	O	X	X	O	X	O	O	-	X	X	O	O	X	X		
	보은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X	X		
	옥천군	X	X	O	O	O	X	X	O	O	X	O	O	-	X	X	O	O	O	O		
	영동군	X	X	O	O	O	X	X	X	O	X	X	O	-	X	X	O	O	X	X		
	진천군	X	O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X	X		
	괴산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O	X		
	음성군	X	O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X	X		
	단양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X	X		
충 청 남 도	증평군	X	O	O	O	O	O	X	O	O	X	O	O	-	X	X	O	O	O	X		
	천안시	X	X	O	O	O	O	X	O	O	X	O	O	-	X	O	O	O	X	X		
	공주시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O	O		
	보령시	X	X	O	O	O	X	X	X	O	X	O	O	X	X	X	O	O	X	X		
	아산시	X	O	O	O	O	O	X	X	O	X	O	O	-	X	X	O	O	X	X		
	서산시	X	O	O	O	O	X	X	X	O	X	X	X	X	X	X	O	O	O	O		
	논산시	X	X	O	O	O	X	X	X	O	X	X	O	-	X	X	O	O	X	X		
	계룡시	X	X	X	X	O	-	O	O	O	X	O	O	-	X	O	O	O	X	X		
	금산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X	X		
	연기군	-	-	O	O	O	O	X	X	O	-	O	O	-	X	X	O	O	-	-		
	부여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X	X		
	서천군	X	X	O	O	O	X	X	X	O	X	O	O	X	X	X	O	O	X	X		
	청양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O	O		
	홍성군	X	X	O	O	O	X	X	X	O	X	O	O	X	X	X	O	O	X	X		
전	예산군	X	X	X	O	O	X	X	X	O	X	O	O	-	X	X	O	O	X	X		
	태안군	X	X	O	O	O	X	X	X	O	X	O	X	X	X	X	O	O	X	X		
	당진군	X	X	O	O	O	O	X	X	O	X	O	O	X	X	X	O	O	O	X		
	군산시	X	X	O	O	O	X	X	O	O	X	O	O	X	X	X	O	O	X	X		
	익산시	X	X	O	O	O	X	O	O	O	X	O	O	-	X	X	O	O	O	X		

구분	복지부		여가부			지경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방통위		다부처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산림청	기타47)			
	복지		복지			주거	주거		응급		응급	응급	정보통신		복지	주거	주거			
	노인	영유아	청소년	다문화가족		난방	상수도	하수도	경찰 서비스	도난 방지	응급서 비스	소방서 비스	도난 방지	초고속망		아동48)	난방49)	마을공동시설		
	주1회 이상 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읍면별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 시설 시군 1개 이상	시군당 1개소 이상	방문 서비스 제공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50% 이상	면지역 상수도 보급75% 이상	하수도 보급71% 이상	10분내 현장 도착	마을 범범용 CCTV 설치	30분내 응급 현장 도착	5분내 도착 55% 이상	항포구 CCTV 설치	초고 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 구축률 80%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초등 교육 시설 운영	신재생 에너지 등 저감 정책 추진	공동 시설 운영 지원	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라 북 도	정읍시	X	X	O	O	O	X	O	X	O	X	O	O	-	X	X	O	O	X	X
	남원시	X	X	O	O	O	X	X	O	O	X	O	O	-	X	X	O	O	O	X
	김제시	X	X	O	O	O	X	O	X	O	X	O	O	-	X	X	O	O	X	X
	완주군	X	X	O	O	O	O	X	X	O	X	X	X	-	X	X	O	O	X	X
	진안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X	O	X	X
	무주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O	X
	장수군	X	X	O	O	O	X	X	X	O	X	X	O	-	X	X	O	O	X	X
	임실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O	O
	순창군	X	X	O	O	O	X	X	X	O	X	X	O	-	X	X	O	O	X	X
	고창군	X	X	O	O	O	X	O	X	O	X	X	O	X	X	X	O	O	X	X
전 라 남 도	부안군	X	X	O	O	O	X	O	X	O	X	O	O	X	X	X	O	O	X	X
	여수시	X	X	O	O	O	X	X	O	O	X	X	X	X	X	X	O	O	O	X
	순천시	X	X	O	O	O	X	X	O	O	X	O	X	X	X	X	O	O	X	X
	나주시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X	X
	광양시	X	X	O	O	O	O	X	O	O	X	O	O	X	X	X	O	O	X	X
	담양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O	O
	곡성군	X	X	O	O	O	X	X	X	O	X	X	O	-	X	X	X	O	X	X
	구례군	X	X	O	X	O	X	X	O	O	X	O	X	-	X	X	O	O	O	O
	고흥군	X	X	O	O	O	X	X	X	O	X	X	X	X	X	X	O	O	X	X
	보성군	X	X	O	O	O	X	X	X	O	X	X	X	X	X	X	O	O	O	X
	화순군	X	X	X	O	O	O	X	O	O	X	X	O	-	X	X	X	O	X	X
	장흥군	X	X	O	O	O	X	X	X	O	X	X	O	X	X	X	O	O	O	X
	강진군	X	X	X	O	O	X	X	X	O	X	O	O	X	X	X	O	O	X	X
	해남군	X	X	O	O	O	X	X	X	O	X	O	X	X	X	X	O	O	X	X
	영암군	X	X	O	O	O	X	X	X	O	X	O	O	-	X	X	O	O	O	X
	무안군	X	X	O	O	O	X	X	X	O	X	O	O	X	X	X	O	O	X	X
	함평군	X	O	X	O	O	X	X	X	O	X	O	O	X	X	X	O	O	X	X
	영광군	X	X	X	O	O	X	O	X	O	X	O	O	X	X	X	X	O	O	X
	장성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X	X
	완도군	X	X	O	O	O	X	X	X	O	X	O	X	X	X	X	O	O	O	X
	진도군	X	X	O	O	O	X	O	X	O	X	X	X	X	X	X	O	O	O	X
	신안군	X	X	O	X	O	X	O	X	O	X	X	X	X	X	X	O	O	O	O

구분		복지부		여가부			지경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방통위		다부처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산림청	기타 ⁴⁷⁾			
		복지		복지			주거	주거		응급		응급		응급	정보통신		복지	주거	주거		
		노인	영유아	청소년	다문화가족		난방	상수도	하수도	경찰 서비스	도난 방지	응급서 비스	소방서 비스	도난 방지	초고속망		아동 ⁴⁸⁾	난방 ⁴⁹⁾	마을공동시설		
주1회 이상 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읍면별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 시설 시군 1개 이상	시군당 1개소 이상	방문 서비스 제공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50% 이상	면·지·역 상수도 보급 75% 이상	하수도 보급 71% 이상	10분내 현장 도착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30분내 응급 현장 도착	5분내 도착 55% 이상	항공구 CCTV 설치	초고 속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 구축률 80%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초등 교실 운영	신재생 에너지 등 저감 정책 추진	공동 시설 운영 비 지원	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 상 북 도	포항시	X	X	O	O	O	O	X	X	O	O	X	X	O	X	X	X	O	O	X	X
	경주시	X	X	O	O	O	X	X	O	O	X	X	X	X	X	X	O	O	O	X	
	김천시	X	X	O	O	O	X	X	X	O	X	X	X	-	X	X	X	O	O	O	
	안동시	X	X	O	O	O	X	X	O	O	X	X	X	-	X	X	O	O	O	X	
	구미시	X	X	O	O	O	X	X	O	O	X	O	X	-	X	X	O	O	O	X	
	영주시	X	X	O	O	O	X	X	O	O	X	X	X	-	X	X	O	O	X	X	
	영천시	X	X	O	O	O	X	X	X	O	X	X	X	-	X	X	X	O	X	X	
	상주시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X	O	X	X	
	문경시	X	X	O	O	O	X	X	O	O	X	O	X	-	X	X	X	O	O	X	
	경산시	X	X	O	O	O	O	O	O	O	X	X	O	-	X	X	O	O	O	X	
	군위군	X	X	O	O	O	X	X	X	O	X	X	X	-	X	X	X	O	X	X	
	의성군	X	X	O	O	O	X	X	X	O	X	X	X	-	X	X	X	O	X	X	
	청송군	X	X	X	O	O	X	X	X	O	X	O	X	-	X	X	O	O	O	X	
	영양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X	X	
	영덕군	X	X	O	O	O	X	O	X	O	X	X	X	X	X	X	X	O	X	X	
	청도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X	O	O	X	
	고령군	X	X	X	O	O	X	O	X	O	X	O	O	-	X	X	O	O	O	X	
	성주군	X	X	X	O	O	X	X	X	O	X	O	O	-	X	X	X	O	X	X	
	칠곡군	X	X	O	O	O	O	X	X	O	X	O	X	-	X	X	O	O	X	X	
	예천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X	O	X	X	
	봉화군	X	X	O	O	O	X	X	X	O	X	X	X	-	X	X	O	O	O	O	
	울진군	X	X	O	O	O	X	X	X	O	X	X	O	X	X	X	O	O	X	X	
	울릉군	X	X	O	O	O	X	X	X	O	X	X	O	X	X	X	O	O	X	X	
경 상 남 도	창원시	X	X	O	O	O	O	X	O	O	X	O	X	-	X	X	O	O	X	X	
	진주시	X	X	O	O	O	X	O	O	O	X	X	X	-	X	X	O	O	O	O	
	통영시	X	X	O	O	O	X	O	O	O	X	X	X	X	X	X	O	O	X	X	
	사천시	X	X	O	O	O	O	O	O	O	X	O	X	X	X	X	O	O	X	X	
	김해시	X	O	O	O	O	O	O	O	O	X	X	X	-	X	X	O	O	X	X	
	밀양시	X	X	O	O	O	X	X	O	O	X	O	X	-	X	X	O	O	X	X	
	거제시	X	X	O	O	O	-	O	O	O	X	O	X	X	X	X	O	O	X	X	
	양산시	X	X	O	O	O	O	X	O	O	X	O	X	-	X	X	O	O	X	X	
	의령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O	O	
함안군	X	X	O	O	O	X	O	X	O	X	O	X	-	X	X	O	O	X	O		

구분	복지부		여가부				지경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방통위		다부처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산림청	기타 ⁴⁷⁾		
	복지		복지				주거	주거	응급		응급	응급	정보통신	복지	주거	주거				
	노인	영유아	청소년	다문화가족		난방	상수도	하수도	경찰 서비스	도난 방지	응급서 비스	소방서 비스	도난 방지	초고속망		아동 ⁴⁸⁾	난방 ⁴⁹⁾	마을공동시설		
주1회 이상 제가노인 복지 서비스	읍면별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청소년 활동진흥 시설 시군 1개 이상	시군당 1개소 이상	방문 서비스 제공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50% 이상	면지역 상수도 보급75% 이상	하수도 보급71% 이상	10분내 현장 도착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30분내 응급 현장 도착	5분내 도착 55% 이상	항포구 CCTV 설치	초고속 망 구축률 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등학교 실 운영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저감정책추진	공동 시설 운영비 지원	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제주도	창녕군	X	X	O	O	O	X	O	X	O	X	O	X	-	X	X	O	O	X	X
	고성군	X	X	O	O	O	X	X	X	O	X	X	X	X	X	X	O	O	O	O
	남해군	X	X	X	O	O	X	X	X	O	X	O	X	X	X	X	O	O	O	O
	하동군	X	X	O	O	O	X	X	X	O	X	O	X	X	X	X	O	O	O	X
	산청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X	X
	함양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X	X
	거창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O	O
	합천군	X	X	O	O	O	X	X	X	O	X	O	X	-	X	X	O	O	O	X
제주시	X	O	O	O	O	X	O	O	O	X	O	O	X	X	X	O	O	O	X	
서귀포시	X	O	O	O	O	X	O	O	O	X	O	O	X	X	X	O	O	O	X	
종합	0/138	21/138	127/139	131/139	138/139	33/136	28/139	51/139	139/139	0/138	95/139	59/139	0/48	0/139	3/139	119/139	139/139	51/138	20/138	

주 1) 'O'는 해당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했음을 의미하고, 'X'는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또한 '-'는 해당하지 않거나,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2) 다음과 같은 5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계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47)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의 확충,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음.

48) 아동 복지시설 관련 사업으로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시설 지원 사업, 교과부의 초등돌봄교실 사업 등이 있음.

49)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지경부의 그린홈100만호 사업과 산림청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등이 있음.

부록 5.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사업	기관	예산(백만 원)		비고
					'11	'12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환경부	5,600	12,000	시행계획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식품부	1,000	1,500	시행계획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80,000	80,000	시행계획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	지경부	62,000	62,000	-
			그린 홈 100만호 사업	지경부	89,000	98,500	-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환경부	5,000	-	시행계획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가축분뇨 에너지화)	환경부	96,187	95,910	시행계획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환경부	5,000	7,275	시행계획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산림청	10,360	9,212	시행계획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산림청	1,629	940	시행계획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	-	-	-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환경부	316,000	342,437	시행계획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246,548	246,737	시행계획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환경부	117,908	136,403	시행계획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환경부	3,390	3,186	시행계획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토부	62,055	62,734	시행계획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사업	기관	예산(백만 원)		비고
					'11	'12	
		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 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 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 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국토부	14,351	14,744	시행계획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국토부	16,362	16,830	시행계획
			국고여객선 건조	국토부	1,600	1,600	시행계획
	인도 (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한다.	-	-	-	-	-
교육	유치원·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학교통폐합 재정 인센티브	교과부	75,900	121,400	-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학교통폐합 재정 인센티브 해서 통합 집행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	-	-	-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교과부	51,486	65,727	시행계획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과부	175,836	287,998	-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	-	-	-
보건 의료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교과부	1,350	-	-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교과부	-	3,000	-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보강지원	복지부	58,931	56,814	시행계획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확대	복지부	63,224	63,446	시행계획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사업	기관	예산(백만 원)		비고
					'11	'12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	-	-	-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4회 이상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복지부	146,996	150,435	-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 확충	여가부	72,444	68,149	-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교과부	194,548	228,783	-
			엄마표온종일 돌봄교실	교과부	25,000	35,000	-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사업 확대	복지부	11,554	13,089	-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복지부	11,679	13,926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복지부	8,944	5,864	시행계획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복지부	9,705	9,705	-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농식품부	-	1,300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여가부	54,051	60,631	시행계획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119구급지원센터	소방청	40	-	-
			노후구급차 교체	소방청	16,800	20,500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19,082	22,122	시행계획
응급	도서·벽지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 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Helio-EMS 구매	소방청	6,000	-	-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해경청	5,940	5,630	-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소방자동차 구매(신규)	소방청	9,830	21,092	-
			소방자동차 구매(교체)	소방청	58,728	75,656	-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사업	기관	예산(백만 원)		비고
					'11	'12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	-	-	-	-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	-	-	-	-
문화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부	18,108	10,281	시행계획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문화부	3,410	2,850	시행계획
	문화시설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부	96,116	85,056	-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문화부	19,889	16,430	-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문화부	4,800	4,800	-
			문화바우처	문화부	347	487	시행계획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부	8,000	9,300	-
			방방곡곡 문화예술 공감	문화부	3,375	3,035	시행계획
			찾아가는 박물관	문화부	84	88	시행계획
정보 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방통위	7,200	6,870	시행계획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	방통위	20,000	12,000	-

부록 6.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등에 대한 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이 국토 내 어디에 거주하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기준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모두 31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는 내용 상 다시 40여개의 세부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각 기준항목과 세부기준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것이어서 개별 농어촌 시·군의 입장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기준일 수 있으며, 또 꼭 필요한 기준항목 또는 세부기준일지라도 지역의 여건 상 각 기준의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하의 조사표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별 기준항목 및 세부기준이 귀 시·군의 입장에서 과연 기준내용이나 목표수준으로서 적합한지, 그리고 향후 2~3년 내에 어느 정도나 달성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2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연구 책임: 김광선 박사 / ☎ 02-3299-4361)

1.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하 조사표는 각 농어촌 시·군(군, 도농통합시)의 기획계장님께서(또는 불가피한 경우 기획업무 직원분께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분야별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총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별 시·군 현장 적합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중요도

- ☞ **[현장 적합성]**: 현재 귀 시·군의 여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이 귀 시·군에서 달성해야할 목표로서 적절한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
- ☞ **[달성 가능성]**: 귀 시·군의 관련 시책이나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을 2014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
- ☞ **[중요도]**: 귀 시·군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나 공공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의미

1. 주거 부문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평가 (①~⑩점 중 해당 점수에 √표 해 주십시오)

[현상 적합성]		기준 항목	세부기준	[달성 가능성]	
우리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				우리 시·군에서 2014년까지 해당 기준항목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주택	가.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을 90% 이상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난방	나.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마을 공동 시설	라. 마을별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마. 마을별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상수도	바.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하수도	아.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1: “다.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은 귀 시·군의 전면적인 시책추진 여부로 판단. “라와 마. 마을회관·경로당”은 모든 행정리에 대한 100% 달성을 기준으로 판단. “사. 수질관리” 역시 100% 시행 여부로 판단.

주2: [달성 가능성]에서 ‘이미 달성한 세부기준’일 경우는 ‘매우 높음’(⑩점)과 마찬가지로 표시.(이하 동일)

3. 교육 부문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평가 (①~⑩점 중 해당 점수에 √표 해 주십시오)

[현장 적합성]	기준 항목	세부기준	[달성 가능성]
우리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			우리 시·군에서 2014년까지 해당 기준항목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가.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육성 나. 적정규모화(통폐합된 학교에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고등학교	다.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고등학교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폐교	라.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방과후 학교	마.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 70% 이상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의견수렴	바.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평생교육	사.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1개 이상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1. 위 교육 부문의 기준 항목 (1)~(6) 각각에 대해 중요도를 아래의 점수 란에 비교해 주십시오.

[교육 부문 중요도 비교 응답]

←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4. 보건의료 부문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평가 (①~⑩점 중 해당 점수에 √표 해 주십시오)

[현장 적합성]	기준 항목	세부기준	[달성 가능성]
우리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			우리 시·군에서 2014년까지 해당 기준항목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진료 서비스	가.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 (1차 진료)가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순회 방문	나. 모든 오지마을에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이 순회방문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의약품 구입	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 가 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 “나.의 오지마을”이란 대중교통이 1일 3회 미만(0~2회) 운행되는 마을과 시·군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오백지 마을 또는 낙후마을로 규정하고 있는 마을(행정리)을 의미.

4.1. 위 보건의료 부문의 기준 항목 (1)~(3) 각각에 대해 중요도를 아래의 점수 란에 비교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 부문 중요도 비교 응답]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5. 복지 부문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평가 (①~⑩점 중 해당 점수에 √표 해 주십시오)

[현장 적합성]	기준 항목	세부기준	[달성 가능성]
우리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			우리 시·군에서 2014년까지 해당 기준항목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노인	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 험,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서비 스 등 재가서비스를 주 1회 이상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청소년	나.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 (청소년 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 등)에 도달 가 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아동	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 읍 면별 지역아동정보센터, 방과후학교시설, 초등 돌봄시설 등)에 도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영유아	라. 일정한 수요가 있는(5세 이하 영유아 최 소 3명 이상)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 가 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다문화 가족	마.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도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바.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 “자동차로 30분 내 도달 가능”은 시·군별로 해당 서비스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자동차로 20분 내 도
달 가능”은 읍·면별로 해당 서비스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의미.

7. 문화 부문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평가 (①~⑩점 중 해당 점수에 √표 해 주십시오)

[현장 적합성]	기준 항목	세부기준	[달성 가능성]
우리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			우리 시·군에서 2014년까지 해당 기준항목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독서	가. 읍·면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이 설치·운영되어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이동도서관 등 대안적인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다. 자동차로 30분 내(읍, 각 시 군 내)에 문화시설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라. 해당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마. 해당 문화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 문공연프로그램 관람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바.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2회 이상의 문화프로그램 향유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1. 위 문화 부문의 기준 항목 (1)~(3) 각각에 대해 중요도를 아래의 점수 란에 비교해 주십시오.

[문화 부문 중요도 비교 응답]

←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8. 정보통신 부문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평가 (①~⑩점 중 해당 점수에 √표 해 주십시오)

[현장 적합성]	기준 항목	세부기준	[달성 가능성]
우리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			우리 시·군에서 2014년까지 해당 기준항목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초고속망	라.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된 마을의 비율 100%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마.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한 마을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1. 위 정보통신 부문의 기준 항목 (1)에 대해 중요도를 아래의 점수 란에 비교해 주십시오.

[정보통신 부문 중요도 비교 응답]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II.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선정

※ 아래 <표>를 참고하여 9번과 10번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	부문별 서비스기준 항목
(1) 주거 부문	① 주택, ② 난방, ③ 마을공동시설, ④ 상수도, ⑤ 하수도
(2) 교통 부문	⑥ 대중교통, ⑦ 여객선, ⑧ 인도(人道)
(3) 교육 부문	⑨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적정규모 통폐합), ⑩ 고등학교(우수고교), ⑪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⑫ 방과 후 학교, ⑬ 교육발전위원회(의견수렴), ⑭ 평생교육
(4) 보건의료 부문	⑮ 진료서비스, ⑯ 순회방문, ⑰ 의약품구입
(5) 복지 부문	⑱ 노인(재가서비스), ⑲ 청소년(청소년센터), ⑳ 아동(방과 후 돌봄시설), ㉑ 영유아(보육시설), ㉒ 다문화가족(센터 및 방문서비스)
(6) 응급 부문	㉓ 응급서비스(구급차), ㉔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㉕ 소방서비스, ㉖ 도난방지(CCTV), ㉗ 경찰서비스
(7) 문화 부문	㉘ 독서(읍·면별 도서관 설치 및 대출서비스), ㉙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㉚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8) 정보통신 부문	㉛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9. 귀 시·군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위 <표>의 ①~㉚에 해당하는 '부문별 서비스기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는 10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십시오.

▶ 해당 10개 항목의 번호: _____

10. 귀 시·군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위 <표>의 (1)~(8)에 해당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의 중요성을 아래의 점수 란에 비교해 주십시오. 점수별로 부문이 중복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1. 귀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상의 조사 내용에 나타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기준 항목 및 세부기준) 외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아래 빈칸에 최대 3개까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추가 필요 서비스기준 (1):

▶ 추가 필요 서비스기준 (2):

▶ 추가 필요 서비스기준 (2):

Ⅲ.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실태

12. 귀 시·군 행정조직 내 공무원들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관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표시)

☞ 개별 시·군별 응답 결과는 제시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① 대부분의 공무원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무엇인지 거의 모르고 있다.
 ② 대부분의 공무원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정도만 알고 있다.
 ③ 업무 관련 공무원들 정도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다.
 ④ 대부분의 공무원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13. 귀 시·군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또는 이행을 위해 별도의 인력이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표시)

-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다.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계'가 있다.(계의 명칭: _____ 계)
 ③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과'가 있다.(과의 명칭: _____ 과)
 ④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TF나 팀, 통합조직 등 특별조직'이 있다.
 (해당 조직 명칭: _____)

⑤ 해당 없음

⑥ 기타(구체적으로:

)

14.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인 2010년도와 비교할 때 시행 이후인 2011년 또는 2012년 귀 시·군의 사업예산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인 예를 아래 표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사업(사업명)	사업추진 연도 (2011, 2012, 2011~12 등으로 기재)	사업추진 관련 예산 변화 (신설, 2010년 대비 몇% 증액 등으로 기재)
(1)		
(2)		
(3)		
(4)		
(5)		
(6)		
(7)		
(8)		
(9)		
(10)		

☞ 이 외에도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같은 양식(표)으로 별도 작성하여 응답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 귀 시·군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조직, 인력, 업무의 양, 제도적 결함, 관련 계획 등과의 중복, 지역실정 등등 다양한 의견을 조금 자세하게)

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록 7.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 이에 따라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어촌 주민들, 특히 전국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부문, 교통 부문, 교육 부문, 보건의료 부문, 복지 부문, 문화여가 부문, 응급 부문, 정보통신 부문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담당자: 김광선 박 사 / ☎ 02-3299-4361

윤병석 연구원 / ☎ 02-3299-4175

본 설문조사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동봉하여 8월 28일(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반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음과 같이 선생님의 개략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동 개인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설문조사 분석 시 지역이나 연령, 성별 등의 구분에 따른 분석에만 사용됩니다.

(1) 실제 거주지	()시·도, ()시·군, ()읍·면·동
(2) 전화번호	(3) 성별(√표) ① 남 ② 여
(4) 연령	만 () 세 (5) 학력(√표)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6) 귀농·귀촌 여부(√표)	① 귀농·귀촌 가구이다 ② 아니다 (7) 주 작목(√표)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기업:) ⑧ 비농가

1.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2가지 내에서
√표)

- ① 없음(만족함) ② 지붕 ③ 화장실 ④ 부엌
⑤ 목욕시설 ⑥ 난방시설 ⑦ 외벽 ⑧ 주택구조에 의한 위험요소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현재 귀택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시는 보일러나 시설은 무엇입니까?(√표)

- ① 도시가스보일러 ② 연탄보일러 ③ 기름보일러 ④ 화목보일러
⑤ 기름·화목 겸용보일러 ⑥ 목재펠릿보일러 ⑦ 전기보일러
⑧ 태양열보일러 ⑨ 채래식 아궁이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난방을 위해 향후 어떤 보일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표)

- ① 도시가스보일러 ② 연탄보일러 ③ 기름보일러 ④ 화목보일러
⑤ 기름·화목 겸용보일러 ⑥ 목재펠릿보일러 ⑦ 전기보일러
⑧ 태양열보일러 ⑨ 채래식 아궁이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귀택의 연간(1년) 난방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연간 _____ 원)

5. 선생님의 거주지역의 경우 난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겨울철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총 난방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_____ 월부터 _____ 월까지) / (총 _____ 원)

6. 현재 귀택에서는 먹는 물을 얻기 위해 어떤 시설을 가장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까?(√표)

- ① 광역상수도 ② 지방상수도 ③ 마을상수도 ④ 관정(지하수, 우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1. 위 '6번'에서 선택하신 먹는 물의 수질이나 안전과 관련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표)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한 편이다 ③ 불안한 편이다 ④ 매우 불안하다

7.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표)

- ①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② 과속방지턱 추가 ③ 신호등 설치 ④ 인도(보도)설치
⑤ 도로 포장 및 정비 ⑥ 도로표지판 설치·보완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거주하고 계신 마을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불편하신 점은 무엇입니까?(√표)

- ① 대중교통 없음 ② 운행 횟수 부족 ③ 너무 먼 정류장
 ④ 오래된 버스 ⑤ 운행시간 미준수 ⑥ 너무 빨리 끊김
 ⑦ 기타(구체적으로:)

9. 귀택에서 도보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정도입니까?(√표)

- ① 15분 이내 ② 15~30분 ③ 30~45분 ④ 45~60분 ⑤ 1시간 이상

10.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녀 교육 여건 상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점(대상)은 무엇입니까?(√표)

- ① 없음(만족함) ② 학교까지의 거리 ③ 교사의 수
 ④ 교사의 질 및 전문성 ⑤ 사교육 기회 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⑦ 학교버스 운행 ⑧ 교육 시설 및 자재의 노후화 ⑨ 기타(구체적으로:)

11. 살고 계신 읍 또는 면 내에 폐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③~⑭ 중 선택 시에는 복수 선택 가능: √표)

- ① 폐교 없음 ② 미활용 ③ 도서관 ④ 체험 및 도농교류 관련 시설
 ⑤ 운동·스포츠시설 ⑥ 종교시설 ⑦ 보육시설 ⑧ 교육시설
 ⑨ 청소년 등의 수련시설 ⑩ 문화예술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⑪ 마을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⑫ 마을 노인들을 위한 공동시설
 ⑬ 취약계층 수용 복지시설 ⑭ 기타(구체적으로:)

12.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읍 또는 면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폐교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2가지 내에서 √표)

- ① 도서관 ② 체험 및 도농교류 관련 시설 ③ 운동·스포츠시설
 ④ 종교시설 ⑤ 보육시설 ⑥ 교육시설 ⑦ 청소년 등의 수련시설
 ⑧ 문화예술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⑨ 마을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⑩ 마을 노인들을 위한 공동시설 ⑪ 취약계층 수용 복지시설
 ⑫ 기타(구체적으로:)

13. 선생님과 가족들(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어디에 있는 병원을 주로 이용하십니까?(√표)

- ① 거주하는 읍·면 병원 ② 시·군 관내 병원 ③ 인근의 타 시·군 병원
 ④ 대도시 지역 병원

14. 거주하시는 읍·면 내 또는 시·군 관내의 병원 이용 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표)

- ① 없음(만족함) ② 의료기관 부족 ③ 의료인력 부족 ④ 의료인력의 질(전문성)
⑤ 낙후된 의료시설 ⑥ 입원치료의 어려움 ⑦ 기타(구체적으로:)

15.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의료과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가지 내에서 √표)

- ① 내과 ② 외과 ③ 안과 ④ 이비인후과 ⑤ 치과 ⑥ 피부과
⑦ 소아과 ⑧ 산부인과 ⑨ 정형외과 ⑩ 성형외과 ⑪ 정신과
⑫ 가정의학과 ⑬ 한방과 ⑭ 물리치료실 ⑮ 응급실
⑯ 기타(구체적으로:)

16.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가지 내에서 √표)

- ① 영유아·아동 ② 청소년 ③ 노인 ④ 일반 남성 주민
⑤ 일반 여성 주민 ⑥ 다문화가족 ⑦ 장애인 ⑧ 기타(구체적으로:)

17. 정부는 지역의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노인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는 가족 중 해당 제도에 신청을 했거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불만족스러운 점(③~⑩)은 무엇입니까?(√표)

- ① 해당 없음 ② 만족한 편임 ③ 적은 지원금(많은 자부담) ④ 엄격한 지원 조건
⑤ 한정된 지원 대상 ⑥ 까다로운 절차 ⑦ 홍보·안내 및 관련 정보 부족
⑧ 서비스 횟수(빈도) ⑨ 서비스의 질 ⑩ 기타(구체적으로:)

18. 선생님의 마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에 대해 가장 큰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표)

- ① 불만 없음(만족함) ② 구급차 및 응급인력 도착 지연 ③ 전문 인력 부족
④ 전문 응급차량·장비 부족 ⑤ 응급의료센터가 없음(또는 너무 멀)
⑥ 마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일이 없어 모르겠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19. 선생님의 마을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서비스에 대해 가장 큰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표)

- ① 불만 없음(만족함) ② 소방차의 도착 지연 ③ 소방 전문 인력 부족
④ 전문 소방차 및 장비 부족 ⑤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 등의 비치 부족
⑥ 마을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없어 모르겠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20. 최근 1년 동안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마을에 농작물 및 재산에 대한 도난 사고나 대인 범죄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표) ① 있음 ② 없음
21. 선생님께서는 귀하의 마을이 농작물 및 재산에 대한 절도나 대인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나 안전(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표)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한 편이다. ③ 불안한 편이다. ④ 매우 불안하다.
22. 선생님의 마을이 절도나 대인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표)
 ① 마을 내 CCTV 설치 또는 증설 ② 자율 방범대 조직 및 운영
 ③ 가로등 설치 증대 ④ 경찰기관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⑤ 파출소, 치안센터 등의 배치 증가 ⑥ 우범지역 등에 대한 경찰 순찰 증가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3.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표)
 ① 관련 비용지출의 어려움(경제적 문제) ② 가까운 곳에 관련 시설이 없음(너무 멀리 있음)
 ③ 시설이 있어도 장비 부족이나 노후화 ④ 시설이 있어도 프로그램의 질이나 수준이 낮음
 ⑤ 교통 불편으로 문화·여가 활동이 어려움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4. 선생님께서는 여건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문화·여가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표)
 ① 독서 활동 ② 영화 감상 ③ 음악 감상 ④ 공연 및 전시 관람
 ⑤ 스포츠 경기 관람 ⑥ 여행(등산, 낚시 포함)
 ⑦ 운동 및 건강 증진 활동(요가·체조·게이트볼·스포츠 등)
 ⑧ 음악 연주, 미술, 사진촬영, 공예, 요리 등의 창작 활동이나 관련된 학습 활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5. 선생님과 가족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표)
 ① 거의 매일 사용 ② 1주일에 2~3회 사용 ③ 1달에 2~3회 사용
 ④ 매우 드물게 사용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 안함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6. 선생님과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초고속인터넷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표)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필요 없다

아래 <보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시고 질문 27번~29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참고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합니다.

27.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래 <보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별 서비스기준 항목 ①~㉔’** 중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 항목 **5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번, ()번, ()번, ()번, ()번

28.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래 <보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별 서비스기준 항목 ①~㉔’** 중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항목 **5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번, ()번, ()번, ()번, ()번

29.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래 <보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별 서비스기준 항목 ①~㉔’** 중 **향후 가장 중요한(우선 투자해야 할)** 서비스 항목 **5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번, ()번, ()번, ()번, ()번 ※ 28번 응답과 중복 가능

<보기: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	부문별 서비스기준 항목
(1) 주거 부문	① 주택의 질, ② 난방비, ③ 마을공동시설 운영, ④ 상수도 설치, ⑤ 하수도 설치
(2) 교통 부문	⑥ 대중교통 운행, ⑦ 여객선 운임 보조, ⑧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3) 교육 부문	⑨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적정규모화, ⑩ 우수교교 육성, ⑪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⑫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⑬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⑭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보건의료 부문	⑮ (1차)진료 서비스, ⑯ 순회방문 서비스, ⑰ 의약품구입처 운영
(5) 복지 부문	⑱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⑲ 청소년 서비스(청소년센터), ⑳ 아동 서비스(방과 후 돌봄시설), ㉑ 영유아 서비스(보육시설), ㉒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센터 및 방문서비스)
(6) 응급 부문	㉓ 응급서비스(구급차), ㉔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㉕ 소방서비스, ㉖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㉗ 경찰서비스
(7) 문화 부문	㉘ 읍·면별 도서관 설치 및 대출서비스, ㉙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㉚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8) 정보통신 부문	㉛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및 광대역통합망(IPTV) 이용환경 구축

끝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 8. 농촌 주민의 도로 및 대중교통 이용실태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라는 정책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농어촌 도로 및 대중교통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도로 이용의 문제(도로 규모, 도로 구조, 도로 관리, 도로 안전, 도로 표지, 교통 신호 등 관련 문제),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대중교통 형태, 운행 횟수, 요금, 관련시설, 서비스 등), 그리고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등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어촌의 도로 및 대중교통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리서치업체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대행하며, 조사 결과는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설문응답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I. 응답자 가구 기본 사항

sq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주소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1)동지역 ☞ 설문 종료
(2)읍/면지역 ☞ sq2.로

sq2.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지의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시·도 ()시·군 ()읍·면 ()리 / ※ 리(마울) = 행정리

sq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농업/어업/임업/축산업
(2)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주인, 개인택시운전사 등)
(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판매직, 영업직, 운전기사, 서비스업소 종업원, 보험설계사,

간호사 등)

- (4) 기능/숙련공(생산직, 숙련공, 기능공, 선반공, 목공 등)
 (5) 일반 작업직(청소원, 경비, 방범, 배달원, 일용직 등)
 (6) 사무/기술직(차장급 이하 사무직, 엔지니어, 6급 이하 공무원, 직업군인, 평교사 등)
 (7) 경영/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교감 등)
 (8) 전문/자유직(변호사, 의사, 약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
 (9) 전업 주부(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기재 :)

sq3_1. (sq3. (1) 응답자 외) 귀하와 현재 거주하시는 가족 중에 농업이나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sq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자 (2) 여자

sq5.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 만 19세 이상만 응답

sq6. 귀하를 포함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분이십니까?

가족 수: 총 ()명 / ※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

sq6_1.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수

65세 이상 노인	()명
취학 전 아동	()명
초·중·고생	()명

※ 만약 해당자가 없으시면 '0'으로 적어 주십시오.

sq6_2.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수

농업 종사자 수	()명
비농업 종사자 수	()명
무직·학생·영유아 등 비경제활동 가족	()명

※ 만약 해당자가 없으시면 '0'으로 적어 주십시오.

sq6_3.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수

신체장애 가족 수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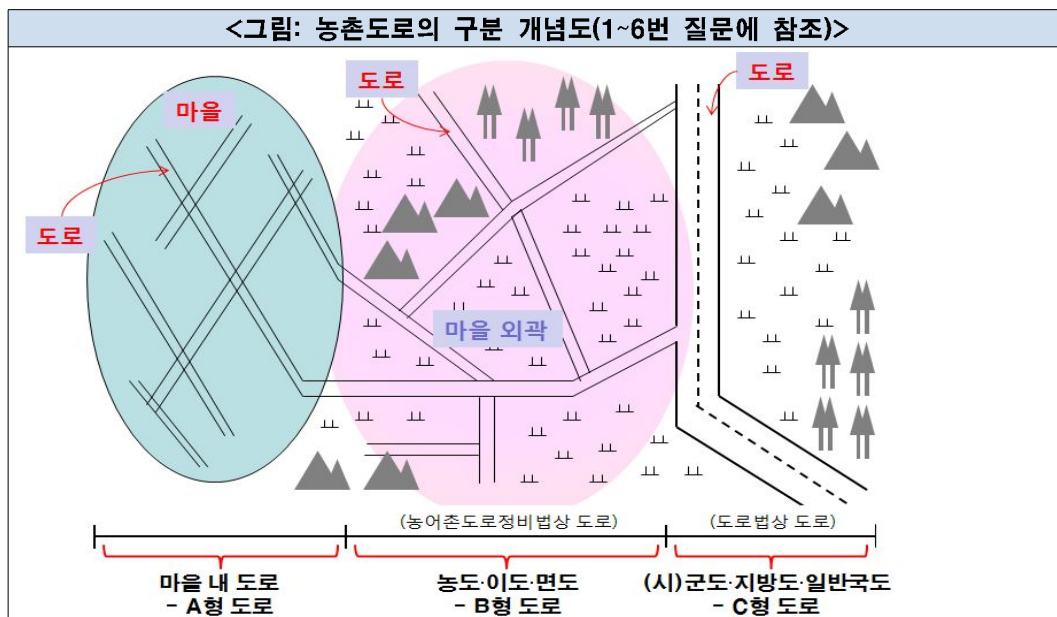
※ 만약 해당자가 없으시면 '0'으로 적어 주십시오.

sq7. 귀택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송 수단을 각각 적어 주십시오.

- (1)승용·승합차()대
 (2)트럭()대
 (3)경운기·트랙터()대
 (4)오토바이·사발이()대
 (5)자전거()대
 (6)기 타(직접 기입:)

II. 도로의 실태와 정책 수요

※ 1~6번은 농촌도로를 '마을 내 도로(A형 도로)', '농도·이도·면도(B형 도로)',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C형 도로)'로 구분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본인과 가족, 마을주민을 고려할 때 거주하시는 **마을 내 도로(그림의 A형 도로)의 이용여건**이 어떠한지 다음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마을 내 도로(A형 도로) 관련 주요 항목	매우 낮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높음 (매우 만족)
(1) 도로의 포장 정도(마을 내부도로의 포장률)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도로 표면 관리 정도(도로 유실 파임 토사유출 강우·강설 시 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 폭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수로·하천 등으로) 차량·사람의 추락 및 빠짐 방지 시설에 난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 시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7)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도로변 주차 공간의 확보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9)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0) 이 외 마을 내 도로와 관련된 주요 항목 (적절 기입:)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거주하시는 **마을 내 도로(그림의 A형 도로)**의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 (2) 도로 폭 확장
 (3) 과속방지턱, 추락방지난간 등 사고방지시설 설치 (4) 마을 안길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5) 별도의 인도(보도) 설치 (6) 마을 내 도로변 주차공간 확보
 (7)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변 볼록거울(반사경) 설치 (8) 기타 ()

3. 귀하께서는 본인과 가족, 마을주민을 고려할 때 거주하시는 마을 외곽의 **농도·이도·면도(그림의 B형 도로)의 이용여건**이 어떠한지 다음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농도·이도·면도(B형 도로) 관련 주요 항목	매우 낮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높음 (매우 만족)
(1) 도로의 포장 정도(도로 포장률)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도로 표면 관리 정도(도로 유실 파임 토사유출, 강우·강설 시 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도로의 폭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수로·하천 등으로) 차량·사람의 추락 및 빠짐 방지 시설(예: 난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 시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7)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오토바이(사발이), 자전거 등의 이동 적합성·안전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9)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안전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0) 두 차량의 안전한 교차통행 가능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1) 차량, 사람 등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전방 시야의 확보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2) 이 외 농도·이도·면도와 관련된 주요 항목 (직접 기입:)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 거주하시는 마을 외곽의 농도·이도·면도(그림의 B형 도로)의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선택하여 ☒ 표 해 주십시오.

- (1)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 (2) 도로 폭 확장
 (3) 과속방지턱, 추락방지난간 등 사고방지시설 설치 (4)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5) 별도의 인도(보도) 설치 (6) 두 차량의 교차통행을 위한 차량 대기 공간
 (7)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 반사경(볼록거울) 설치 (8) 굽은 도로 직선화를 위한 도로정비
 (9) 기타(직접 기입:)

5. 귀하께서는 본인과 가족, 마을주민을 고려할 때 귀하의 마을 외곽에 있는 농도·이도·면도를 벗어나 읍·면 또는 시·군청 소재지로 이어지는 주요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그림의 C형 도로)의 이용여건이 어떤지 다음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시군도 지방도 일반국도(C형 도로) 관련 주요 항목	매우 낮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높음 (매우 만족)
(1) 도로의 포장 정도(도로 포장률)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도로 표면 관리 정도(도로 유실 파임 토사유출 강우·강설 시 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도로의 폭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 (수로·하천 등으로) 차량·사람의 추락 및 빠짐 방지 시설에 난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과속방지턱 등 사고예방 시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7)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도로 횡단의 안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9) 오토바이(사발이), 자전거 등의 이동 적합성·안전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0)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 적합성·안전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1) 버스 등 대중교통 승·하차의 편리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2) 차량, 사람 등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전방 시야의 확보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3) 도로의 신호체계와 도로표지의 적절한 설치·운영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4) 이 외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와 관련된 주요 항목 (직접 기입:)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 또는 시·군청 소재지로 이어지는 주요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 (그림의 C형 도로)**의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선택하여 ☒ 표 해 주십시오.

- | | |
|-------------------------------|------------------------|
| (1)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 | (2) 도로 폭 또는 차선의 확장 |
| (3) 과속방지턱, 추락방지난간 등 사고방지시설 설치 | (4) 주요 부분 가로등 설치 |
| (5) 별도의 인도(보도) 설치 | (6) 건널목 및 신호등 설치 |
| (7)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 반사경(블록거울) 설치 | (8) 굽은 도로 직선화를 위한 도로정비 |
| (9)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승·하차 시설 설치 | (10) 경운기·트랙터 전용차선 설치 |
| (11) 도로 신호체계 및 도로표지 설치 | (12) 기타 (직접 기입:) |

Ⅲ. 대중교통(버스) 이용의 애로점과 정책 수요

※ 본 설문조사에서 버스는 크기에 상관없이 대·중·소형 버스, 미니버스 등을 모두 포함.

7. 귀하와 가족분들, 마을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다음의 몇 가지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대중교통(버스) 이용 관련 항목	평가(10점 만점, 해당 점수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 해주세요)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1) 버스정류장까지 걸리는 시간(거리)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버스 요금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버스 운행 횟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 운행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버스운행 형태와 종류의 다양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7) 버스 등 교통수단의 쾌적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정류장 대기시설의 확충(정류장 이용의 편리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9) 운전기사의 친절(친절한 서비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0) 규정된 버스 운행시간의 준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1) 목적지까지의 연계 대중교통(환승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2) 신체약자(고령자·장애우·영유아 등)의 이용 편리성	
(13) 이 외 시군도·지방도·일반국도와 관련된 주요 항목 (직접 기입:)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귀하와 가족분들, 마을주민들께서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버스) 이용 증대를 위해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문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거리가 너무 먼 버스정류장 (2) 너무 비싼 버스 요금 (3) 버스 운행 횟수의 부족
 (4) 원하는 시간에 없는 버스 (5) 버스 운행시간 정보 부족
 (6) 버스운행 종류·유형의 다양성 부족 (7) 오래된 버스 등 교통수단 낙후
 (8) 정류장 대기시설의 부족 (9) 운전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
 (10)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운행시간 (11) 너무 많이 갈아타는 번거로움
 (12) 환승 시(갈아탈 때) 할인요금 미적용 (13) 연계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
 (14) 신체약자의 이용 불편 (15) 기타 (직접 기입:)

9.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읍·면의 인구, 도로사정 등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마을에서 읍내(읍 면소 재지) 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버스)의 크기**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승용차 규모의 초미니 교통편 (2) 15인승 미니버스 (3) 25인승 소형버스
 (4) 32인승 중형버스 (5) 42인승 이상 대형버스 (6) 기타(직접 기입:)

10.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 분들 모두를 고려할 때 귀 태에서는 다음의 이동 목적별로 대중교통(버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각 **이동 목적별로 대중교통(버스) 이용 빈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교통이동 목적	이용 빈도(해당란에 √ 표)				
	거의 이용 않음	년 2~3회 이용	월 2~3회 이용	주 2~3회 이용	거의 매일 이용
(1) 통근(직장·일터 출퇴근)					
(2) 통학(등교·하교)					
(3) 학원(보습·예체능학원, 기술·직업훈련소 등)					
(4) 쇼핑(물품 구매)					
(5) 병원 방문(약국 포함)					
(6) 문화·여가·운동 활동					
(7) 친지·친구 방문					
(8) 기타(직접 기입:) □ 없음					

11.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대중교통’은 버스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형태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의미.

- (1) 현행 방식의 버스 노선제도 유지 (2) 대중교통 운행 횟수의 증가
 (3) 대중교통 운행 시간의 연장 (4) 목적지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환승 수단 확대
 (5) 마을까지 들어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6) 기존노선에서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제공
- (7) 마을에서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제공
- (8)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주 가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확보
- (9) 콜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 지원
- (10) 개인 승용차를 마을주민이 공동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재정 지원
- (11) 기타(직접 기입: _____)

12. 끝으로 농촌의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직접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 김광선. 2012. 「농촌 대중교통 및 도로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이규천. 2012.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송미령·김용렬·권인혜·윤병석. 2010.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채중현·윤병석. 20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2009. 「2010-201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 송미령·김광선. 2009. “농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4): 1-18.
-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시현·성주인·김광선·권인혜.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최은영·권순필. 2011.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 통계개발원.
- Deputy Prime Minister and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2000. 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
- Jones P. & N. Natalya. 2009. ‘Link’ and ‘Place’: A New Approach to Street Planning and Design. Road & Transport Research.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4. Planning Policy Statement 7: Sustainable Development in Rural Areas.
- Rural Transport Network(RTN). 2011. Towards Integrated Rural Transport: Achieving More for Less.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